

연구보고서

성남시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7.12.



성남시

일자리

성남시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7.12.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과제명

성남시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책임연구자

손우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현지환(성남청년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신엘라(성남청년회 회장)

☐ 연구기간

2017년 6월 16일 부터 2017년 12월 12일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성남시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2. 연구 방법	5
1) 연구 전략	5
2) 연구 프로세스	5
2장 청년문제의 현황과 과제	10
1. 성남청년의 지역적 특성	10
1) 성남시 현황	10
2) 성남 청년 현황	14
2. 청년 문제의 실태	17
1) 대학	17
2) 고용	21
3) 니트	24
4) 청년 빈곤율	25
5) 청년 부채	27
6) 자살률	34
7) 혼인율, 이혼율	38
8) 문화·예술	40
9) 세대 내 양극화	43
3. 소결	46
3장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평가와 제안	47
1. 지방정부 청년정책 현황	47

2. 지방정부의 각 분야별 청년 정책	51
1) 자치 분야(청년 거버넌스)	51
2) 일자리 분야	56
3) 창업 분야	61
4) 복지 분야	64
5) 주거 분야	72
6) 교육 분야	77
7) 문화 분야	80
3. 소결	85
 4장 성남시 청년정책의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 제언	87
1. 수혜자에서 주체로: 청년 생태계 구축	90
1) 취지와 배경	90
2) 5년 내(2018년~2022년) 목표	91
3) 핵심 정책 과제	91
2.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사회활동 보장	96
1) 취지와 배경	96
2) 5년 내 목표	96
3) 핵심 정책 과제	97
3. 인생을 향유할 권리! 청년다운 삶을 누릴 기회 제공	102
1) 취지와 배경	102
2) 5년 내 목표	102
3) 핵심 정책 과제	103
 5장 요약과 결론	108
1. 연구 요약	108
2. 시기별 과제	110
3. 향후 과제	112
 참고한 글	113
부록: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119

〈표 순서〉

<표 1-1>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2017.09 현재)	2
<표 1-2> FGI 참가자	6
<표 1-3> 개별 면접 진행대상	9
<표 2-1> 최근 5년간 성남시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12
<표 2-2> 경기도 시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12
<표 2-3> 성남시 청년인구 현황과 성비	14
<표 2-4> 성남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1990~2015)	16
<표 2-5> 학력별 초기경력자의 자발적 직장 유지 비율	20
<표 2-6> 학력별 초기경력자의 월평균 임금	20
<표 2-7> OECD 상대적 빈곤율 국제 비교(2014년)	27
<표 2-8> 지역별 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2014~2015)	28
<표 2-9> 대졸자 연령별 평균 부채금액 추이	29
<표 2-10>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	30
<표 2-11>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31
<표 2-12>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32
<표 2-13> OECD 국가별·연령별 자살률(상위 10개국)	35
<표 2-14> 사립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40
<표 2-15> 국립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40
<표 2-16>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43
<표 2-17>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44
<표 2-18> 상대적 빈곤율	45
<표 3-1> 라운드 테이블 투표 결과	49
<표 3-2> 지방정부의 자치 분야 청년 정책	51
<표 3-3> 전국 주요 청년센터 운영현황	54
<표 3-4> 지방정부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57
<표 3-5> 지방정부의 창업 분야 청년 정책	61
<표 3-6> 지방정부의 복지 분야 청년 정책	65
<표 3-7>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	68
<표 3-8> 지방정부의 주거 분야 청년정책	72

<표 3-9> SU 지자체의 청년 1인 가구 정책	74
<표 3-10> 지방정부의 교육 분야 청년정책	77
<표 3-11> 지방정부의 문화 분야 청년정책	81
<표 3-12> 청년정책의 대강	85
<표 4-1>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발의 현황	98
<표 5-1> 3대 전략과 11개 과제 로드맵	111

〈그림 순서〉

<그림 1-1> 지자체 청년 정책 평가 프로세스	5
<그림 1-2> '최고의 정책을 찾아라' 라운드 테이블	8
<그림 2-1> 성남시 연령별 인구	11
<그림 2-2> 성남시 예산규모 추이	13
<그림 2-3> 2017년 성남시 일반회계예산액(세출)	13
<그림 2-4> 성남시 청년 인구 현황과 성비	14
<그림 2-5> 서울, 경기, 성남 청년층 순인구이동 추이(1995~2016)	15
<그림 2-6> 성남시 각 구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	16
<그림 2-7> 대학진학률, 대학생 수, 20~24세 인구수 변화 추이(1980~2016)	17
<그림 2-8>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추이(1991~2016)	18
<그림 2-9> OECD 청년 고용률(2015년)	21
<그림 2-10> OECD 청년 고용률 추이(2007~2015)	22
<그림 2-1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6)	22
<그림 2-12> 한국 전체 고용률, 20대 고용률 비교 추이(2000~2016)	23
<그림 2-13> OECD NEETs 비교(2007, 2015)	24
<그림 2-14>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 추이(20~30대)	25
<그림 2-15> 연간 학자금 대출건수, 대출액 추이(2011~2015)	27

<그림 2-16> 연령별 평균 신용등급 추이	30
<그림 2-17> 청년층(가구주)과 전체가구의 실거주비 추이(2007~2015)	32
<그림 2-18> 30대 가구주 금융부채 추이(2010~2015)	33
<그림 2-19> 연령대별 금융거래 특성 변화	34
<그림 2-20> OECD 사회복지 지출	36
<그림 2-21> 경기도 각 시별 자살률	36
<그림 2-22> 성남시 각 구별 자살률(10만 명당)	37
<그림 2-23> 자살충동 이유(2016년. 2~30대)	37
<그림 2-24> 한국 초혼연령(1990~2016)	38
<그림 2-25> OECD 국가 조혼인율, 조이혼율(2014년 기준)	39
<그림 2-26> 전체, 서울시, 경기도 조혼인율, 조이혼율 비교(2014년)	39
<그림 2-27> 지난 1년간 문화예술청년들의 수입	41
<그림 2-28> 4대 보험 가입 형태(공적 연금)	41
<그림 2-29> 한국인의 여가 활용(2017년)	42
<그림 2-30>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2004.08~2017.08)	44
<그림 2-31>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한 비율	45
<그림 3-1> 각 분야별 정책 수	48
<그림 3-2> 전체 정책 평가평균과 성남시 정책 평가평균 비교	48
<그림 3-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응답 결과	70
<그림 4-1>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88
<그림 4-2>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94
<그림 5-1> 성남시 청년정책의 3대 원칙, 3대 전략, 12개 과제	109

〈요약문〉

한국 청년 문제는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청년 문제는 국립대가 선도한 등록금 인상 문제에 집중되었으나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부모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질 첫 세대', '사회적 재생산이 가로막힌 세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관적 전망이 압도한 청년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주로 청년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현재 총 14개 광역단체와 48개 기초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성남시 역시 2017년 9월 20일 '성남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5년 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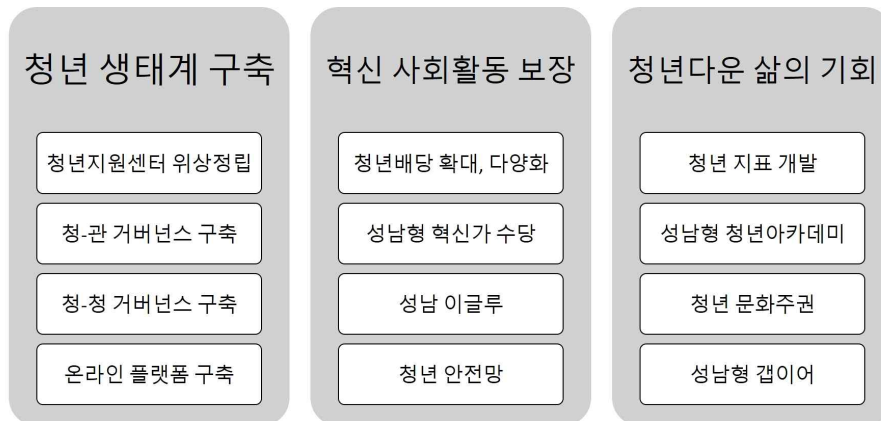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년 주도적 연구', '청년 주도의 심의적 정책평가', '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구성'이라는 세 가지 연구전략을 수립하고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197개를 수집·분류했다. 이후 총 20명의 FGI, 성남청년 51명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심의·평가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런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진은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고립된 개별적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간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성남시가 추진할 청년정책의 3대 원칙과 3대 전략, 그리고 12개의 핵심과제와 시기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청년 정책의 3대 원칙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민주성의 원칙, 청년 정책의 결과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청년정책의 대상은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청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연대성의 원칙으로 상

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청년 생태계 구축과 혁신적인 사회활동 보장, 청년다운 삶의 기회 제공이라는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우선 청년 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년과 행정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과 행정 간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간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청년 간 오프라인 소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전략인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남시 청년정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 후, 배당의 대상을 현행 24세에서 29세, 34세 등 5년 단위로 확대하고, 차후에는 각각의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라 자율선택이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혁신가 수당은 성남시 내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사회 공공적 성격이 큰 혁신활동을 펼치는 청년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혁신가 수당을 지급하는 과제와 공동 주거만이 아니라 작업장과 전시·공연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공유 공간 프로젝트인 가칭 '성남

이글루' 정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인권 감시와 주거 지원, 건강권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전략인 '청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남시 청년의 정확한 실태와 니즈를 파악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남 청년 지수·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지표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청년 정책의 질과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청년의 문화 접근권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공연의 청년 할인제, 문화 창조 프로그램, 공유형 문화공간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 문화주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동안 청년들의 안식년 역할을 했던 해외 연수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컸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남시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성남형 갭이어 정책인 '어너더 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 6개월, 장기 1개월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해당 지역에서의 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가능하다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주제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3대 원칙,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청년 생태계, 혁신 사회활동, 청년다운 삶의 기회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한국의 청년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대학 등록금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의제화되기 시작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동결 위주의 등록금 정책은 국립대를 필두로 본격 인상 국면으로 진입함
 - 등록금 인상은 국립대가 인상을 주도하고 사립대가 뒤따르는 모양새
 - 이런 결과는 1995년 소위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 결과임
 - 여기에 중앙일보 등을 필두로 진행된 ‘대학평가’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지표로 인해 등록금 인상 동기가 강화되고 이는 다시 대학 간 무한경쟁구도와 맞물리면서 약 10년 간 대학등록금 인상기가 시작됨
- 그러나 높은 등록금 인상에도 청년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부모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첫 세대’로서의 청년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 장기 실업과 저임금은 청년 세대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청년 간 스펙경쟁이 강화되면서 대학진학률과 고등교육에서의 사교육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취업은 되지 않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존재

- 이런 결과로 인해 청년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어 왔음
 -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청년 고용 정책 마련
 - 교육부 대학평가 시 등록금 인상 억제 지표 삽입, 등록금 대출 정책 개발 등
-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청년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후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갖춘 청년기본조례가 광역·기초단체에서 제정되고 있음
 - 2017년 9월 말 현재, 총 14개 광역단체, 48개 기초단체가 청년기본조례 제정
 - 시군구 중 청년기본조례를 처음 제정한 곳은 청주시

<표 1-1>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2017.09 현재)

구분	지자체 수	청년 기본조례 제정 지자체
광역단체	14개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기초단체	44개	광주시 동구, 대전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서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은평구, 인천시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과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시 동구,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광주광역시 서구, 서울시 강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남도 청양군,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금천구,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북도 충주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동대문구, 충청북도 단양군, 경기도 안산시

* 2017년 9월 말 현재, 총 14개 광역단체, 48개 기초단체가 청년기본조례 제정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청년기본조례는 대체로 청년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5년 단위의 청년 기본 계획 수립,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간 교류·협력과 청년사업 집행을 위한 청년센터의 설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처: 성남시 <청년기본조례(2017.09.20.제정)> 중

○ 청년 간 거버넌스를 위한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조례상에 포함한 사례(광주, 대구, 대전, 전주, 시흥, 안양 등)도 있으나 최근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지원센터만 명시하는 추세임

- 이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청년네트워크의 경우처럼, 조례상 근거를 두지 않는 대신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 당사자의 독자적 영역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글로벌정치연구소, 2017: 83-84).¹⁾

○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 정책은 주로 19세~34세, 또는 19세~39세를 청년세대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의 나이는 대체로 19세~34세, 또는 19세~39세로 되어 있으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청년세대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1) 서울시 청년정책을 설계한 신윤정 전 청년허브 기획실장에 따르면, 청년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청년위원회가 조례상에 있게 되어 시장이 선발권을 갖게 되면 청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른 지자체의 조례상에 존재하는 청년위원회) 역할은 서울의 경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원만 하는 형태죠. 이걸 조례상에 두게 되면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신윤정INT, 20170913)

있음

- 영광군은 45세까지를, 단양, 함평, 해남, 고흥, 보성, 장흥, 곡성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남 강진군의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03. 시행)에서는 청년층을 19세~55세로 규정

- 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이 독립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된 후, 청년정책은 기존의 일자리 대책을 비롯해 주거, 복지, 부채, 교육, 문화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거버넌스를 위한 청년자치분야 정책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음
- 민선 6기를 맞는 성남시에서도 2017년 3월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지원 기본조례제정 등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 마련의 의지를 밝힌 이후, 2017년 9월 20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
- 이에 따라 성남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성남시 청년의 실태와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 정책의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함

2) 연구 목적

- 청년 실태 파악
 - OECD 국가들에 견주어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파악
 - 서울과 경기, 경기도 내 주요 도시 청년 지표와 성남시 청년 지표 비교
- 청년 주도의 지방정부 청년 정책 평가
 -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청년정책 평가
 - 정책 당사자인 청년 주도의 평가 방식 구현
- 성남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마련
 - 청년 주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청년 기본계획에 적용되어야 할 전략적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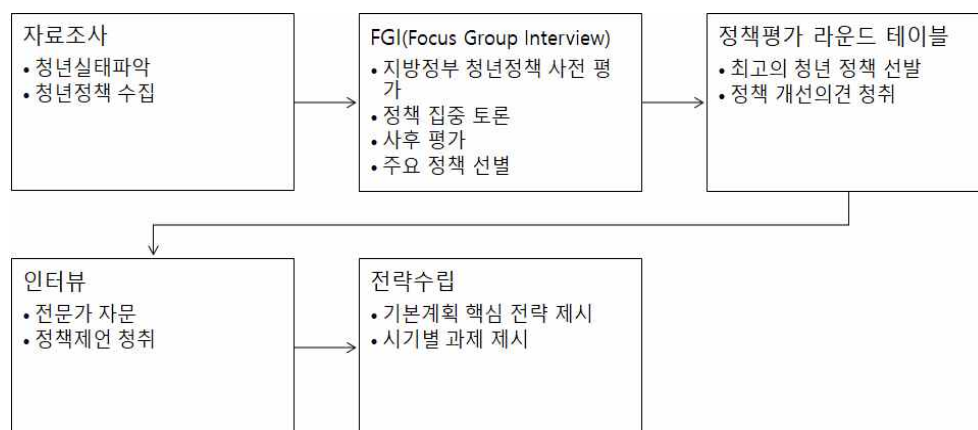
1) 연구 전략

- 청년 주도적 연구 지향
 - 전문 연구자와 청년 당사자(성남청년네트워크) 간 연구 협업
- 청년 주도의 심의(deliberation)적 정책 평가
 - 청년 중심의 정책 평가와 청년 중심의 정책 제언
 - 단순 평가보다 심의가 보장된 FGI와 라운드 테이블 추진
- 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구성
 - 성남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청년 정책 비전 구성

2) 연구 프로세스

- 연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 함

<그림 1-1> 지자체 청년 정책 평가 프로세스



① 자료 조사

○ 청년 실태 파악

- 청년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
- OECD, 통계청 등 온·오프라인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관련 센터 등 홈페이지

○ 지방정부 청년 정책 조사

- 청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서울(24개), 경기(30개), 수원(42개), 광주(64개), 성남(24개)의 청년 정책 184개와 대구(2개), 순천(1개), 전주(3개), 시흥(1개), 인천(2개), 대전(1개), 부산(1개), 경북(1개), 강원(1개)의 특이 정책 13개를 포함 총 197개의 정책
- 각 정책은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위해 코딩 처리

②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표 1-2> FGI 참가자

코드	나이	성별	거주구	직업	비고
F01	24	남	분당구 야탑동	웹개발자	전체분야 정책평가
F02	24	여	분당구 야탑동	구직자	
F03	28	남	분당구 정자동	채무 상담사	
F04	24	여	분당구 정자동	교육 강사	
F05	24	여	분당구 판교동	대학생	
F06	24	여	수정구 중앙동	지역아동센터	
F07	32	남	수정구 태평동	예술인, 아르바이트	
F08	36	남	수정구 태평동	예술인	
F09	26	여	중원구 금광동	아르바이트	
F10	22	여	중원구 도촌동	사회적 기업	
F11	27	여	중원구 중앙동	구직자	
F12	34	여	중원구 하대원동	시민단체	
F13	26	여	분당구 서현동	도예가	문화분야 정책평가
F14	31	여	중원구 금광동	문화기획자	
F15	20	남	중원구 하대원동	영상작가	
F16	35	여	수정구 태평동	공연예술가	

(공)			소속	담당	비고
F17		남	사회복지과	청년정책	공무원 그룹
F18		남	첨단산업과	청년창업	
F19		여	고용노동과	청년일자리	
F20		여	성남문화재단	청년문화	

○ 사전 평가

- 12명의 성남 청년을 대상으로 197개 정책 사전 평가
- 문화예술분야는 청년 문화예술인 4명 추가 진행

○ FGI

- 사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책 분야별 집중 토론
- 토론 결과 후 사전 평가 점수 수정
- 공무원 그룹 별도 진행

○ 주요 청년 정책 선별

- 사후 평가 결과 상위 순위의 정책을 토대로 라운드 테이블 의제 선별

※ <참고> FGI와 대표성 문제

- 일반적으로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의 속성을 5% 이내의 차이로 예측할 수 있으면 그 표본은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따라서 FGI나 라운드 테이블처럼 소수만 참여하는 평가방식의 경우 통계학적인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 그러나 어떤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의 출현율(prevalence)²⁾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매우 작은 표본도 전체 모집단의 견해를 신뢰성 있게 대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다수 청년들이 등록금을 낮추길 원한다면, 등록금 인하에 대한 특정 입장의 출현율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응답도 전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
- 본 평가는 소수 참여자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대표성의 한계를 심의적 방식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음
- FGI를 통해 1차 평가, 정책 심의, 2차 평가 등 3단계의 평가 프로세스로

응답의 출현율을 높이고자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청년 정책 평가는 해당 정책이 다양한 청년에게 수용되는 방식과 청년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정책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님
- 따라서 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대한 청년의 선호나 질적 서열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해야 함

③ 라운드 테이블

○ 최고의 정책을 찾아라!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성남 청년 51명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최고의 청년 정책 선발 이벤트 진행
- 기존 정책에 대한 개선 사항, 새로운 정책 제안 의견 청취

<그림 1-2> '최고의 정책을 찾아라' 라운드 테이블



2) 출현율(prevalence)은 통계용어로, 모집단 중 특정 대상자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0명이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출현율은 10퍼센트임.

④ 개별 면접

○ 전문가 자문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주요 정책 관련 제언 수집

<표 1-3> 개별 면접 진행대상

코드	직책	비고
INT01	전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실장	면접
INT02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	면접
INT03	성남대안포럼공동대표	면접
INT04	문화관련 사회적 기업 대표	면접
INT05	수원 청년센터 매니저	전화 면접
INT06	광주청년센터 팀장	전화 면접
INT07	창원청년비전센터 대리	전화 면접
INT08	무중력시대 G밸리 운영관리 매니저	전화 면접
INT09	무중력시대 대방동 담당	전화 면접
INT10	강동구 청년마루 매니저	전화 면접
INT11	금청 청춘벨-딩 공간매니저	전화 면접
INT12	충북 청년 희망센터 대리	전화 면접
INT13	청주 청년 꿈 제작소 직원	전화 면접

⑤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구성

○ 기본계획 핵심 전략과 과제 수립

- 핵심 전략적 방향
-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시기별 과제

1. 성남청년의 지역적 특성

1) 성남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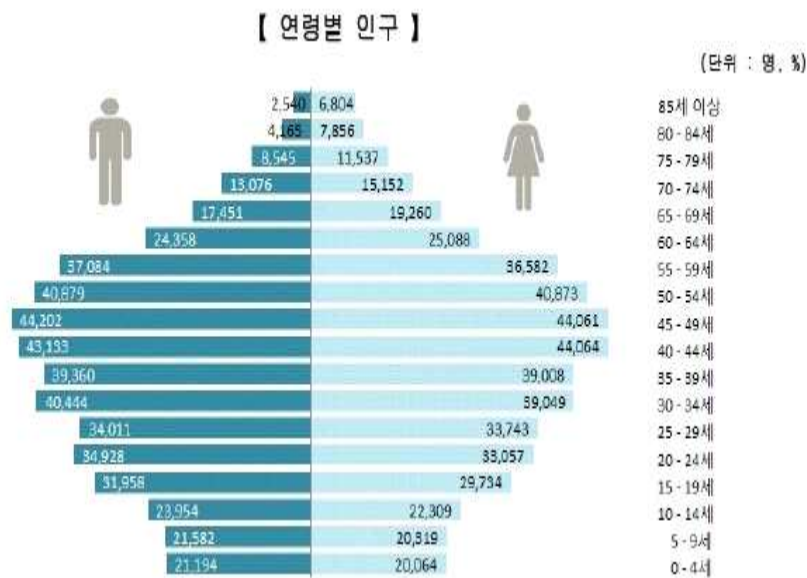
① 일반 현황

- 성남시의 전체 면적은 141.69㎢로, 수정구 45.53㎢, 중원구 26.39㎢, 분당구 69.77㎢
 - 분시가지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효시로 밀집된 주택, 좁은 도시환경 등 1970년대 초기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분당구는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 건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와 고급스러운 판교지역 도시이미지를 지니고 있음
- 농촌 지역이던 분당구에 1990년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성남시 분시가지(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의 교육, 의료, 문화, 삶의 질 등의 차별과 배제가 심화
 - 1980~90년대 정부는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 가격안정, 수도권 기능 분담 등을 목적으로 1989년 분당일대 540만평에 10만5천호의 주택과 도시시설을 갖춘 인구 42만명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
 - 성남시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배후 수요거점, 교통·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와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다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함에 따른 미래도시 발전적 잠재력을 함께 보유
- 2000년 이후 분당구 판교 일대 약 284만평에 인구 8만 8천명 규모의 신도시

조성 및 도촌, 여수, 위례지구, 대장동 지역 등에 대한 도시개발이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본시가지에 대한 재개발과 분당지역 아파트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임

- 2016년도 성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성남시에는 40대 인구가 175,460명
(18.1%)으로 가장 많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12월 기준 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가 넘음
-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순으로 나타났지
만, 거주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높은 곳은 반대로 수정구(12.11%), 중원구(10.92%),
분당구(9.49%) 순으로 나타남(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150~152)

<그림 2-1> 성남시 연령별 인구



*출처: 성남시, 2016. 제7회 성남시 사회조사보고서

② 재정 역량

- 2조 6천억원 규모로 엄청난 성남시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모두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7년 소폭 상승

<표 2-1> 최근 5년간 성남시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정자주도(%)	80.6	77.7	75.4	76.8	76.8
재정자립도(%)	65.2	64.3	61.9	61.9	63.6

- 경기도 중,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76.8%)를 포함하여 과천시, 안산, 화성, 용인, 의왕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61.9%)를 포함하여 안산, 화성, 용인 수원

<표 2-2> 경기도 시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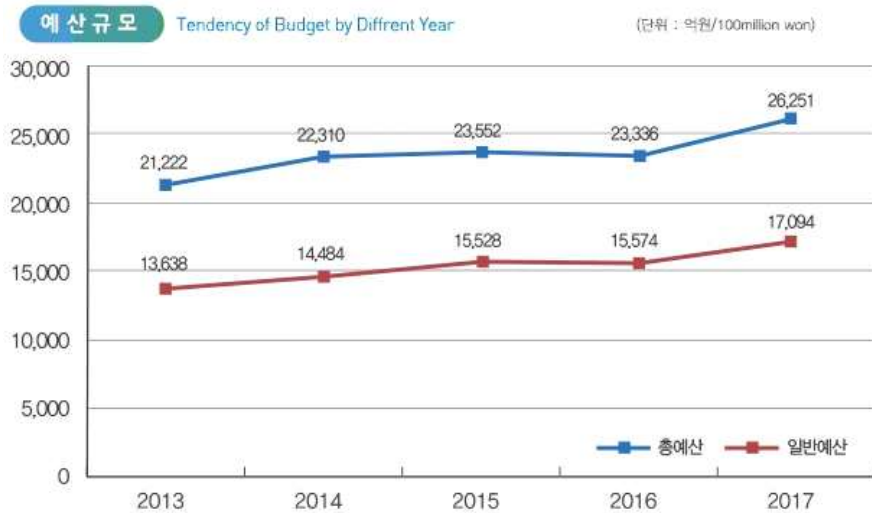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과천시	87.0	안산시	72.2
안산시	82.1	화성시	67.3
화성시	77.3	성남시	63.6
성남시	76.8	용인시	63.4
용인시	75.4	수원시	58.8
의왕시	74.7	과천시	58.1
안양시	72.4	시흥시	55.2
이천시	72.1	고양시	53.8
하남시	72.0	광주시	53.4
시흥시	71.5	하남시	52.7
여주시	71.1	안양시	52.6
군포시	71.0	김포시	51.9
양주시	71.0	의왕시	51.2
광명시	70.5	이천시	51.0
포천시	70.1	오산시	48.8
수원시	69.7	광명시	47.2
구리시	69.2	군포시	47.0
오산시	69.0	평택시	46.1
광주시	68.7	파주시	42.5
안성시	68.0	부천시	42.4
동두천시	67.3	남양주시	39.8
김포시	67.1	구리시	38.7
고양시	65.7	양주시	38.1
평택시	65.3	안성시	36.8
부천시	64.1	여주시	36.7
파주시	64.1	의정부시	34.8
남양주시	62.9	포천시	31.8
의정부시	59.1	동두천시	31.7

*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2017. e-지방지표

- 성남시의 재정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조6,251억원
- 일반회계 1조 7천억 원, 특별회계는 9천 157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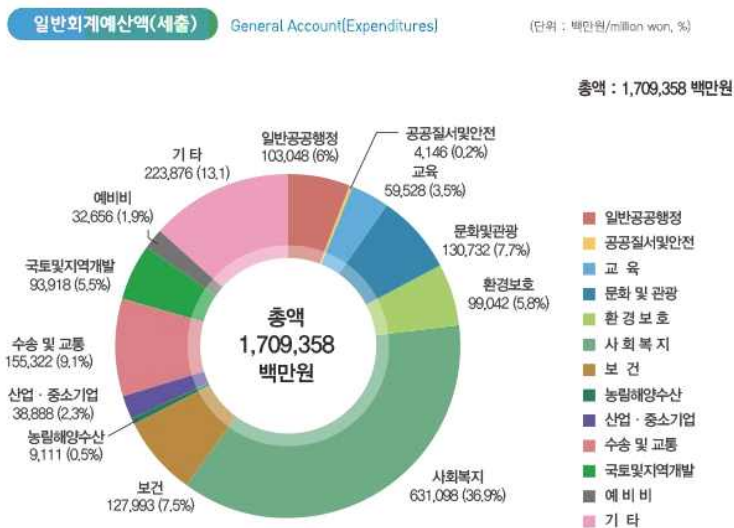
- 성남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4년 이후로 큰 폭의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2017년에는 소폭 상승)

<그림 2-2> 성남시 예산규모 추이



- 2017년 기준, 일반회계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복지 영역의 6천 3백 10억9천8백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36.9%임

<그림 2-3> 2017년 성남시 일반회계예산액(세출)



* 출처: 성남시 통계. 2016. 성남통계-도표로 보는 성남.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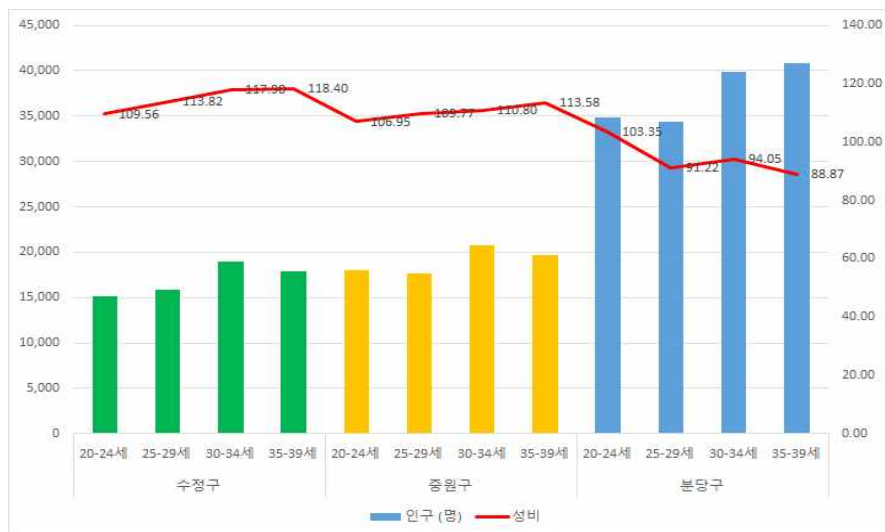
http://stat.seongnam.go.kr/sn_stat/sub11_06.asp

2) 성남 청년 현황

○ 2015년 현재, 성남시 각 구별 청년인구는 분당구가 가장 많음

- 수정구와 중원구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분당구는 여초 현상이 지배적
- 수정구와 중원구는 30대 초반의 청년 인구가 가장 많지만, 분당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음
- 이는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된 분당구의 특성 상,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2-4> 성남시 청년 인구 현황과 성비



<표 2-3> 성남시 청년인구 현황과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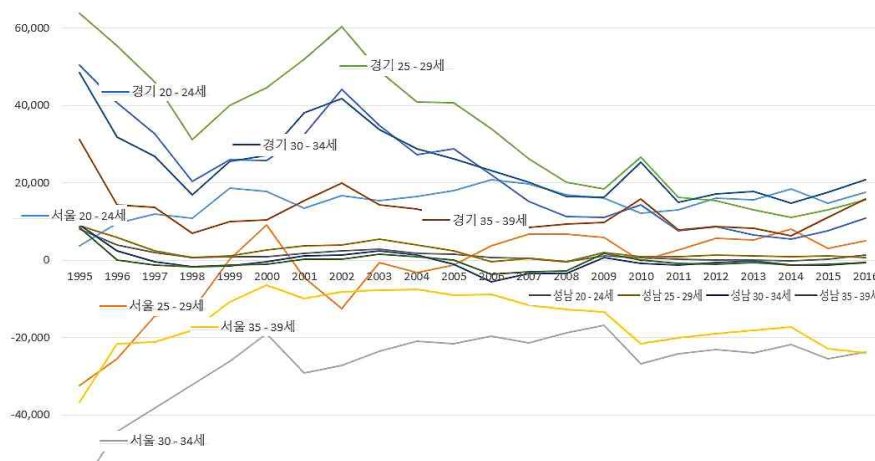
구별	연령별(1)	인구 (명)	-남 (명)	-여 (명)	성비
수정구	20-24세	15,145	7,918	7,227	109.56
	25-29세	15,810	8,416	7,394	113.82
	30-34세	18,914	10,234	8,680	117.90
	35-39세	17,852	9,678	8,174	118.40
중원구	20-24세	18,034	9,320	8,714	106.95
	25-29세	17,627	9,224	8,403	109.77
	30-34세	20,747	10,905	9,842	110.80
	35-39세	19,709	10,481	9,228	113.58
분당구	20-24세	34,806	17,690	17,116	103.35
	25-29세	34,317	16,371	17,946	91.22
	30-34세	39,832	19,305	20,527	94.05
	35-39세	40,807	19,201	21,606	88.87

* 출처: 성남통계(2015년 기준)

** 성비는 여자100명당 남자의 수.

- 지난 20년 간, 서울과 경기, 성남의 청년 층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이동이 크지 않은 편임
 - 서울의 경우, 20대 초반의 인구 유입이 매우 큰 반면, 20대 후반은 인구유입수가 줄어들고 30대로 넘어갈수록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반면, 경기의 경우 20대 초반의 인구유입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청년 연령대 전반에 걸쳐 인구유입이 유지되고 있음
- 이런 결과는 20대 초반,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 졸업과 사회진출이 시작될수록 서울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 20대 후반은 서울지역의 일자리 수요에 맞춰 서울로의 이주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30대에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뚜렷하게 관찰됨
 - 이는 일자리 문제보다 전·월세 난 등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의 효과로 해석됨

<그림 2-5> 서울, 경기, 성남 청년층 순인구이동 추이(1995~2016)



* 출처: 통계적 자료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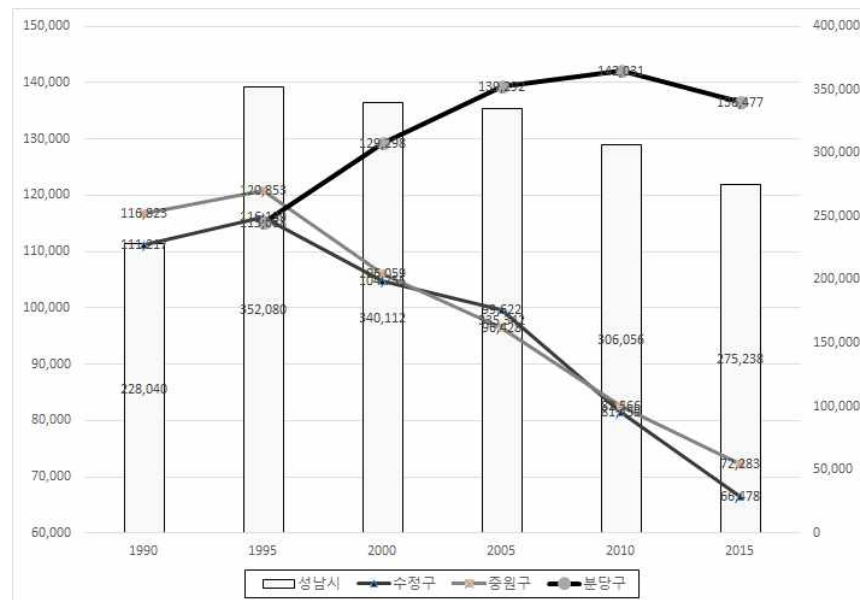
- 성남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유출은 거의 0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1990년대 중반이후 비교적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995년 세 구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청년 인구를 보유했지만, 이후 중원구, 수정구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대신, 분당구의 청년인구가 늘어났음

- 분당구 역시 2015년 기준 청년 인구가 조금 줄었는데, 이는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도와 차별화된 현상임
- 이는 중원구와 수정구의 재개발 효과임

<표 2-4> 성남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1990~2015)

	연령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성남시	20 - 24세	55,949	81,113	74,894	72,282	61,078	61,160
	25 - 29세	66,540	84,500	88,982	80,759	77,315	63,134
	30 - 34세	63,852	92,908	86,658	94,564	80,981	76,271
	35 - 39세	41,699	93,559	89,578	87,737	86,682	74,673
	계	228,040	352,080	340,112	335,342	306,056	275,238
수정구	20 - 24세	27,270	29,290	24,786	22,024	15,619	15,530
	25 - 29세	32,262	31,622	29,546	26,364	22,255	15,373
	30 - 34세	31,094	29,766	26,298	28,306	22,047	18,432
	35 - 39세	20,591	25,461	24,125	22,928	21,538	17,143
	계	111,217	116,139	104,755	99,622	81,459	66,478
중원구	20 - 24세	28,679	27,975	24,644	23,527	17,226	16,829
	25 - 29세	34,278	30,931	27,970	24,215	22,599	16,837
	30 - 34세	32,758	32,937	26,293	25,000	21,134	19,821
	35 - 39세	21,108	29,010	27,152	23,686	21,607	18,796
	계	116,823	120,853	106,059	96,428	82,566	72,283
분당구	20 - 24세	-	23,848	25,464	26,731	28,233	28,801
	25 - 29세	-	21,947	31,466	30,180	32,461	30,924
	30 - 34세	-	30,205	34,067	41,258	37,800	38,018
	35 - 39세	-	39,088	38,301	41,123	43,537	38,734
	계	-	115,088	129,298	139,292	142,031	136,477

<그림 2-6> 성남시 각 구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



* 출처: 통계청 각 자료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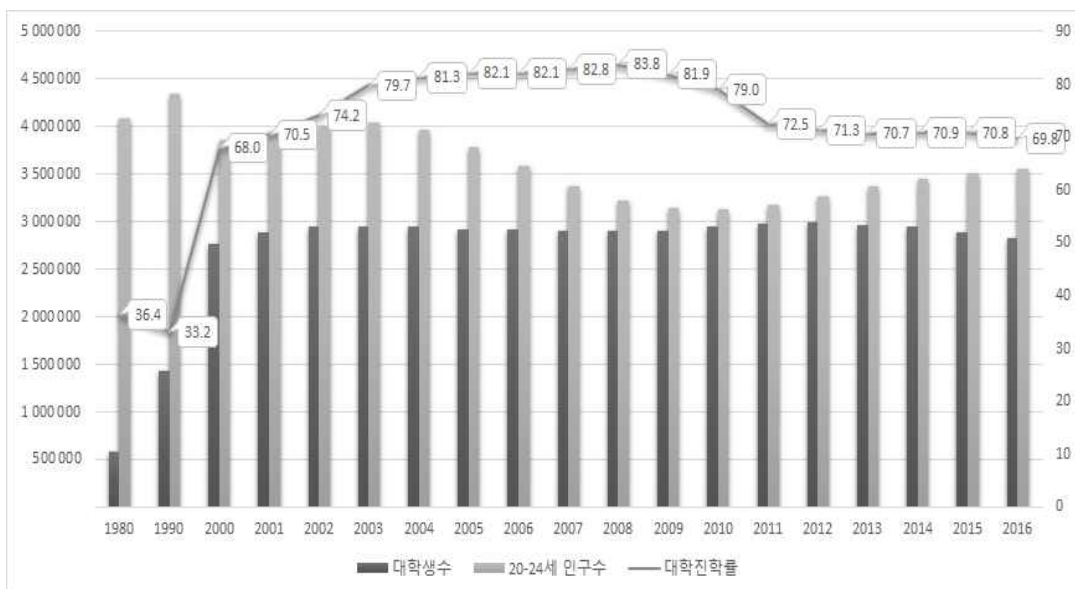
2. 청년 문제의 실태

1) 대학

①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 하락

- 1995년 양적 팽창과 대학 간 경쟁 전략을 중심으로 한 5.31교육개혁안이 수립된 이후(1995년 당시 대학진학률은 전문대 포함 51.4%), 대학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음
 - 김영삼 정부는 대학 간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마음대로 대학을 설립하게 허용
 - 2009년 현재 일반대는 38개교, 전문대학은 19개교, 대학원대학은 37개교가 늘어, 전체 일반대의 18.8%, 전문대학의 13.0%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신설되었음
 - 대학진학률은 2009년 83.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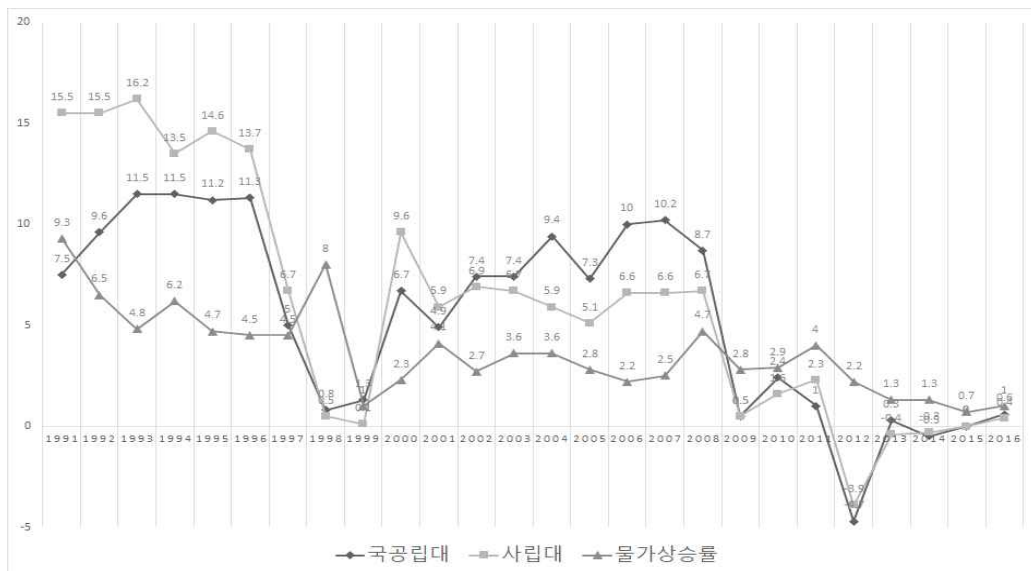
<그림 2-7> 대학진학률, 대학생 수, 20~24세 인구수 변화 추이(1980~2016)



- *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임(교육부 조사지침 변경)
- * 20~24세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인구변동요인별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 임
- * 대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자료 중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합한 수치임(대학원, 기타 항목 제외)

- 대학의 양적 팽창은 청년 취업난 등의 효과와 맞물려 대학 간, 학과 간, 학생 간 서열화를 강화시키고 있음
 - 최근 대학진학률의 경향적 하락 역시 단순한 '대학포기 현상'이 아니라 서열화 된 대학 구조가 심화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6년 대학진학률은 69.8%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전국 최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로 48.8%에 불과함
 - 이는 단지 '대학진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진학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열이 유난이 높은 고소득층 지역 자녀들이 대입에 유리한 재수를 선택해 서열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동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재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
- 그러나 대학진학률의 상승과 함께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격히 늘었음

<그림 2-8>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추이(1991~2016)



* 출처: 각 연도 통계자료 조합

- 대학 등록금은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비율로 증가하다 2012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정

체 상태

- 이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적용했기 때문
- 해당 지수는 등록금 절대수준(40%)보다 등록금 인하율(60%)의 비중을 높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음

○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연체 인원은 2009년 10,770명에서 2014년 42,792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몇몇 선진국과 달리 이자 부담이 높고, 청년 고용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조건에서 청년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됨(김기현 외, 2016a: 195)

○ 교육비의 과잉은 청년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② 보이지 않는 빈곤: 대학 미진학자의 실태

○ 고교 졸업자 10명 중 3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지만,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고졸 취업률 재고에 대한 의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는 대학진학률의 과도한 상승과 2018년 이후 대학정원이 학령인구를 초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의미가 컸음
- 이런 정책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되었고, 교육부는 주요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과 학습 병행’을 제시하고 있음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전문반)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졸자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5년 47.3%로 상승했으나,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됨

- 2013~2015년 고졸 취업대상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0.4%에서 26.4%로 오히려 4% 하락했음
- 취업자 중 4대 보험가입비율도 2013년 67.8%에서 2015년 55.9%로 하락(경향신문, 2016.09.12.)
- 이는 고졸 취업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 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줌

<표 2-5> 학력별 초기경력자의 자발적 직장 유지 비율

(단위: 명, %)

구분	고졸 초기경력자		전문대졸 초기경력자		대졸 초기경력자	
	취업자 수 (명)	자발적 유지비율 (%)	취업자 수 (명)	자발적 유지비율 (%)	취업자 수 (명)	자발적 유지비율 (%)
2010년 3월	182,230	51.1	649,193	70.2	853,124	79.8
2010년 8월	202,058	51.9	686,534	71.6	859,319	79.4
2011년 3월	208,735	50.3	658,934	73.2	869,864	79.4
2011년 8월	187,251	52.1	692,235	74.5	890,191	82.7
2012년 3월	197,587	55.0	673,289	76.4	857,253	83.0
2012년 8월	212,145	57.4	686,485	76.9	842,509	82.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 출처: 최동선 외(2013: 55)에서 재인용.

<표 2-6> 학력별 초기경력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괄호는 표준편차)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비고		비고
2010년 3월	113.4 (41.8)	143.5 (53.0)	126.5	179.1 (80.7)	157.9
2010년 8월	116.6 (42.5)	149.5 (54.9)	128.2	179.0 (77.5)	153.5
2011년 3월	119.5 (57.9)	151.3 (56.3)	126.6	179.9 (66.4)	150.5
2011년 8월	126.0 (51.0)	153.0 (50.5)	121.4	186.6 (74.0)	148.1
2012년 3월	121.5 (52.7)	154.7 (51.3)	127.3	189.2 (78.8)	155.7
2012년 8월	120.8 (45.7)	161.7 (59.4)	133.9	193.4 (73.5)	160.1

* 주: 비고는 고졸 초기경력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환산할 때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 출처: 최동선 외(2013: 4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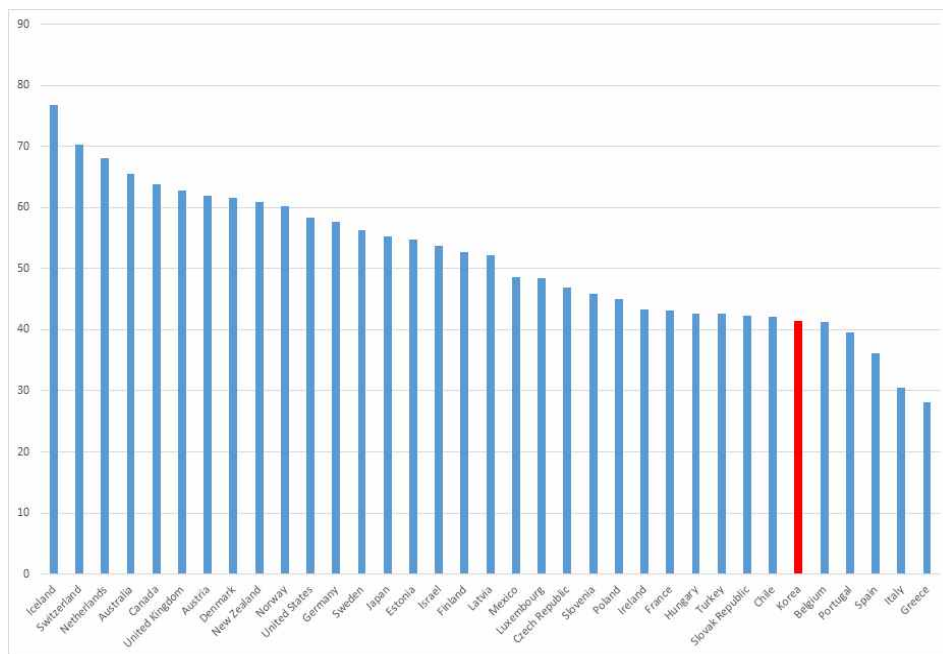
- 조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고졸 취업자의 월 임금은 120.8만원인데 반해, 대졸 취업자의 초봉은 193.4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졸 취업자는 고졸취업자에 비해 133.9%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졸자는 160%에 이릅니다
- 2010년 3월~2012년 8월 기간의 고졸 초기경력자 가운데 현재의 직장 유지 이유를 자발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대졸과 대졸자에 비해 매우 낮음
- 2012년 8월 현재, 고졸 초기경력자들의 자발적 직장유지 인식 비율은 57.4%인 반면, 전문대졸 초기경력자는 76.9%, 대졸 초기경력자는 82.2%임

2) 고용

- OECD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전체 35개 국가 중 30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1위는 아이슬란드로 77%, 최하위는 그리스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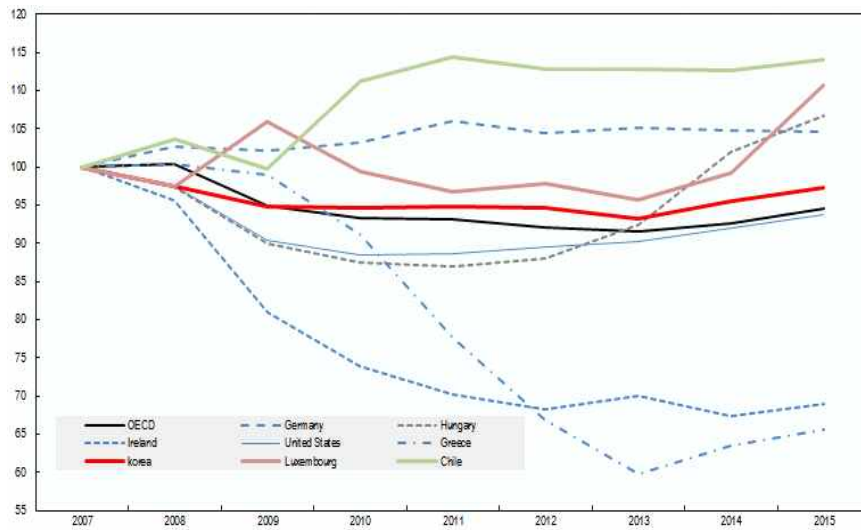
<그림 2-9> OECD 청년 고용률(2015년)



*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A Spotlight on Youth

- 2007년 청년 고용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5년에는 97.3으로 하락
- 세계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 속에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나 2000년 이후 악화된 고용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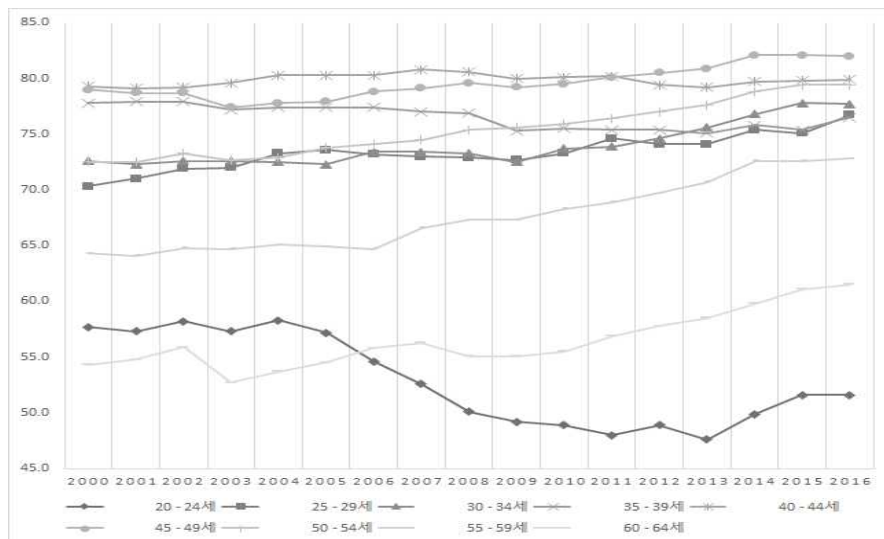
<그림 2-10> OECD 청년 고용률 추이(2007~2015)



*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A Spotlight on Youth

<그림 2-1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6)

(단위: %)



* 출처: 통계청 자료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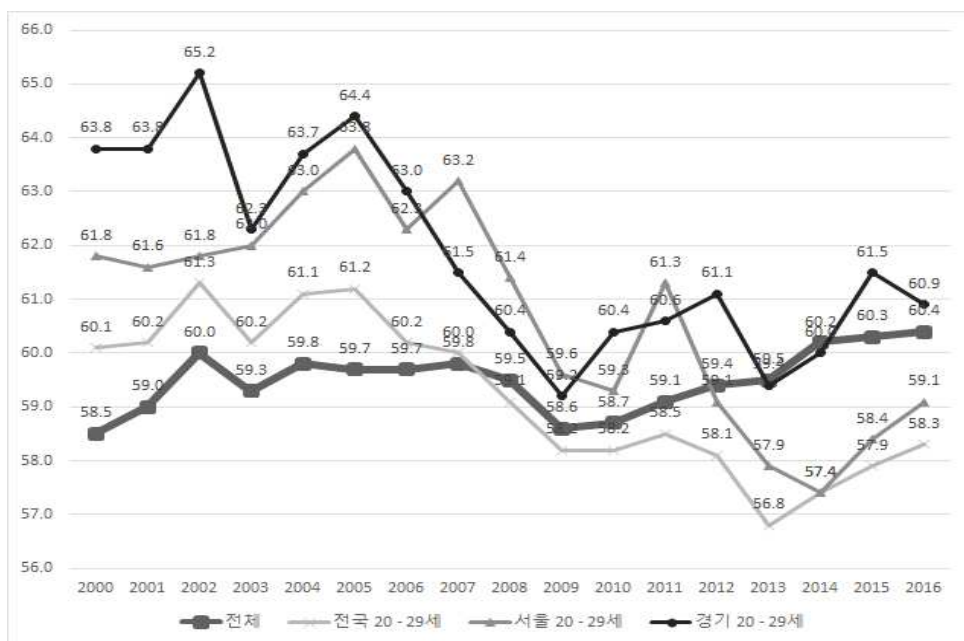
○ 한국 청년 고용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고용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남<그림 2-11>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서 20대 초반은 2006년부터 60대 초반의 참가율을 하회하고 있음
- 40대 초반의 참가율도 2011년을 기점으로 40대 후반에게 역전
-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 20대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을 비교하면 경제활동의 고령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청년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에 비해 통상 높게 나타남
- 구직 의지가 강한 청년층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12> 한국 전체 고용률, 20대 고용률 비교 추이(2000~2016)



* 출처: 통계적 자료 조합

○ 통계청에서 고용률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이런 추이가 지속되다 2008년부터 20대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을 하회하기 시작하여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것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비청년세대의 단순 일자리 양산에 맞춰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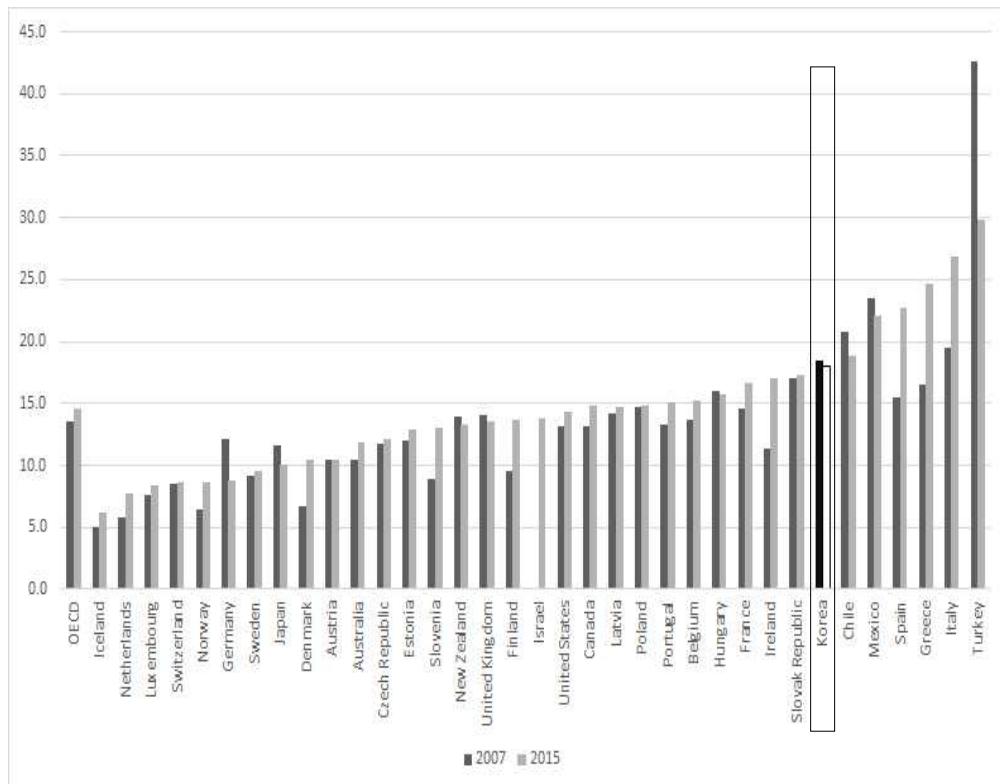
청년 고용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 이런 변화에도 서울지역의 20대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보다 상회했지만 2012년 이후 전체 고용률을 하회하기 시작
- 반면, 경기지역 20대 고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정이 좋은 편

3) 니트

- 청년고용율의 지속적인 악화는 니트족(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 OECD 15~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니트족은 2008년 18.5%에서 2015년 18%로 큰 차이가 없으나 OECD 평균인 14.6%(2015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

<그림 2-13> OECD NEETs 비교(2007,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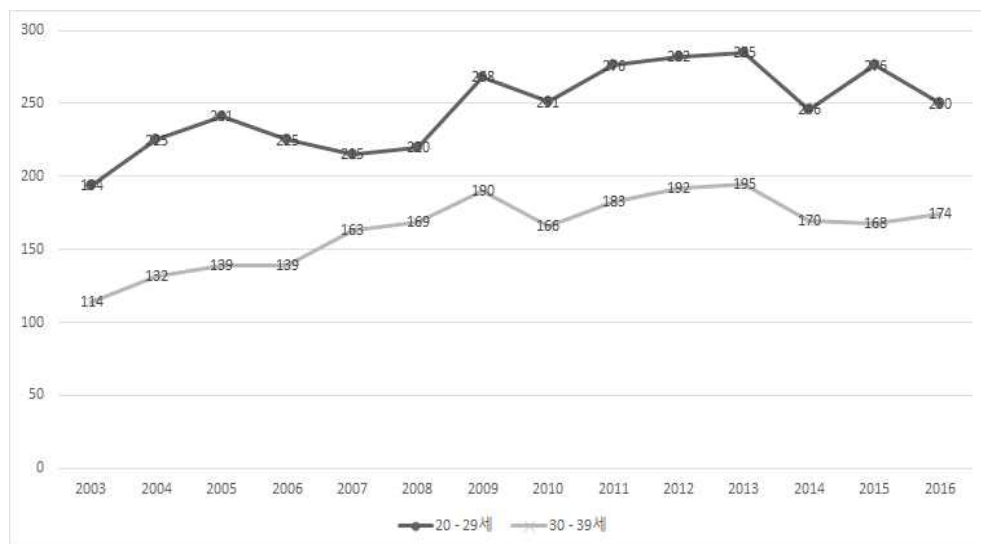


*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A Spotlight on Youth
 * 한국은 2008년, 2015년 조사

-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2015년 기준 99.7%에 이르고, 대학진학률이 2015년 기준 70.8%에 이르는 등 교육기관에 머무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니트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은 편
 - 2014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의 25~35세 청년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한국이 남성 1%, 여성 2%로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 평균은 남성 18%, 여성 15%
-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쉬었음’으로 답한 청년층은 꾸준히 늘고 있음
 - 2003년 20대 19만4천명, 30대 11만4천명이던 ‘쉬었음’응답자는 2016년 각각 25만명, 17만4천명으로 확대

<그림 2-14>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 추이(20~30대)

(단위 천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청년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빈곤선*)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표 2-7> OECD 상대적 빈곤율 국제 비교(2014년)

국가	전체	0~17세	18-25세	26-65세	65세 이상
Israel	18.6	24.3	17.8	13.9	22.6
United States	17.5	20.2	19.9	14.8	21.0
Turkey	17.2	25.3	14.1	12.9	18.9
Chile	16.8	22.5	15.3	14.6	15.0
Mexico	16.7	19.7	12.0	14.4	25.6
Estonia	16.3	14.3	12.8	15.3	23.5
Japan	16.1	16.3	19.7	13.8	19.0
Spain	15.9	23.4	20.1	16.0	5.5
Greece	15.1	18.7	21.5	15.4	8.6
Korea	14.4	7.1	9.0	9.3	48.8
Latvia	14.1	15.4	8.7	13.0	19.6
Portugal	13.6	18.2	17.7	12.6	10.2
Italy	13.3	17.7	16.0	13.0	9.3
Australia	12.8	13.0	8.0	10.6	25.7
Canada	12.6	16.5	17.1	12.0	6.2
Lithuania	12.4	13.9	11.8	11.9	13.1
Poland	10.5	13.4	12.2	10.0	7.4
United Kingdom	10.4	9.9	10.5	9.7	13.5
Hungary	10.1	11.8	11.9	9.6	8.6
Belgium	10.0	12.5	11.1	9.1	9.1
New Zealand	9.9	12.8	10.4	8.9	8.2
Slovenia	9.5	9.8	7.9	8.9	12.2
Germany	9.1	9.8	13.2	8.4	8.5
Austria	9.0	10.2	10.4	8.1	9.7
Ireland	8.9	9.1	16.4	7.9	7.0
Sweden	8.8	8.5	17.0	7.8	7.6
Switzerland	8.6	7.1	7.1	6.2	19.7
Netherlands	8.4	11.2	22.8	6.5	2.2
Luxembourg	8.4	12.4	8.6	7.9	3.6
Slovak Republic	8.4	13.5	8.5	7.8	3.7
France	8.0	11.3	12.6	7.2	3.5
Norway	7.8	6.8	24.4	5.9	4.3
Finland	6.8	3.6	20.6	5.5	6.6
Czech Republic	6.0	10.3	4.9	5.7	3.0
Denmark	5.4	2.7	21.4	3.7	3.8
Iceland	4.6	5.6	6.4	4.1	3.0
OECD	11.4	13.3	13.9	10.0	12.1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한국이 14.4%로, 전체 OECD 국가 중 10위로 매우 높은 편(OECD평균은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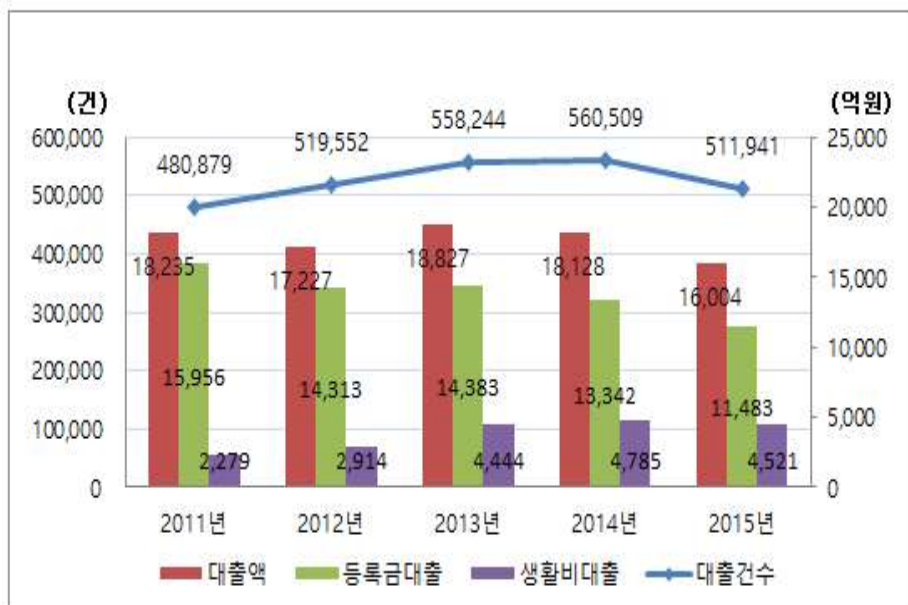
- 그러나 청년(18세~25세) 상대적 빈곤율은 9%로, 30위에 해당
-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8%로, 1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 (OECD평균은 12.1%)
- 이는 한국사회 빈곤문제가 전 세대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말해 주며,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5) 청년 부채

- 청년 세대는 대학생부터 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해 대학 졸업 후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해 채무가 높아지기 시작 함

① 20대: 학자금·생활비로 시작한 빚

<그림 2-15> 연간 학자금 대출건수, 대출액 추이(2011~2015)



* 출처: 대학교육연구소(<http://khei-khei.tistory.com/2033>)

<표 2-8> 지역별 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2014~2015)

지역	2014				2015				2016			
	전문 대 전체	대학			전문 대 전체	대학			전문 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평균	17.42	11.88	5.68	14.41	15.45	10.8	4.87	13.21	12.63	9.21	4.13	11.27
서울	22.16	10.33	2.71	13.04	19.54	9.98	2.71	12.47	15.85	8.86	2.56	10.95
부산	17.11	11.75	7.22	14.23	15.23	10.28	5.96	12.67	11.65	8.19	4.94	10.03
대구	14.48	9.99	7.51	13.24	12.47	8.91	6.23	12.44	9.8	7.65	5.31	10.84
인천	21.29	13.44	11.59	15.07	18.65	11.78	9.65	13.58	14.12	9.56	7.35	11.41
광주	12.61	10.81	6.37	13.38	10.6	9.59	5.42	12.01	8.8	7.61	4.49	9.43
대전	13.87	11.66	6.58	15.08	12.73	10.15	5.49	13.3	10.12	8.14	4.63	10.56
울산	11.77	8.18	6.41	8.55	10.21	7.99	5.84	8.54	7.75	6.86	3.91	7.75
경기	21.65	17.89	7.39	18.21	19.59	16.54	6.05	16.86	16.76	14.5	4.99	14.8
강원	15.87	12.34	8.21	16.08	14.57	10.93	6.91	14.62	11.39	8.92	5.69	11.86
충북	14.37	11.56	6.63	15.85	12.7	9.9	5.14	14.05	10.61	8.31	4.39	11.7
충남	17.29	15.55	7.94	16.9	15.58	13.31	6.75	14.5	12.6	11.24	5.79	12.23
전북	16.37	11.66	6.58	14.81	14.06	10.38	5.81	13.28	11.71	8.76	4.85	11.22
전남	10.84	9.55	6.92	12.67	9.24	8.55	5.56	12.12	7.08	6.92	4.25	10.11
경북	12.79	12.24	5.89	13.08	11.39	10.42	4.44	11.2	8.7	8.68	3.7	9.33
경남	13.66	8.99	6.02	11.5	11.62	7.73	4.89	10.15	9.9	6.36	3.87	8.49
제주	11.51	6.77	6.42	10.77	8.17	5.55	5.07	10.65	5.65	4.31	3.96	7.06
세종	21.67	0	0	0	18.7	0	0	0	14.73	0	0	0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김기현 외(2016a: 55)에서 재인용.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 2011년 이후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대출 건수는

2011년 48만 건에서 2014년 56만 건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51만 건으로 감소

- 연간 대출액은 2011년 1조 8,235억 원에서 2013년 1조 8,82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조 6천억 원으로 감소

○ 반면, 생활비대출은 2011년 2,279억 원에서 2015년 4,521억 원으로 크게 증가

- 2013년부터 생활비 대출한도가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증액된 영향

○ 지역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등록금대출자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표 2-8>)

- 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2014년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2016년 현재 경기지역 전문대와 사립대 등록금대출자 비율은 전국 1위임

○ 2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청년부채는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있음

- 2016년 6월 현재, 20대의 평균 부채금액은 2,203만원
- 그러나 교육비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는 향후 청년층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백종호, 2016)
- 10대와 20대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에도 저소득 고용으로 이어져 신용이 낮아지며, 다시 고금리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악성화 경로가 고착될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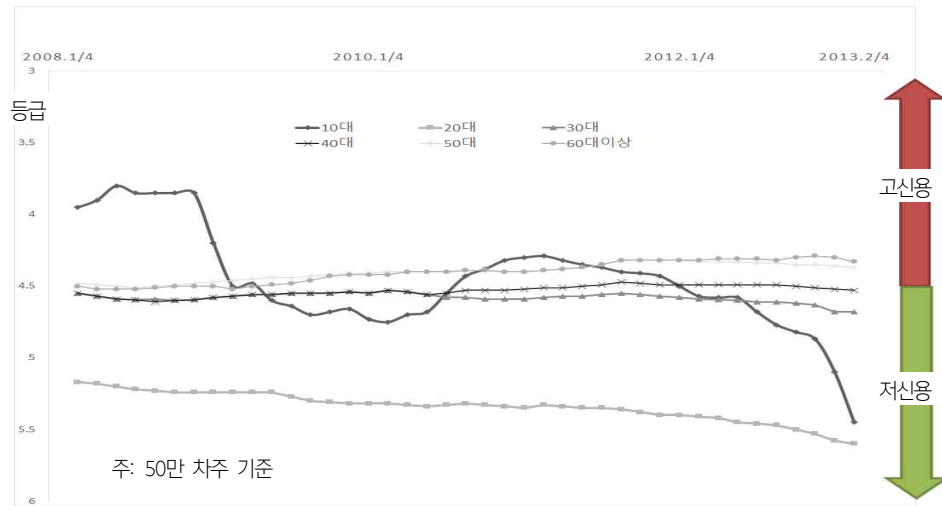
<표 2-9>대출자 연령별 평균 부채금액 추이

(단위: 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6
20대	1,874	1,837	1,946	2,091	2,203
30대	4,967	5,182	5,630	6,319	6,695
40대	6,692	6,934	7,244	7,855	8,204
50대	7,464	7,714	8,042	8,598	8,788
60+	6,708	6,945	7,163	7,640	7,874
전체	5,819	6,052	6,364	6,939	7,206

* 출처: 한국은행. 백종호, 2016: p.4에서 재인용

<그림 2-16> 연령별 평균 신용등급 추이



* 출처: 한국은행, KCB. 백종호, 2016: p.4에서 재인용.

<표 2-10> 대학 관련 학자금 대출 출처

구분	사례 수	한국장학재단	제1금융권 (은행, 농협 등)	부모 또는 친지 직장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사채업 등)	본인 직장	모름/무응답
전체	441	63.3	24.3	10.7	1.0	0.3	0.2	0.2
성별	남자	258	66.8	23.4	8.5	1.1	-	0.1
	여자	183	58.4	25.5	13.8	0.7	0.8	0.4
연령	만15~18세	-	-	-	-	-	-	-
	만19~29세	241	68.9	18.4	12.0	0.4	-	0.3
	만30~39세	200	56.6	31.4	9.2	1.6	0.8	-

* 출처: 김기현 외, 2016b: 52

- 이런 조건에서 청년층의 제 2, 3금융권 이용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상회
 - 지난 4년 간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금 규모는 77.4%(5,497억원→9,752억원)으로 증가
 - 제2금융권 대출기록은 신용등급을 1.5등급 이상 하락시켜 2, 3금융권의 대출이력이 은행대출 장벽으로 작용(백종호, 2016: 5)

- 2016년 6월~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세~39세 일반국민 2,500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경험이 있는 441명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비율은 63.3%였고 제1금융권이 24.3%, 부모 또는 친지 직장이 10.7%, 제2금융권이 1%, 사채 등이 0.3%로 나타났다(<표 2-10>)

② 30대: 주거비 등으로 인한 금융 채무 폭등

-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30대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이는 대부분 주거 부담에서 기인하는 결과임
- 청년층 주택 점유형태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전세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월세의 비율은 10년 동안 2배 상승했음
 - 월세비율의 상승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런 효과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됨

<표 2-11>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연령	연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전국	전체	2000년	54.2	28.2	10.7	2.0	2.2	2.8
		2005년	55.6	22.4	15.1	2.1	1.8	3.1
		2010년	54.2	21.7	18.2	2.0	1.3	2.7
	15-24 세	2000년	7.5	36.1	30.4	9.4	13.2	3.5
		2005년	6.5	23.8	46.6	8.9	10.3	3.8
		2010년	5.6	16.2	59.0	8.2	8.1	2.8
	15-29 세	2000년	14.3	48.0	22.5	4.8	6.2	4.1
		2005년	12.7	33.3	38.3	5.6	5.4	4.6
		2010년	11.6	27.6	48.0	5.0	3.9	3.9
	15-39 세	2000년	32.0	43.7	15.0	2.5	3.1	3.6
		2005년	31.9	34.5	24.1	2.9	2.5	4.1
		2010년	29.5	32.3	30.0	2.6	1.8	3.8

* 출처: 김기현 외, 2016a: 94

○ 청년층의 1인 가구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강조되고 혼인을 하락, 결혼연령 상승 등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
- 1인 가구 비율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년 부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2-12>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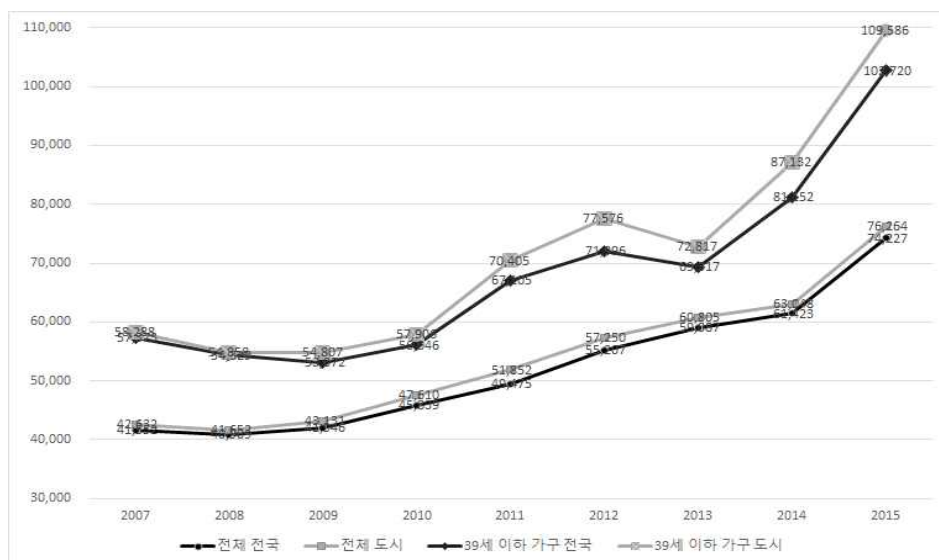
연령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
전체	15.5	20	23.9	27.2
15-24세	56.2	63.9	70.9	80.9
15-29세	39.1	52.1	59.2	69.9
15-39세	18.7	27.2	33.8	41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김기현 외(2016a: 96)에서 재인용.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그림 2-17> 청년층(가구주)과 전체가구의 실거주비 추이(2007~2015)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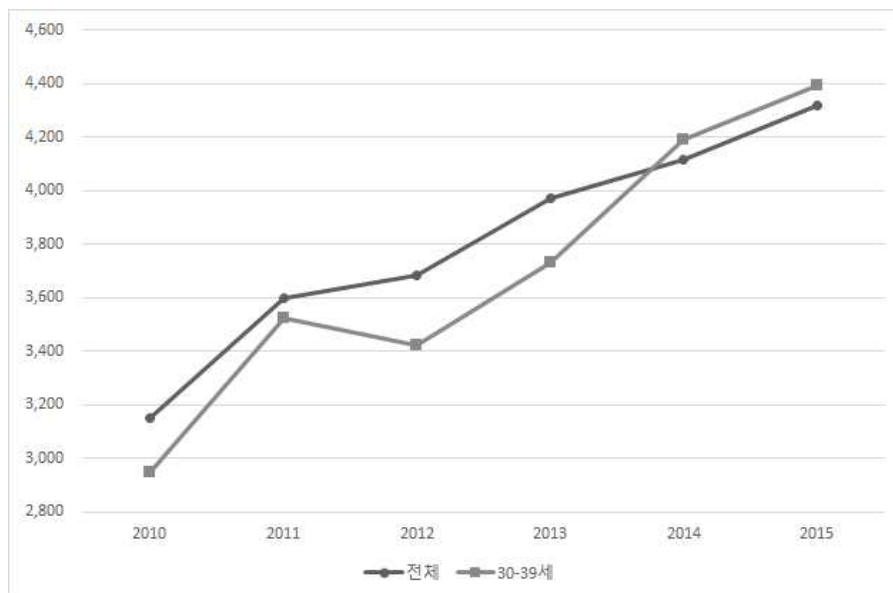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주: 실거주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만을 포함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청년층의 실거주비는 매년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실거주비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그림 2-17>)
 - 이런 격차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추론됨
- 청년 가구주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부채가 매년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후의 금융부채 증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 특히 주거비 등에서 임대보증금의 비율이 낮아지거나 크게 변화가 없는 대신, 월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 결과, 전체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대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초월하고 있음
- 30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체 가구 평균 130%에 근접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30대 청년 전가구 평균 임대보증금은 9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 월세 상승으로 인해 금융부채는 4,393만원으로 상승했음

<그림 2-18> 30대 가구주 금융부채 추이(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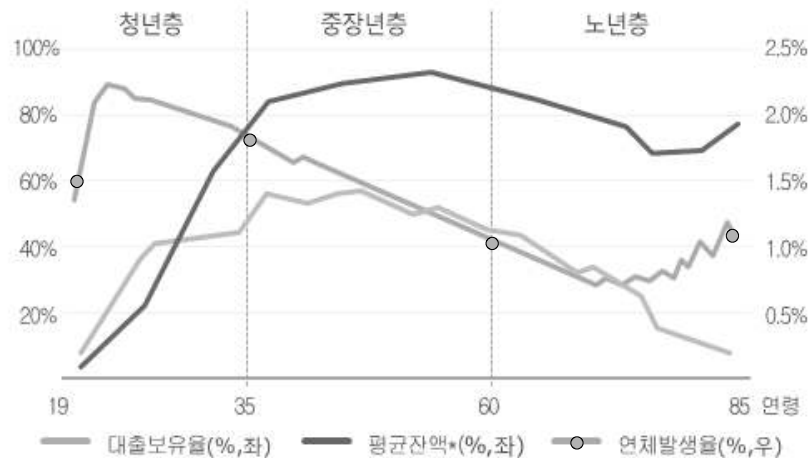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각 년도 자료 조합

- 한국신용정보원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금융업권 대출보유자 1,800만명을 전수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9세~35세)은 연령 증가에 따라 대출보유율과 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연체발생률은 25세까지 증가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 중반까지의 연체발생률은 주로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대출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 됨
- 연체발생률은 19세 1.2%, 25세 2.3%, 35세 1.9%를 기록(전체 평균 1.2%)
- 연체발생률은 학자금 대출 외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25세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자, 보험 미가입자 등이 높음(한국신용정보원, 2016: 8~10).

<그림 2-19> 연령대별 금융거래 특성 변화



*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2016: 9

6) 자살률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한국이 오랫동안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로 OECD 평균 12.5%의 5배
- 청년층의 자살률도 OECD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30대부터 연령별 자살률

또한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2-13> OECD 국가별·연령별 자살률(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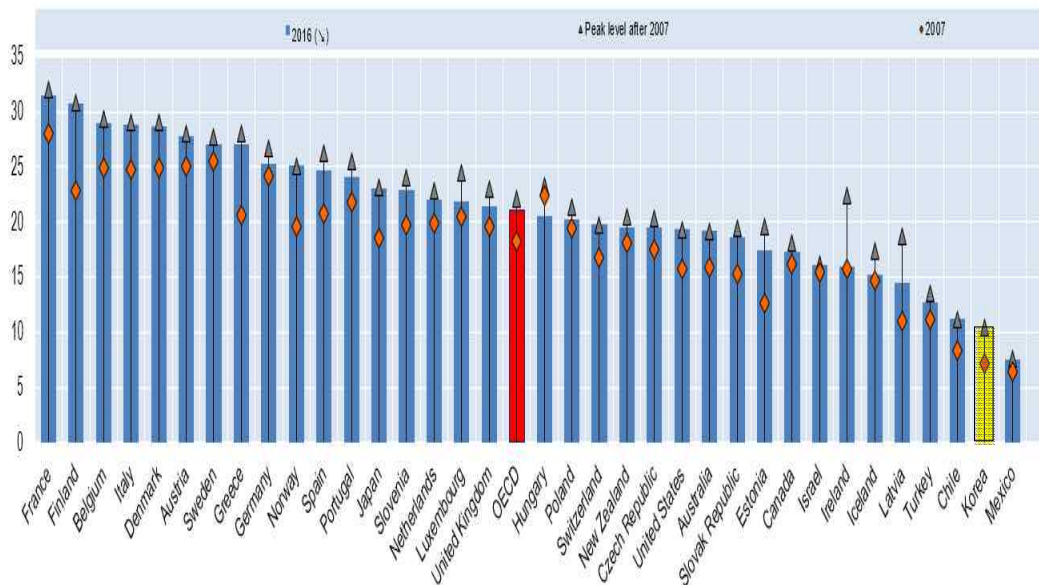
국가	조사 연 도	연령별 자살률															계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 -84	85+	
Korea	2012	8.2	14.9	23.9	28.3	26.5	29.5	32.4	34.7	36.0	39.8	45.8	67.4	81.5	95.3	119.0	28.1
Hungary	2013	4.0	8.0	10.0	11.0	16.8	25.6	36.0	34.2	39.8	32.0	27.8	31.7	35.6	41.4	53.4	21.2
Japan	2013	7.6	20.9	21.4	21.5	22.2	22.8	26.7	29.0	26.8	24.0	25.1	26.2	26.3	25.5	26.8	20.7
Slovenia	2010	9.6	12.4	12.8	11.4	15.4	20.9	26.9	31.7	27.1	37.6	23.7	39.1	33.0	52.3	33.4	20.2
Belgium	2012	7.8	11.2	15.9	17.0	19.4	25.6	27.6	33.1	25.8	22.8	22.2	27.2	24.7	21.8	32.7	18.2
Estonia	2012	4.5	13.7	17.5	17.5	16.3	20.8	17.3	24.6	32.8	14.6	26.8	28.9	34.3	29.8	40.6	17.8
France	2011	4.2	8.5	11.7	12.7	19.0	23.6	26.4	27.7	24.0	21.3	18.7	23.1	28.4	31.6	39.8	16.4
Finland	2013	10.1	19.7	24.7	22.4	16.1	19.9	17.3	22.5	25.5	21.5	16.3	21.3	14.9	15.2	18.2	16.3
Poland	2013	9.0	13.8	13.7	14.2	15.3	21.2	25.0	27.0	30.5	24.1	19.6	18.1	13.7	14.1	16.1	16.1
Austria	2013	5.9	8.5	9.0	8.9	10.6	13.7	19.5	19.0	20.1	17.8	23.0	29.0	38.1	45.9	41.2	15.2
OECD 평균		6.3	10.2	11.2	11.6	13.1	15.2	17.7	18.6	18.8	17.3	15.4	18.1	19.1	21.0	23.9	12.5

* 출처: http://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

- 이런 결과는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사회복지지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회안전망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됨
-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21.3%인데 반해, 한국은 9.3%수준으로 맥

시코(7.7%) 다음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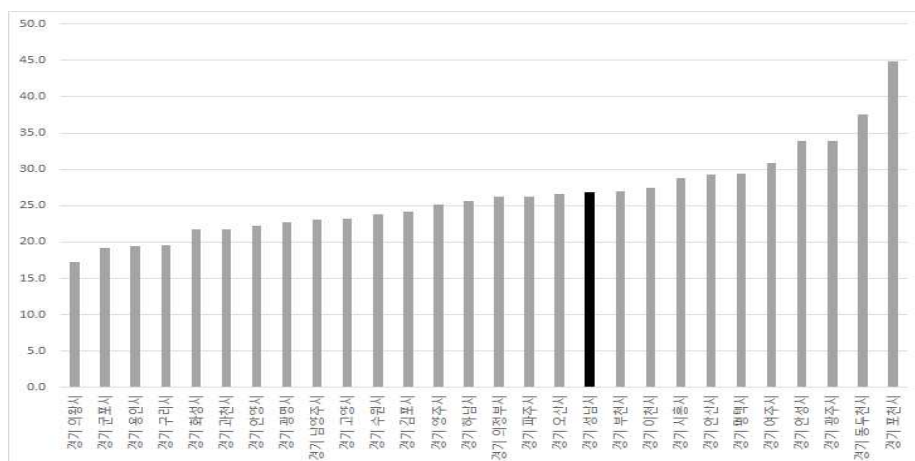
<그림 2-20> OECD 사회복지 지출



* 출처: OECD (201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data, they might be subject to chang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and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② 성남지역 자살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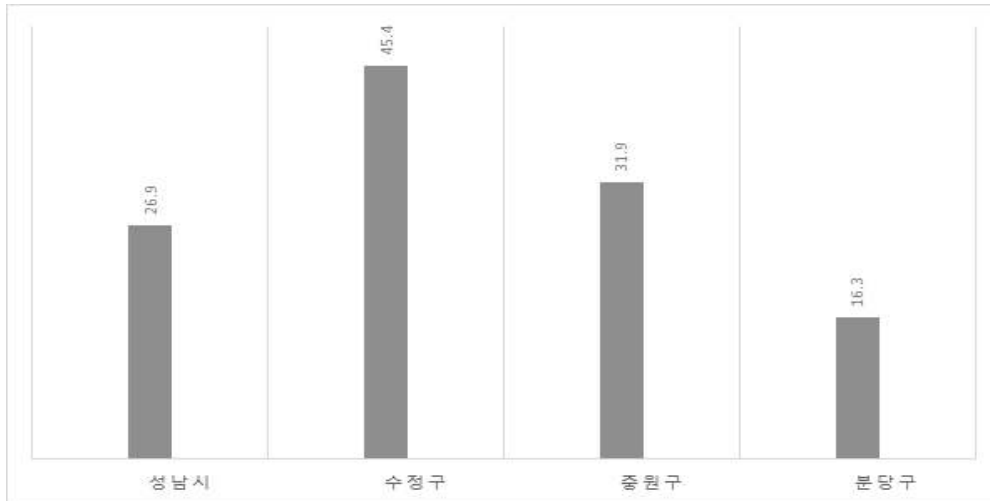
<그림 2-21> 경기도 각 시별 자살률



*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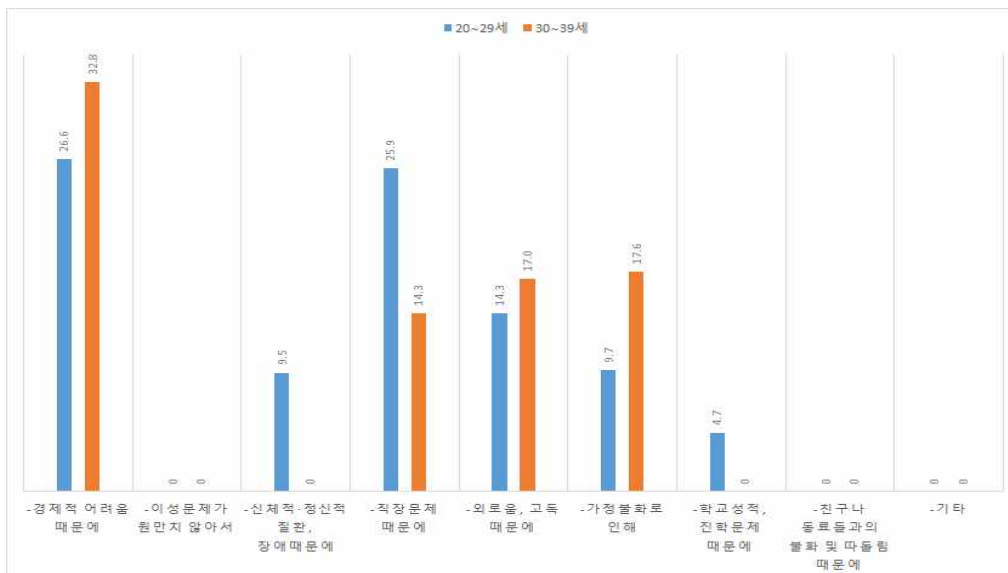
- 성남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경기도에서 11위
- 성남시 자살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수정구가 45.4로 가장 높고, 분당구가 16.3으로 가장 낮음

<그림 2-22> 성남시 각 구별 자살률(10만 명당)



* 출처: 통계청 자료 조합

<그림 2-23> 자살충동 이유(2016년. 2~30대)



*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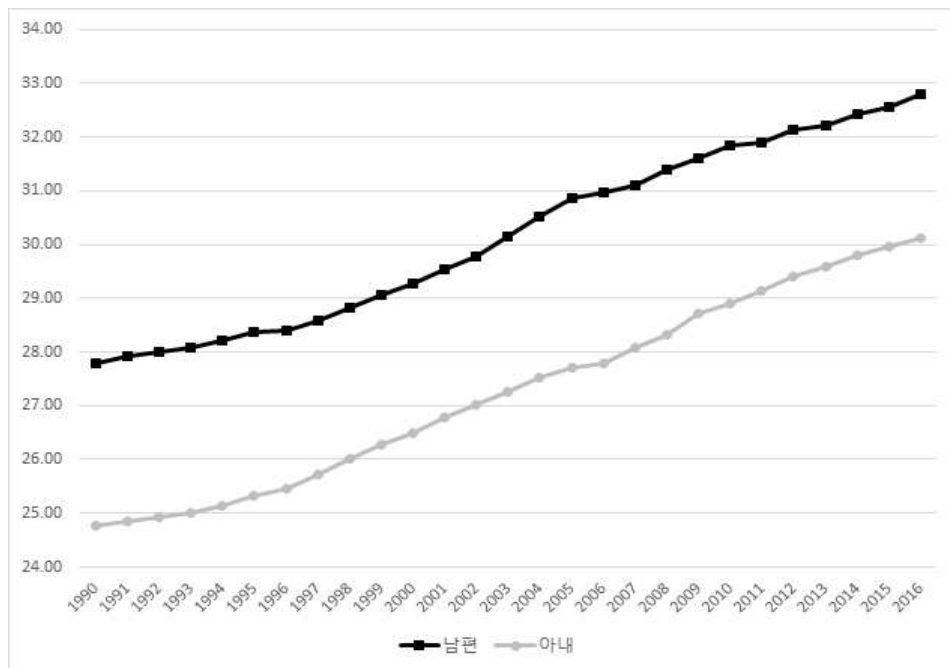
③ 자살충동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 통계청의 2016년 자살충동 이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9%, 30대의 6.5%는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20대 26.6%, 30대 32.8%)임(<그림 2-23>)

7) 혼인율, 이혼율

- 한국의 초혼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OECD국가의 공통된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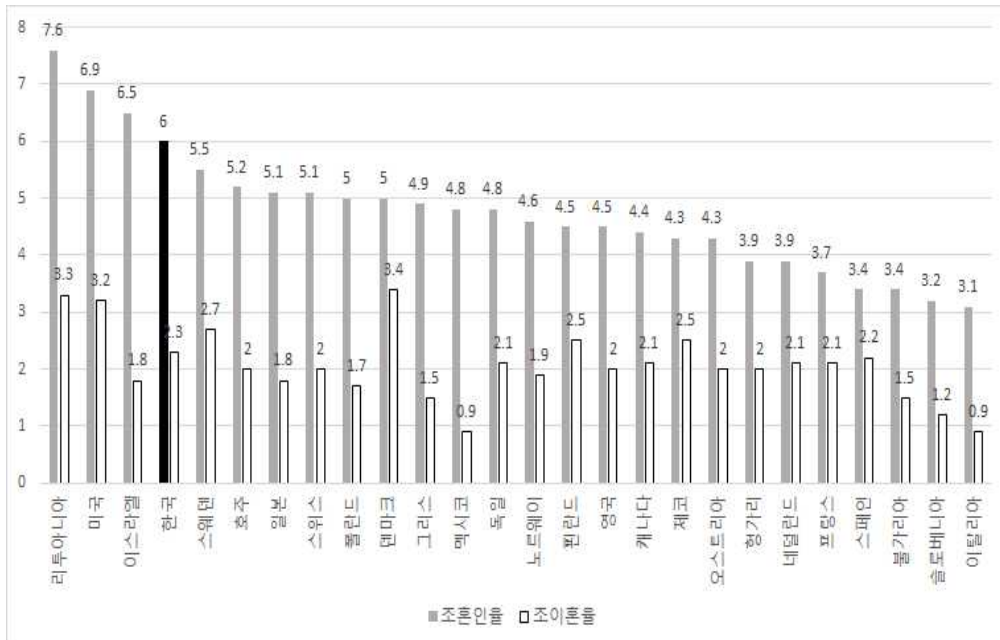
<그림 2-24> 한국 초혼연령(1990~2016)



* 출처: 통계청 자료 조합

- OECD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조혼인율은 평균(4.6)보다 높은 4위 수준
- 조이혼율 OECD평균(2.06)에 비해 조금 높은 편

<그림 2-25> OECD 국가 조혼인율, 조이혼율(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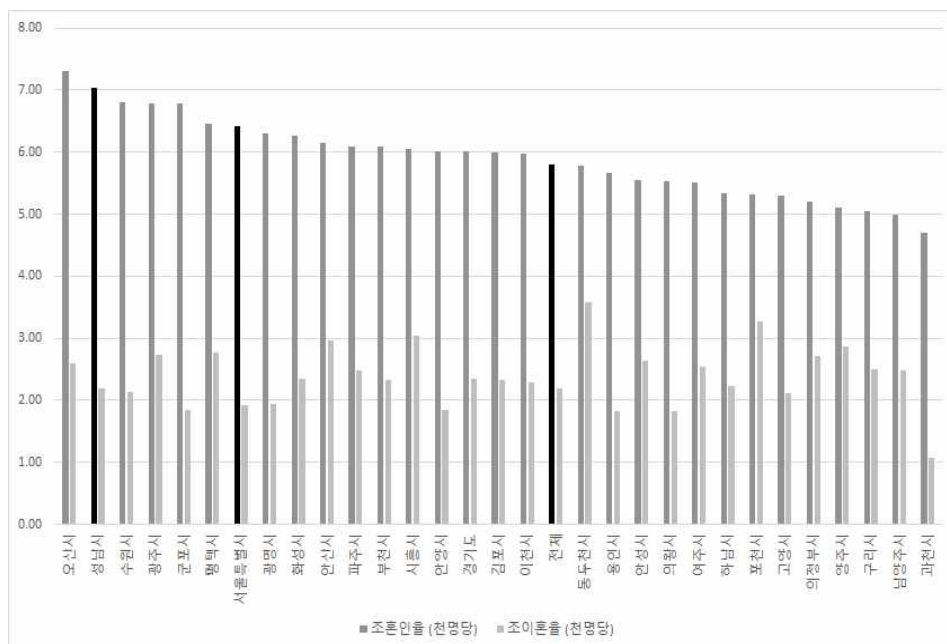
1) 조혼인율 = (연간 총 혼인건수 ÷ 당해년도 인구) × 1,000.

2) 조이혼율 = (연간 총 이혼건수 ÷ 당해년도 인구) × 1,000.

*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 자료 : OECD,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2016.11 자료 조합

<그림 2-26> 전체, 서울시, 경기도 조혼인율, 조이혼율 비교(2014년)



- 서울의 조혼인율은 6.42건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으며, 조이혼율은 1.93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음³⁾
- 성남시의 조혼인율은 7.04건으로, 서울보다 높고 경기도 전체에서 2위(1위는 오산시로 7.3건)에 해당함
- 성남시의 조이혼율은 2.19건으로, 전체 평균과 같음

8) 문화·예술

-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문화와 예술분야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표 2-14> 사립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의학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평균
2012년	1,006	836	837	775	646	739
2013년	1,007	832	832	774	643	736
2014년	1,007	827	828	771	641	734
2015년	1,011	826	827	771	641	734
2016년	1,015	826	828	772	643	737

<표 2-15> 국립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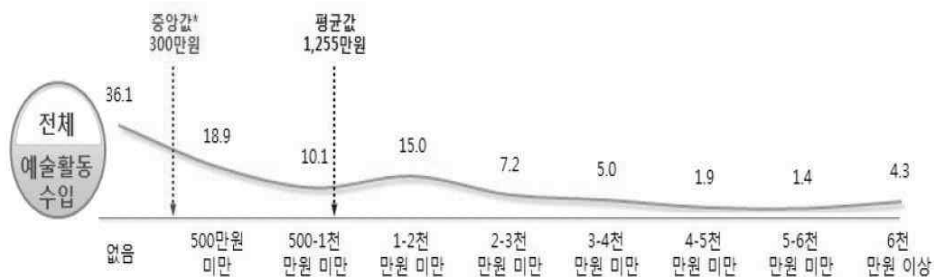
구분	의학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평균
2012년	684	465	453	429	352	419
2013년	670	463	455	430	354	420
2014년	667	461	451	429	352	418
2015년	676	461	451	429	352	418
2016년	684	465	451	432	354	421

*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 VII.등록금, 발행일 2017년 2월 13일.

3) OECD에 제출한 조혼인율과 통계청에서 제공한 조혼인율 간에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음. OECD에는 2014년 기준 조혼인율이 6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한국도시통계에는 5.8명임. 이는 인구추계 등의 계산에서 나타나는 오차로 보임.

-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은 다른 계열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
 - 2017년 대학 인문사회계열 연평균 등록금 596만원, 예체능계열 등록금은 779만원으로 약183만원이 비쌌
-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문화예술계열 활동에 따른 수입은 매우 적음
 - 1년 간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평균 1,255만원
 - 예술 활동에 대한 수입이 없는 경우도 무려 36.1%를 차지함
 - 상대적으로 고소득 분야인 건축, 방송 분야의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다른 대부분의 예술분야 활동 수입은 연 1,000만원 미만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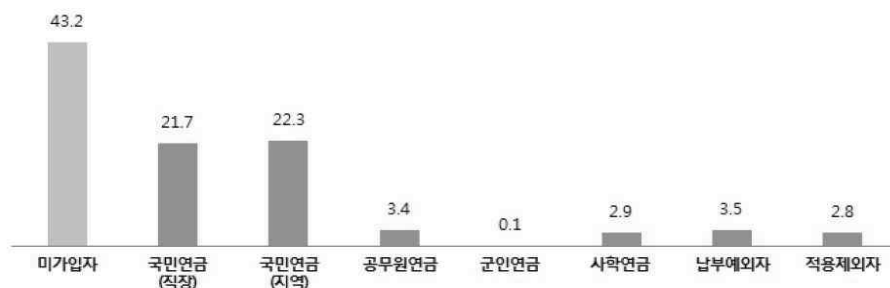
<그림 2-27> 지난 1년간 문화예술청년들의 수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28> 4대 보험 가입 형태(공적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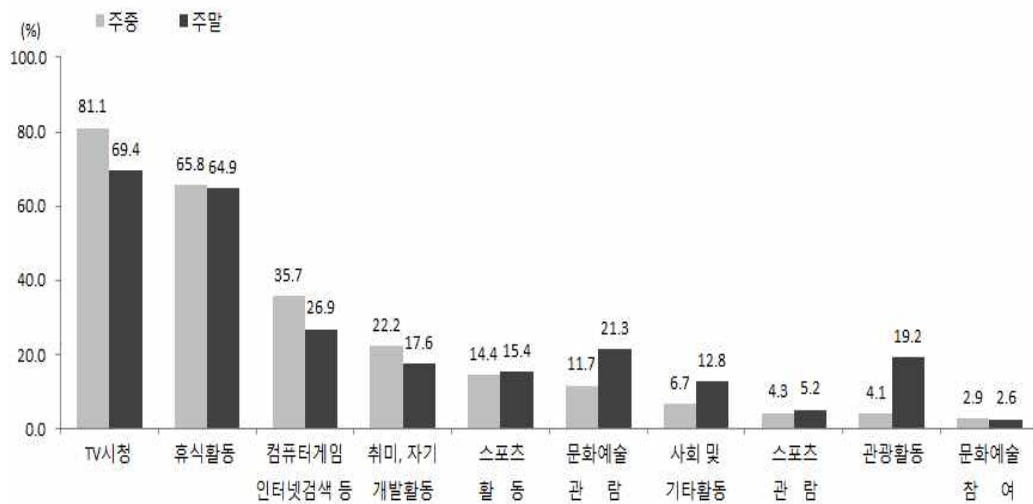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단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예술인의 경우,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활동 형태가 많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공적연금 가입 형태를 보면, '미가입자'가 43.2%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지역) 22.3%, 국민연금(직장) 21.7% 순임
- 청년예술가네트워크의 청년예술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 활동 중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생활을 위한 자금이 42.1%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⁴⁾
 - 이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34.6%,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발굴이 34.1%로 2위
-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활동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 강사, 시간제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 공연장, 창작 공간, 레지던시 확충 등

<그림 2-29> 한국인의 여가 활용(2017년)



* 출처: 통계청, 2017, p.22

-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활동 조건은 한국인의 문화생활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

4) 관련 내용은 청년예술가네트워크에서 서울연구원의 의뢰로 2015년 9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청년예술가 107명을 조사한 결과임.

지고 있음

-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여가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TV 시청, 휴식, 컴퓨터 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관람과 문화예술참여는 각각 21.3%와 2.6%(주말 기준)에 불과

○ 자신의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 때문임

<표 2-16>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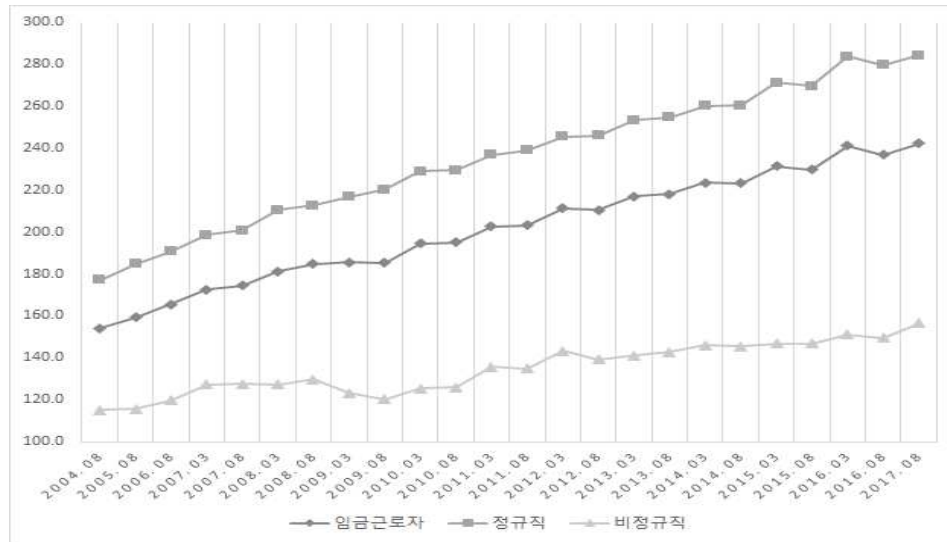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및 불편	여가 시설 및 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여가를 함께 할 사람 없음	기타
13~19세	100.0	43.7	37.9	18.5	100.0	31.5	53.4	1.4	4.6	6.2	0.6	1.9	0.3
20~29세	100.0	33.9	45.7	20.4	100.0	54.3	28.2	2.2	4.1	5.9	2.5	2.3	0.5
30~39세	100.0	26.5	47.7	25.8	100.0	46.3	38.0	2.2	2.8	4.5	2.7	1.7	1.8
40~49세	100.0	26.9	47.2	25.9	100.0	58.9	27.2	2.0	2.4	3.4	4.3	1.7	0.1
50~59세	100.0	25.1	46.1	28.8	100.0	60.8	22.9	1.1	2.0	4.4	7.2	1.5	0.1
60세이상	100.0	19.2	49.5	31.3	100.0	56.0	7.4	1.6	2.1	4.0	27.1	1.7	0.0

* 출처: 통계청, 2017. p.23

9) 세대 내 양극화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청년 층 내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천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5천원에 불과

<그림 2-30>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2004.08~2017.08)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conn_path=l3

- 2~30대 청년층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역시 매년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 비정규직 특수형태⁵⁾를 제외하고 2006년 20대의 청년층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은 57.2%였으나 2015년 현재는 47%로 감소

<표 2-17>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단위: %)

기준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전체	46.7	48.5	47.5	47.3	46.5	46.5	46.2	47	42.3	43
	29세 이하	57.2	58.5	55.2	54.2	52.7	54	51.1	50.7	45.4	47
	30~39세	51.7	52.1	53	52.1	52.1	52.8	53.9	57.3	50.6	53.2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	53.9	55.4	53.7	52.7	51.8	52.3	51.6	55.4	48.6	49.2
	29세 이하	60.2	61.5	58	56.2	55.4	55.5	53.2	53.1	47.7	49.3
	30~39세	63.5	61.8	60.7	56.8	57.9	57	57.1	64.1	57	58.3

* 출처: 김기현 외, 2016a: 88.

5) 특수형태근로자는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함(김기현 외, 2016: 88)

-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여러 조사는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자녀세대의 소득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2017년 7월 11일 한국장학재단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2016학년도 의대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 7개 주요 의대 재학생 중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초과) 재학생이 469명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상위권 7개 대학 의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1005명 중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는 184명, 3~8분위 평균은 44.6명(<국민일보>, 2017.07.11.)

○ 상대적 빈곤율 또한 계속 높아지는 추세

<표 2-18>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증감
전체	시장소득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0.9
	처분가능소득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0.9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출처: 통계청, 2017.05.25. p.8.

-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그림 2-31>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한 비율



* 출처: 통계청, 2017. 한국사회조사,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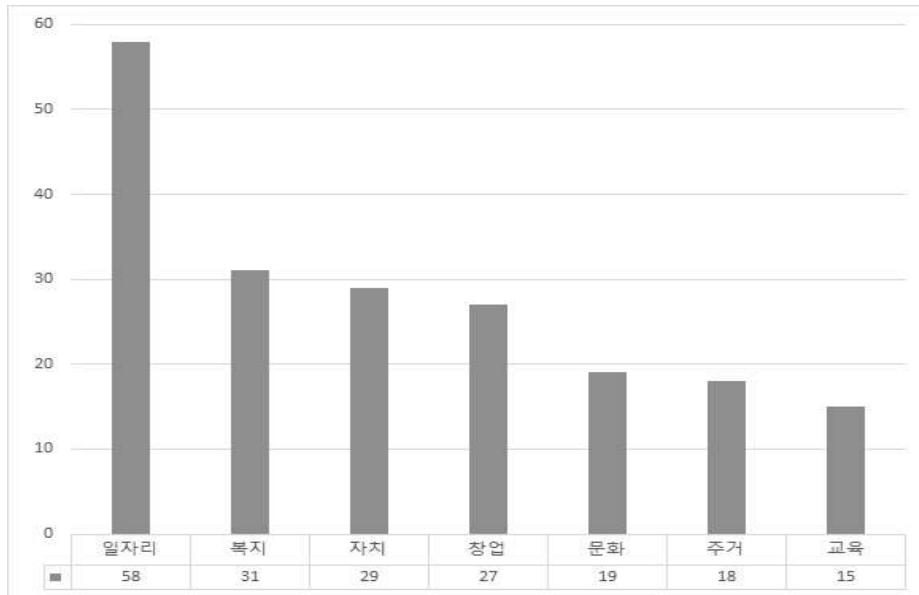
3. 소결

- 오늘날 청년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
- 현재의 청년문제는 불필요한 수준까지 고등교육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과 서열화 된 대학체제, 이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의 교육 문제에 고학력자에게 어울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고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세대에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매우 적은 ‘기대와 효용의 불일치’는 문화와 인간관계, 결혼과 출산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런 현실은 이제 무한경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효용을 다했으며, 새로운 작동원리와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런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당사자인 청년 스스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꾸준히 시험해야 함
-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황이 좋은 편인 성남시의 경우, 새로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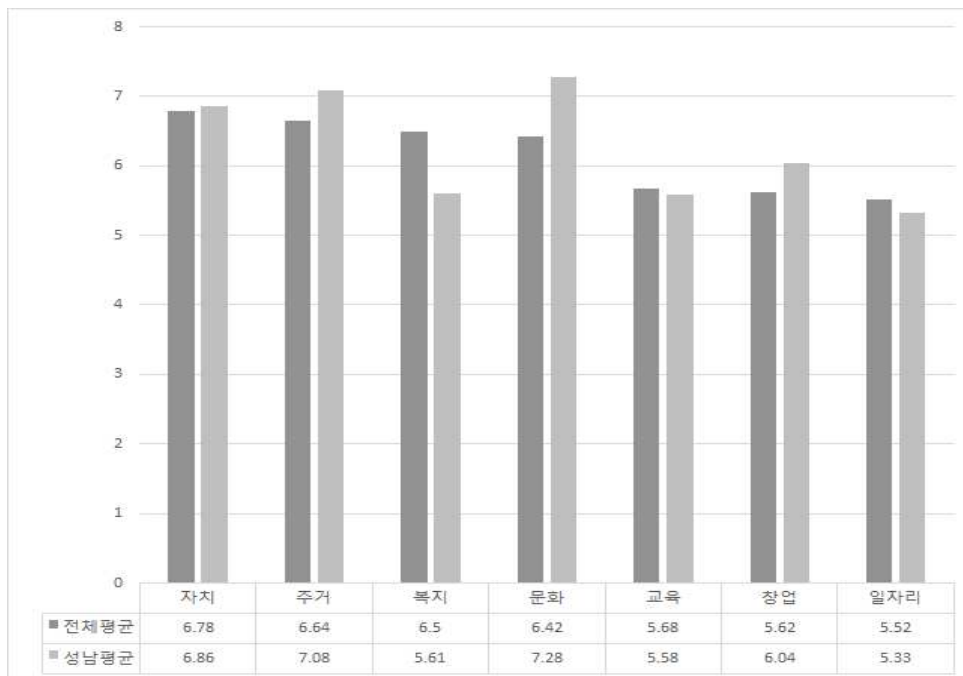
1. 지방정부 청년정책 현황

- 197개 정책은 7개 분야로 재구성
 - 분야는 연구 편의를 위한 임의적 기준을 따라 분류했음
 - 복수의 지자체에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별 평가함
- 각 분야별 정책 수는 일자리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음(29.4%)
 - 평가 대상이 지자체 전체 청년정책을 모두 포괄한 것이 아니고, 13개 정책은 특이정책을 선별하여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치임
 - 창업 정책과 일부 교육, 복지 정책은 일자리 정책으로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일자리 정책의 비중은 더욱 늘어남
 - 이런 결과는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시작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
- 그러나 각 분야의 평균 점수는 자치 분야의 평균이 가장 높고, 일자리 분야의 평균이 가장 낮았음
 - 이는 단지 지자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문제라기보다 청년 실업과 고용불황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됨
 - 반면, 청년 스스로의 자치와 협력, 상호 부조를 유도하는 청년 자치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정책 점수 평균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청년 스스로 청년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 지자체의 청년 정책 변화 방향에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1> 각 분야별 정책 수



<그림 3-2> 전체 정책 평가평균과 성남시 정책 평가평균 비교



○ 전체 평가점수와 성남시 평가점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성남시의 자치, 주거,

<표 3-1> 라운드 테이블 투표 결과

순위	정책	득표	비고
1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14	
2	청년배당확대추진	13	신규제안
3	청년 건강 센터	10	신규제안
4	민간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지대) 발굴 및 지원	7	
	**청년드림사업	7	
	청소년 납세 및 경제교육 주기적 실시	7	신규제안
7	후기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6	
	**청년위원회 운영	6	
9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병원비 보장	5	신규제안
10	*****문화공간조성(청년문화장착소 운영)	4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4	
	청년창업 SMART 2030	4	
13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3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3	
	청년 통장 입금 금액 자유화	3	신규제안
16	창업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지원	2	
17	알바 보험 정책	1	신규제안
	**의 미래에 투자 「청년배당」	1	
19	**문화창조허브지원사업	0	

문화, 창업 분야 청년정책 평가 점수 평균이 전체 평가대상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았음

- 단,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조례 통과 이후 청년 거버넌스가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치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기본조례 등 청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관리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남시 복지 분야 청년 정책 평가는 3가지 정책 중(청년배당, 학자금 이자 지원, 군 입영설명회) 군 입영설명회의 점수가 최하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점수가 하락⁶⁾

6) 다른 청년정책 평가에서도 군대 관련 정책은 정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이는 성차에 따른 정책 영향, 군 전반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와 선입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됨.

- FGI를 통해 1차 선정된 정책을 토대로 진행된 전체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종 19개 정책이 후보에 올라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정책이 1위를 차지했음
 - 2위는 성남시 청년배당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 적용하자는 정책제안이 선정
 - 최종 후보에 오른 19개 정책 중 6개 정책은 기존 정책의 개선안이거나 새롭게 제안된 것임

2. 지방정부의 각 분야별 청년 정책

1) 자치 분야(청년 거버넌스)

① 기본 현황

- 자치분야는 청년 간 상호 교류, 네트워크 형성, 공간 공유, 청년 거버넌스, 실태조사 등 청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분야는 각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청년센터를 비롯해 청년 간 협력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 자치분야의 확대는 단순히 일자리 정책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획기적 전진이라 할 수 있음
 - 자치분야의 평균 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것도 청년의 정책 주체로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임
 - 다만, 청년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는 대표성 등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저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어요. 청년단체에서 참여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청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한다던가, 좀 더 대표성이 있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FGI평가에서는 청년의 자치공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청년활동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 부엌, 휴게카페 등을 설치하는 정책이 최고점(7.75점)을 받았음
 - 이 정책은 최고의 청년 정책을 뽑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도 최종 후보에 오른 19개 정책 중 4위를 차지

<표 3-2> 지방정부의 자치 분야 청년 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S-SU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지대)발굴 및 지원	450	7.75
S-GW	**청년정책 평가사업	50	7.58
S-GW	**청년위원회 운영	25	7.42
S-SU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확대	3225	7.42
S-GW	청년의 시정참여확대	-	7.33
S-S1	**청년 소통 교류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1100	7.33
S-SU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200	7.33
S-GW	**청년센터 'the 숲' 운영	390	7.25
S-GW	청년사업 파트너십 구축 '청년같이'	40	7.25
S-S1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7.17
성남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	-	7.17
S-SU	청년**운명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4189	7.17
S-GW	**청년문화 실태조사	50	7.00
S-GW	**청년계층 내 실태조사	50	6.92
S-GW	청년도시 컨퍼런스 개최	100	6.92
S-KY	청년 **공동체 사업	150	6.83
S-GW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지원 '공간잇기 프로젝트'	100	6.75
S-S1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0	6.75
R-S1	청년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	200	6.75
S-GW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치 강화	-	6.67
성남시	청년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2	6.55
S-S1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 개최	20	6.42
S-GW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7	6.08
S-GW	**청년플랫폼 '도킹'	30	6.08
S-S1	대학생(청년)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	-	6.00
S-GW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임'	40	5.75
S-S1	**청년백서 제작	30	5.67
R-GW	새내기 유학생을 위한 **투어	20	5.67
S-GW	글로벌유학생커뮤니티 '우리동네 외국친구'	10	5.58
전체 평균			6.78

- 청년활동을 위한 공유 공간 부족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민간청년의 활동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좋았어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카페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 간에 교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높은 점수를 줬어요.”

“청년들끼리 플랫폼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얻고 사회적으로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청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 사업으로, 청년의 실태조사와 백서 제작 등 해당 자치지역의 청년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GW광역시의 경우 청년정책 평가사업, 청년문화 실태조사, 청년계층 내 실태조사에 각 5천만원의 예산 책정, S1시는 청년백서 제작에 3천만원 예산 책정
 - 최근 전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치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
 - 특히 광역단위에서는 정기적 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단위 청년 통계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움

“저는 실태조사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전국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자기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얻은 ‘교통카드 지급 정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정책에 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책도 (실태조사에서는) 구직청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구직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INT02, 2017.09.21)

- 대학생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범운영의 경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참여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작용했음
 - 이는 성남시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참여의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대학생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왜 그게 대학생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년으로 넓혀야 해요.”

“저도 대학생 참여예산제는 낮게 줬어요. 청년으로 넓혀야 해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책에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② 주목할 정책: 청년센터와 청년 거버넌스

<표 3-3> 전국 주요 청년센터 운영현황

센터 이름	설립 시기	설치목적	운영 주체	주 이용층	1년 예산 (단위: 100만원)	비고
서울시 청년허브	2013.04	청년정책 추진	연세대학 교	청년 단체	4,539	청년지원, 연구, 활동가 양성, 서울JOB스 등 진행
수원 청년 바람지대	2016.01	청년정책 추진	수원시 청년 지원 센터	20대, 대학생, 취준생, 예비창업 자	700	소모임·네트워킹, 다양한 행사, 모임 운영
광주 청년센터 더 숲	2015.07	청년정책의 발굴, 연구, 추진	교육문화 공동체'결'	상담소/ 커뮤니티 :2~30초 중반	610	금남로지하상가11개 동사용. 청년 커뮤니티, 연구공모 등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2016.06	청년 간 소통, 교류, 협업의 거점	사단법인 대구 사회 연구소	대학생, 취준생, 30대 초반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 터 등 3개 센터 통합개소
충북 청년 희망센터	2016.06	청년정책의 발굴, 연구, 추진	충청북도 기업진흥 원(운영 위탁)	20대	100	기업회장, 교수, 국장급 공무원 등 비(非)청년이 주도
창원 청년 비전 센터	2017.07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창원대학 교	만19세- 34세	18,000 (5년간)	2017년 9월 1일 위탁 운영 시작

-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서의 청년정책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며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년 정

책과 실행을 총괄하는 ‘청년센터’의 설립임

- 청년센터는 관을 대신해 청년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지님
-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과 관의 거버넌스 기구라면, 청년센터는 실무·집행 조직인 동시에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이뤄내는 청-청 거버넌스 공간이기도 함

○ 다만 아직까지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청년 대상 사업 진행, 청년 간 교류 협력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 거버넌스(청년 간 거버넌스 체제, 청-청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단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의회 역시 청년의 대표성을 가진 청-청 거버넌스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
- 서울시 청년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자의 공동주최로 2015년부터 개최
-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한 청년 150~200명을 대상으로 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년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처음에는 프로젝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 활동으로 변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 구조를 갖추게 된 정도죠. 아직은 (청정넷이나 청년의회 가) 민주적 과정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회원구조와 집행구조가 제대로 준비 되면 내년쯤에는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아요.”(INT01, 2017.09.13)

③ 정책 시사점

○ 청년 자치분야의 정책 과제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청년지원센터를 튼튼히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청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한편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청년들의 대표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함
 - 자치분야 개선 의견 중,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10%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제’도 제안되었음

2) 일자리 분야

① 기본 현황

- 청년정책의 핵심이 고용정책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은 절대적인 양도 많고 다양함
 -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노동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지방정부가 일종의 고용주 위치를 차지하는 정책으로 나뉘볼 수 있음
 - 창업, 교육, 복지 분야의 정책들도 사실상 일자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대체로 직업교육훈련, 멘토링, 일자리 체험, 맞춤형 채용, 각종 인턴십 프로그램,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니트족 등 취업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경험, 멘토링 등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도 포함됨
 - 단기 일자리의 경우, 구직 기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험을 축적해 민간 기업을 취직을 유도하는 정책
-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의 취업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임
 - 이로 인해 청년 당사자의 평가 역시 대체로 좋지 않음
 - 특히 “열정발산! 청년취업! 길거리 캐스팅” 정책은 구직난을 겪는 청년을 희화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됨

<표 3-4> 지방정부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W-GW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205	8.16
W-SU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67900	7.75
W-SU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148	7.67
W-J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강화	903	7.08
S-DA	**청년NGO활동사업	250	7.00
W-GW	청년여성멘토링사업	150	6.92
W-GW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00	6.83
W-S1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대책 추진	973	6.67
W-S1	청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3263	6.58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570	6.50
WF-GW	**청년드림사업	2500	6.50
W-SU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21244	6.42
W-KY	**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6.25
W-SU	청년프로젝트 투자정책	5000	6.25
성남시	**일자리센터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커리어 챔피언/하이파이브 특성화고뉴딜 프로그램	18	6.17
W-KY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400	6.17
W-DA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2200	6.00
W-KY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2000	6.00
W-SU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	166	6.00
W-GW	중소기업청년인턴제	500	5.92
W-S1	취업청년 직무능력향상[맞춤형 교육]지원	50	5.83
성남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84	5.83
W-GW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300	5.67
W-SH	골목상권활성화매니저(청년 매니저)	17	5.67
성남시	청년 잡토크(Job talk)	3	5.58
W-GW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0938	5.50
W-KY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206	5.50
W-S1	**청년[행복한 삶 만들기project]추진	30	5.50
W-KY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260	5.42
W-KY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4005	5.42
W-S1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 운영(일본)	429	5.42
성남시	청년 취업 진로 지원「꿈이 있는 목공학교」	6	5.42

W-GW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20	5.33
W-S1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공모사업지원	400	5.33
W-S1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510	5.33
W-IC	청년인턴십프로그램	625	5.33
W-SU	**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837	5.25
W-KY	**청년+4 Trade Manager육성사업	400	5.17
W-KY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600	5.08
W-GW	청년 창업특례보증	2000	5.00
성남시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176	5.00
W-GW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500	5.00
W-S1	지역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청년 멘토링	10	4.83
W-GW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420	4.67
W-KY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	4.67
W-S1	청년[세상밖 풍경보기!]현장체험	50	4.67
성남시	청소년문화놀이터(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24	4.67
W-GW	자동차R&D기획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300	4.58
W-S1	청년사업가 해외교류사업지원	70	4.58
W-GW	글로벌청년취업지원(국가직접)'K MOVE'	64	4.50
W-GW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국가직접)	50	4.50
W-S1	헤드헌팅[청년인력뱅크]운영 및 구인.구직강화	30	4.42
W-S1	아름다운 청년!고마운 기업!선정 시상	5	4.42
W-S1	미래산업콘텐츠 활성화 지원	110	4.25
W-GW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국가직접)	425	4.00
W-KY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10	3.58
성남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추진	327	3.50
W-S1	열정발산!청년취업[길거리캐스팅]도입	10	3.08
전체 평균			5.52

“최저점은 열정발산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겠다는 건지... 직무적성 검사를 길에서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길거리 캐스팅에는 점수를 안줬어요. 인사 담당자가 길에서 캐스팅을 하 나요?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오디션을 볼 것도 아니고...”

- 반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불안정 고용상태의 청년노동자나 취약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음
-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에는 중견기업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는 노동자가 부족하지만, 급격한 학력 수준 상승으로 고급인력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mismatch 현상이 존재함
- 이 문제의 해법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것
-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저임금에 대한 소득 보전, 노동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정책내용은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등
- 단기근로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조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환경과 환경개선에 매우 높은 호응을 보임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 **대다수 청년들이 노동권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단지 교육으로만 끝난다고 뭐가 크게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교육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와 유사하게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년의 건강권을 위해 병원비를 보장하자는 정책과 4대 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의 보험을 지방정부가 대신 가입해 주자는 정책이 제안되었음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년의 병원비 지원 정책제안은 최고의 청년정책 최종 후보 총 19개 정책 중 9위,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정책은 17위

② 주목할 정책: 사회적 일자리

- 일자리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정책은 지방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임
- 청년의 NGO활동, 마을만들기 사업, 청년프로젝트 투자 정책 등

- 이런 정책은 단지 지방정부가 임금, 또는 활동비 지급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 이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사회적 기여 가치가 높은 활동을 노동의 범주로 인입하는 효과를 지님

○ 이런 정책은 열악한 재정 조건에서 활동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비영리 단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하는 청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정책은 일반청년보다는 청년문제 전문가나 청년활동가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았음
- 다만, 지방정부의 공모형 사업이 지방정부에 대한 비영리 민간 활동의 종속성을 높일 우려가 존재하고,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다양한 논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통 열악한 임금만 받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단체나 활동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에요.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뷰티풀펠로우⁷⁾ 사업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시에서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 말이 좀 많긴 해요.”(서일권INT, 20170921)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청년정책은 **에서 하고 있는 NGO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익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에게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데, 뷰티풀펠로우 같은 거죠.”(신윤정INT, 20170913)

③ 정책 시사점

○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청년 고용 문제는 국가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산업구조, 교육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제

7) 아름다운 가게에서 진행하고 있는 '뷰티풀펠로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회혁신기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펠로우로 선발되면 3년 간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연수, 멘토링, 각종 네트워크를 지원함.

- 지역 경계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비빌 언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함

- 니트족이나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경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
- 취업 청년 중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환경에 놓인 청년에게는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보전, 노동조합 조직 등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 사회적, 공공적 가치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에 대한 최후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인식 마련이 정립되어야 함

3) 창업 분야

① 기본 현황

○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발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업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하고 창업 기본교육,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킹 등 창업프로그램을 제공
-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초기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예비창업자의 협업 공간이나 사업자등록 주소지(가상오피스)등을 지원
- 지역적 특색과 정책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 문화콘텐츠, 게임, 도시개발, 애니메이션, e-커머스, 시장 등 특화된 분야의 창업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창업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도 함
-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도 함

<표 3-5> 지방정부의 창업 분야 청년 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WS-KY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550	7.75
WS-KY	청년창업SMART 2030	1091	6.67
WS-GW	청년 도전사업 '청년챌린저'	100	6.33
WS-J	청년상상놀이터운영	300	6.33
WS-SC	도시재생 챌린지숍 운영	100	6.33
성남시	**문화창조 허브 지원사업	2,500	6.33
성남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시장)	200	6.33
WS-S1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300	6.00
WS-SU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21	6.00
WS-S1	**시장 청년몰 조성	1350	5.92
성남시	**창업경연대회 개최	452	5.83
성남시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사업	2,700	5.67
WS-GW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1400	5.67
WS-KY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5800	5.58
WS-KY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550	5.58
WS-GW	창업선도 대학지원(국가직접)	100	5.50
WS-KY	문화창조허브(**/**/**)	2500/2000/2900	5.33
WS-S1	혁신형 창업자 발굴을 위한[2016**창업아이디어 오디션]개최	60	5.33
WS-GW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2000	5.27
WS-KY	***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850	5.17
WS-S1	**야시장 조성		5.08
WS-GW	**청년창업펀드 결성,운영	1000	5.08
WS-GW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2	5.00
WS-KY	G-NEXT (게임산업육성추진)	5000	4.83
WS-GW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1700	4.58
WS-S1	청년창업 푸드트럭 추진	300	4.42
WS-GW	차세대 육성CEO양성교육	11	3.92
전체 평균			5.62

② 주목할 정책: 전통시장과 청년 창업의 만남

○ 최근 창업분야의 주목할 만한 흐름은 청년 창업 공간을 전통시장과 연계해 상

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임

- 청년 창업 공간을 전통시장 내에 위치시켜 청년에게는 창업 공간을, 전통시장에게는 새로운 활기와 유동인구의 확대를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옴
- 지방정부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간판·매대 제작지원, 인테리어 및 냉·난방공사와 재료비 등과 점포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함

- 이 정책은 일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 당사자의 평가도 매우 좋은 편임

“전통시장 청년 상인을 육성하는 정책에 최고점을 줬어요. 이게 단지 자기 가게를 혼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청년몰처럼 지역 상권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역도 좋아지고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도 좋고.”

“저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좋은 점수를 줬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홍보도 심하고 또 재래시장은 아직 현금 위주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전통 시장에 유입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 같아요.”

-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청년의 연계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를 살릴 구체적 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교육도 하고 공모해서 선정되면 지원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청년 상인들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문 닫는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살아있어야 청년 상인들도 사는 건데, 그냥 청년만 있다고 해서 시장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아니라서 내수가 살아야 하는데, 먼저 정책적으로 시장을 살릴 방법부터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③ 정책 시사점

- 창업(startup) 정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되고 있음

-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
- 둘째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innovation) 동력으로 창업을 상징하는 경향

○ 이 두 경향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지만 상충되기도 하는 가치임

-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전략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함
- 국가와 지방정부의 창업 정책은 대부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되고 있어, 혁신동력으로서의 창업 전략과는 조화하지 못함
- 따라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창업 전략의 핵심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버팀목이 되는 것

- 이를 위해 창업 과정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창업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혁신을 동반한 창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 등 청년 창업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⁸⁾

4) 복지 분야

① 기본 현황

○ 복지 분야는 크게 일반 복지 분야와 청년수당 및 배당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 복지 분야는 청년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 보장, 일하는 청년 통장, 구직 청년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 학자금 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 장애청년 사회진출과 자립 지원 등
- 수당 및 배당 분야는 크게 보아 성남에서 추진 중인 '조건 없는 청년배당' 정책과 저소득 청년과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청년 수당으로 구분 됨
- 일반 복지 분야의 평점 평균이 6.58점인데 비해, 수당·배당 분야의 평점 평균은 6.27임

8) 2017년부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는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을 운영하고 있음. 스법단은 청년 창업인이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법률적 상담과 대기업과의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3-6> 지방정부의 복지 분야 청년 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WF-GW	청년건강권보장	150	8.00
WF-KY	일하는 청년 통장	11460	7.67
WF-GW	구직청년 교통카드발급	300	7.67
R-S1	**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구축	40	7.50
WF-KY	자립지원사업	1755	7.25
WF-S1	희망두배[일하는청년통장]사업	247	7.25
WF-GW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	8478	7.17
D-KY	***학자금 이자 지원	827	7.00
D-SU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603	7.00
D-SU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1432	6.92
WF-K1	일자리구직활동수당	17000	6.83
WF-KY	청년구직지원금	16500	6.75
WF-SS	**의 미래에 투자「청년배당」	11,290	6.75
WF-GW	장애청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30	6.58
D-GW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지원	100	6.58
WF-SU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3688	6.50
D-S1	**청년[보통의 행복한 삶]회복사업	600	6.50
WF-GW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	25	6.42
WF-BS	청년수당_**청년디딤돌카드	1000	6.42
성남시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400	6.42
D-S1	***[대학생 반값 등록금]지원	800	6.33
WF-DJ	청년취업패스제도(청년취업희망카드)	10,800	6.25
D-S1	희년(jubilee) [청년부채탕감]사업추진	기금후원	6.17
WF-S1	청!심!환(청년심신안정 환경)프로그램운영	27	5.83
B-GW	출산장려금 지원	1625	5.83
D-GW	***장학재단 및 로스쿨 장학금 지원	200	5.83
WF-IC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3138	5.75
WF-SU	청년활동지원사업확대추진	15000	5.75
WF-KN	청년복지카드		5.67
D-S1	[청년안심희망대출]***보증인제 실시	비예산	5.33
성남시	군(軍)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군 입영설명회”	30	3.67
전체 평균			6.50

○ 가장 호응이 높았던 정책은 청년 건강권 보장 정책

- 실제 정책 내용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에 맞춰져 있으나, 정책평가자들은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건강권을 요구했음
- OECD Health Status 2017에 따르면,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은 56.4%로, 라트비아(41.6%),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음⁹⁾
-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됨
-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청년 건강 센터’가 신규 제안되어 최고의 정책 최종후보 19개 정책 중 3위를 기록

“건강권 보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취업 걱정에 우울증 앓고 있는 친구도 많아서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파도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자살 예방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채무자들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보면 수요자가 엄청 많다는 걸 느껴요.”

○ 구직 청년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 교통카드 발급 정책 예산은 3억 가량으로, 구직 수당과 청년 배당 정책 예산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이는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이 정책은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임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정책이 제일 좋았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건 매일 느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정책 같아요.”

“청년배당도 있지만, 사실 상품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것도 있는데, 이

9)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건 그냥 쓸모가 바로 확인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 학자금 지원 정책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만 이자를 지원하는 성남시의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성남시에서는 든든 학자금만 (이자를) 지원하고, 일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아요. 불합리해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 본인 당사자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소득에 따르는 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 한편 성남시의 군(軍)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정책은 전체 복지 분야 정책 중 최하점을 기록
 - 일반적으로 청년 주도의 정책평가에서 군 관련 정책은 내용을 떠나 응답자마다 편차가 크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본 연구에서 12명의 평가자 중 3명이 0점 처리함)
 - 이는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가지는 이미지와 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임

“최저점은 군대 관련 정책이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군대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군대 문제는 군대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정책은 보여주기 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군대 문제는 군대 내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지자체에서 군대 내부를 손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는 건데, 괜찮은 정책 아닌가요?”

② 주목할 정책: 청년배당 vs 구직수당

- 청년배당과 구직수당을 통틀어 가장 높게 평가된 정책은 적용 대상이 매우 다양한 구직수당임

<표 3-7>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

정책명	내용	평가 점수
일자리 구직활동수당	저소득층 및 장기 실업 청년, 대학생(졸업학년 및 휴학생), 특성화 고교 등 고등학생, 창업기업 내 청년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종사자, 취창업 교육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30만원 3개월 간 총9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6.83
청년 구직지원금	실업과 취업 준비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18~34세의 도내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청년 1,200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 취업의 욕 고취 및 역량강화 촉진. 매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역청년 1,200명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간 카드(청년카드)를 통해 사후지원	6.75
청년배당	지역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2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청년수당_**청년 디딤돌카드	만18~34세 졸업예정자와 구직청년으로 중위소득 35~80%이하 2000명에게 연간 240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	6.42
청년취업 희망카드	만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자(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내) 6000명에게 월30만원 6개월 간 지원	6.25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만18~3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20만원, 최대3개월 지급. 이중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3개월 이상 유지한 청년에게는 20만원 추가지원	5.75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추진	19~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2~6개월 간 월 50만원 이내 지원. 이행의무 부과	5.75
청년복지카드	15세~39세 청년근로자, 근로자3명~99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된 현장근로자, 연봉 3천만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100만원지급	5.67

-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성화고 고등학생, 졸업반 대학생, 창업기업 청년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취업·창업교육 이수자,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타 지자체보다 적용 대상이 가장 넓게 설정되어 있음
- 이는 단순히 미취업 청년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청년들이 수당 등의 외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줌

○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구직지원금 정책과 공동 2위의 선호를 보였고,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한 타 지자체의 구직수당 정책보다는 선호가 높은 편

-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은 공동 2위를 기록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보다 지급액이 1/3 수준이지만 동일한 호응을 얻었음
- 청년복지카드 정책은 유일하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당 정책임

○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청년배당 정책 자체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 지급대상의 연령과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로 보아야 함

“청년배당은 낮은 점수를 줬어요. 딱 그 나이에만 돈을 준다는 게... 보여주기식 정책 같아요. 지급 연령대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대포로 주는 것 같아요. 주로 받은 상품권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 같고... 그냥 추석 선물 받는 느낌?”

“청년배당의 조건은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예요. 지역 기준은 크게 문제 아닌데, 24세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취업준비 나이? 이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학 안가고 취업활동 하는 사람은 몇 살 때 주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은 몇 살 때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예 공평하게 성년이 되는 나이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놀고 싶은 나이에 좀 놀게.”

“저는 다음 달에 (청년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요. ‘종합시장에서 뭘 사지?’하고 계속 계획 중이요. 실생활에 필요할 것 같아요. 책이나 이런 거 살 때요.”

“저는 청년배당 정책에는 비교적 낮게 점수를 주긴 했는데 청년(구직)수당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은 꿈을 찾아야 할 시기인데 취업만 하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수당을 주는 건... 꼭 취직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책도 사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 청년실태조사에서도 정책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달라질 수 있음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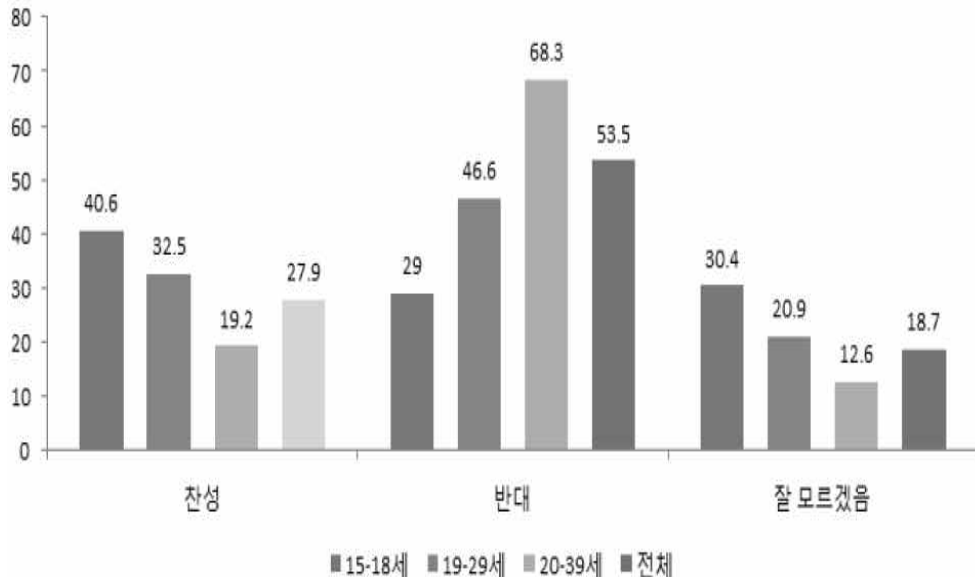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39세 응답자들은 청년수당이나 배당에 대해 찬성이 27.9%, 반대가 53.5%로 반대의견이 더 많으

나, 15~18세에서는 찬성이 40.6%, 반대가 29%로 역전 됨¹⁰⁾

- 이는 정책 수혜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 선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김기현 외, 2016: 188)

<그림 3-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 출처: 김기현 외, 2016b: 79; 김기현 외, 2016a: 187

-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배당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청년배당 확대 실시 제안은 최고의 정책 최종후보 19개 정책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음
- 청년배당의 확대 요구에는 24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품권보다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음

10) 물론 이 조사결과가 청년배당이나 수당에 대한 정확한 청년 여론을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음. 해당 질문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배당과 수당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나 청년 배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며, 지급대상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달리 24세에만 해당됨. 그러나 연령대가 올라가 정책 수혜 대상에서 벗어날수록 정책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늘어 난다는 것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③ 정책 과제

- 복지 분야의 청년 정책은 청년의 니즈를 파악해 창의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한 영역임
 - 실생활과 부합하는 청년 니즈를 파악하여 적은 재원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정책 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청년 생활비 지원, 화장품과 생리대 등 여성용품 지원, 성남시 버스카드 도입(청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선정의 간소화, 정책 홍보, 구직자 여가 수당 정책, 아르바이트생 보험 정책, 응급의료비 지원 등의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음
-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청년배당이 청년 당사자로부터 보다 큰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24세 이외의 연령대에서도 청년배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청년배당 확대의 핵심은 적용 대상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다양화 임
 - 이중 지원 대상의 확대는 현재 입법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청년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청년배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 함
 - 지급 연령대를 높인다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청년의 공감과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청년의 삶의 주기가 각기 다른 만큼, 다양한 갭이어(Gap year) 동안 청년배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현재의 사용방식을 고수하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함
 - 지원 방식은 현행 지역상품권에서 현금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으나,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과의 연계성을 잃을 수 있음
 -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성남농협은행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3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된 2016년 249억원으로 116억원(87%) 늘었고, 유통량은 1.8배, 회수율은 9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성남시청, 2017.09.13.)
 - 현금지급 방식보다 현행처럼 지역상품권 배분 방식을 유지하면서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함

5) 주거 분야

① 기본 현황

<표 3-8> 지방정부의 주거 분야 청년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WS-S1	청년임차인보호[보증자리 지킴이]추진	20	8.25
H-SU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지원	25232	7.58
H-KY	**기숙사 사업	14973	7.25
H-KY	BABY2+**하우스	985	7.17
성남시	**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	7.17
성남시	**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5,226	7.00
H-GW	제2**학숙 건립추진	16050	6.83
H-S1	민.관 협력[**의 숙]장학관 사업	80	6.83
H-SU	(청년1인가구주택공급확대) 낯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제공	11000	6.83
H-GW	**학숙 운영지원	860	6.75
H-SU	(청년1인가구주택공급확대)대학생희망하우징	-	6.75
H-KY	청년 공유기숙사		6.67
H-SU	(청년1인가구주택공급확대)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8468	6.42
H-SU	자치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공급	-	6.08
H-SU	(청년1인가구주택공급확대)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780	6.00
H-SU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800	5.75
H-KY	**학사 운영	330	5.17
H-SU	(청년1인가구주택공급확대)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250	5.00
전체 평균			6.64

○ 전월세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청년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조건에서, 다양한 주거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수도권에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 공유 기숙사 등을 비롯해 빈집을 활용하거나 독거노인과 주거를 공유하는 정책 등 창의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진행 중임

- FGI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주거 정책은 청년 임차인 보호(보증자리 지원) 정책임
 - 감당하기에는 주거비용이 매우 비싼 조건에서 계약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불합리한 처우, 사기 등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존재함
 -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특정 구역마다 청년들의 임차 문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거나 구청이나 학교, 직장에서 임차계약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청년임차인 보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주위에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건 한번 사기 당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청년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켄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데, 이게 상가만이 아니라 전월세비용도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아요. 동네가 살기 좋아지면 청년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살다보면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구 별로 청년들이 사는 곳에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이나 학교, 직장에서 임차계약서와 관련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 청년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FGI에서는 하위권 정책으로 평가된 주택보증금 정책이 전체 평가 1위를 기록했음
 - 이는 정책의 참신성이 크다기보다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 보편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 밖에 추가 의견으로는 월세를 지원하거나 청년 임대인에게 전월세 계약에 관련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② 주목할 정책: 1인 가구 정책

-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표 3-9> SU 지자체의 청년 1인 가구 정책

1인 청년 가구 정책	내용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제공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청년1인 가구에 최장6~10년간 주변시세의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대학생희망하우징	대학생, 전문대생에게 보증금100만원에 주변시세의 20~30%수준인 6~30만원대 저렴한 월세를 내고 거주(관리비별도). 수도권 외 지역출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선발 우선권을 부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1인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이하, 2인 이상은 100%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 토지매입 자금을 공사에 출자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부지매입 후 장기임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빈집 리모델링 소요비용의 50%(4천만원한도) 예산보조,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집주인 부담은 없음). 적용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방3개 이상). 구청장과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동면접을 통해 최종확정(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100%). 임대 조건은 시세80%이하, 거주기간 6년 보장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지역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사이버대학생 제외)을 연결시켜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1개의 방 임대.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월20~30만원내외). 임대기간은 기본 6개월(1학기), 연장가능. 환경개선 공사 1실 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청년층의 주거난이 심각하지만, 단순히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양적인 측면에 맞춰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불만이 제기됨
-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질이 보장된 주거 공간임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좋죠. 6년이 보장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건 주거 공간보다는 청년 창업 공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거공간으로 산다는 건 정말 별로예요.
청년들은 꼭 그런 곳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희망 하우스 같이 6~30만원 정도로 월세를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도 100만원 정도니까요. 대학생 자취촌 월세가 기본 4~50만원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수도권 외 지역출신 우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빈집 살리는 건 좋은데, 한 지붕 아래 여럿이 같이 살도록 하는 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확실한 나의 공간과 침터를 갖고 싶은 건데..”

“독립된 공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청년과 어르신을 함께 살게 하는 건 좀... 이 건 청년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1인 가구를 비롯해 청년 주거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주거 문제는 소득차이를 떠나 대다수 청년과 대학생에게 부담스러운 문제임
 - 그러나 청년 주거문제를 보편적인 청년 문제로 수용하고 대책을 세우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

“주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생이나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버거운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잡혀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주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지구 지정했을 때 청년을 배려한다던지 행복주택을 지정하는 건 지방정부보다는 LH가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오피스텔 얻어서 1층을 청년센터로 두고 2층부터 원룸으로 만들거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공)

③ 정책 시사점

- 도시재생과 개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수단 마련이 시급함
 -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체·업소 입주로 인한 영향 분석, 입점 허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치
 - 이런 조치를 주거권 보장으로 확대하여 창업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임차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주거문제의 경우,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전숙이나 예술인마을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청년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공간, 커뮤니티 등도 함께 해결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전략임

“도전숙¹¹⁾ 같은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업, 커뮤니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안이 숙소 겸 창업 공간이 되고, 또 커뮤니티가 되고.”(공)¹²⁾

“서울 성북구에서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마을에 들어갈 사람들을 정해요.¹³⁾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공)

“(성남시에서도) 청년 창업 주택을 만들고 있어요.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거죠. 창업한 지 3년 이내가 된 사람들이 대상인데, 일도 할 수 있고 주거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200세대를 제공할 건데, 2019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공)

11)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의 ‘도전숙’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6) 교육 분야

① 기본 현황

<표 3-10> 지방정부의 교육 분야 청년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E-KY	농촌 지도 인프라 구축 지원(후계농업인력양성)	550	6.92
E-KY	*** 영상아카데미		6.83
E-GW	청년이 만드는 청춘대학 '버킷캠퍼스' 운영	50	6.58
E-GW	예비청소년지도자 발굴·육성	50	6.42
E-S1	이주배경(다문화)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25	6.42
E-J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6.17
E-S1	생애주기별·계층별[맞춤형 탄탄교육]	미정	5.92
성남시	후기청소년 역량강화사업	14	5.75
E-KY	농촌 지도 인프라 구축 지원(전문능력 개발)	160	5.67
E-GW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	58	5.42
성남시	대학생 진로 멘토단 「꿈나르샤」	7	5.42
E-KY	***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100	4.92
E-GW	중국비즈니스 스쿨 운영	100	4.58
E-S1	내일의 리더 만들기[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20	4.33
E-GW	글로벌 창의역량강화	100	3.92
전체 평균			5.68

○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 대부분임

- 정책평가에서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정책으로 분류
- 그럼에도 많은 교육 분야 정책은 일자리, 진로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 FGI 평가에서는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얻었으나,

2년이며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2014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음.

12) (공)은 FGI 공무원 그룹 코딩임.

13) 성북구에 있는 정릉예술인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성북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도전숙을 문화예술인에 맞게 적용한 것임.

해당 정책이 평가자들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호감이 크다기보다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동일한 정책 중, 해외 선진 농업장 벤치마킹 프로그램보다 창의적 농업활동 공모 프로그램이 더 좋은 평가를 얻었음

○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는 교육 분야 정책 중 성남시의 ‘후기청소년 역량강화사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음

- 교육 분야 정책 선호 1위, 최고의 정책 최종 후보 19개 중 7위
- 대체로 정규 교육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자신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이나 다른 여러 교육기관을 가잖아요. 대학에서는 지식을 배운다면 여기서는 지혜를 배우고 체화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대학에 진학해서 학과 안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휴학을 했어요. 막상 휴학을 해보니까 외국처럼 갭이어(gap year)라든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정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지식적인 교육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설정해야 할 진로나 삶의 방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지식적인 걸 위주로 배우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학업에 치우친 다른 정책에 비해 학문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계발 같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 좋은 정책 같아요.”

○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교육 분야에 관한 두 가지 정책이 제안되었음

- 첫째는 청소년에게 납세와 경제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 둘째는 인문학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임
- 두 정책 모두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만한 정책 제안이며, 납세와 경제교육 제안은 최종 후보에 올라 4위를 기록했음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되어보니 알바는 하지만

납세에 관해 아는 것이 없고. 4대 보험 같은 게 통장에서 나가면 어디 쓰이기 위해서 내는 건지도 잘 몰라요. 또 얼마 전에는 통장에 세금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지, 왜 들어오는 돈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는 게 없는데도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갑자기 툭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납세나 경제 부분의 특강이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때는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대학생 때 학과공부에 치중하는데 거기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이나 연극이라든가 고전에 관한 공연은 티켓도 비싸고 진입장벽도 높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간 적이 많아요. 이런 것도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을 한 다든지 따로 공연을 마련한다든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② 주목할 정책: 청춘대학

- 이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교육이 아니라 해당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강좌를 기획·개설하는 정책임
-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현재 총 13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학과 당 2회에 걸쳐 원하는 분야의 멘토링 수업을 제공하고 학과 당 5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청춘대학이 좋은 정책 같은데... 이름에 대학이 붙으니까 대학생들이 하거나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학에서 무슨 강좌를 또 만드나? 싶었는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좋은 강사님을 부르려면 돈이 드니까요.”

③ 정책 시사점

- 교육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만이 아니라 청년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임
 -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수준의 차이가 인문교양과 문화적 지체로 이어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런 차이가 영속화되면 설령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세대 내부의 구조적 균열은 계속 심화될 것
 - 단순히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청년들의 교양과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시민교육 강좌 등 강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은 대부분 사전에 교육 내용을 구성해 지원을 신청하는 공모 프로그램임
 - 대체로 이런 프로그램은 일정한 규모의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미리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임
 - 이 경우, 청년 개인이 듣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강좌 요청자가 단체성을 띠지 않더라도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강좌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구조가 형성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일자리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청년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
 - 교육 커리큘럼은 청년의 요구와 전문가의 가이드,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역량이 결합해야 함

7) 문화 분야¹⁴⁾

① 기본 현황

14) 문화 분야의 평가는 평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체 청년정책 평가 이외에 추가로 4인의 청년문화예술인을 섭외, 집중 평가를 진행하였음.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전체 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문화 분야 평가 점수 순위는 기존 전체평가와 문화예술인 추가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임.

<표 3-11> 지방정부의 문화 분야 청년정책

코드	정책명	예산 (백만원)	평균
C-GW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185	8.13
성남시	**청년작가공모전「신진작가전」	-	7.81
C-SU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7500	7.88
C-KY	***** 문화공간조성(청년문화창작소 운영)	973	7.88
성남시	**청년작가전「아트마켓-아트로드」	73	7.13
C-GW	지역청년문화예술인 쿼터제	100	7.19
C-GW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유망주프로젝트'	130	6.88
C-GW	장애인 청년체육인재 육성	100	7.19
C-GW	청년창의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콘텐츠 킹'	100	7.00
성남시	**문화예술지원사업	45	7.00
C-GW	청년 체육인재 육성	1100	6.19
C-S1	[**청년아티스트 나르샤]프로그램	267	6.44
C-S1	**[청년특구]조성사업	67	6.31
C-GW	**버스킹 운영	300	6.06
C-GW	세계청년축제	300	5.81
C-S1	AFTER YOU, 아주희망 프로그램 사업참여 지원	기부 및 모금	5.44
C-S1	**대 부지[청년(시민)휴식공간]조성	협약후 편성	5.25
C-GW	** 물총축제	50	4.75
C-GW	**POP페스티벌 개최	100	4.56
전체 평균			6.57

○ 문화정책에서는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재정적, 공간적 지원 정책이 높은 평가를 얻었음

- 이것은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활동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

“활동을 하는 연희자로서 **제일 실질적인 것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공감도 많이 돼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저도 지원센터운영에 9점을 줬고요, 문화공간조성에도 9점을 줬어요. 실질적인 정책 같아요. **예술가들에게 공간이 너무 중요해요.**”

“문화공간조성에 10점(만점)을 줬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해서 문화공간조성 정책과 청년작가공모전, 예술인 창작지원에 점수를 많이 줬어요. 작가공모전도 젊은 작가를 발굴한다는 느낌에서 좋지만 예산 규모를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반면, 이벤트성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팝 페스티벌, 물총축제, 버스킹 등의 행사는 그 자체로 가지는 축제적 의미가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나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실제 행사를 경험해본 평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음

“물총축제는 주제가 모호한 것 같아요. 명확한 주제로 잡고 기획한 건지 모르겠어요. POP페스티벌도 방송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제가 모호한 것 같아요.”

“버스킹은 정확히 행사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물총싸움 같은 경우는 산만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정책을 모두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물총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막을 좀 알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줬어요.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시작한 거고, 지역 상가들과 결합을 잘 해서 초기에는 세팅도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벤트성만 커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축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② 주목할 정책: 청년예술인 지원센터와 청년문화창작소

- 청년문화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계수단이나, 활동과 관련해서는 창작을 위한 공간과 대중과의 접촉 지점임
 -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창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
-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는 청년 예술인에게 6개월 간 무료로 창작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연과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예술인의 활동기회를 제공해 줌
 -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으로 평가받았음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청년문화창작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옛 대학 부지를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창작 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정책
 - 여기에는 스튜디오, 디자인 랩, 공방, 팹(Fab)카페 등의 시설이 함께 운영됨
 - 지방정부는 창업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청년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함
 - 지역 유휴시설을 발굴해 청년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큼
-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신흥동과 태평동(공사 중)에 공공예술창작소를 운영 중
 - 2017년 7월 14일에 오픈한 신흥공공예술창작소의 경우, 현재 작가 4팀, 기획자 1팀이 입주하여 주민, 작가, 기획자가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실행 중
 - 다만, 입주한 사람들만 작업과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한계로 남음

③ 정책 시사점

- 문화·예술 분야는 단순히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

만이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해야 함

- 최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다시 문화적 격차가 고착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런 결과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청년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 여건 마련과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접근 기회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어야 함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이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 창작과 전시 공간 등 문화예술의 공급적 측면만이 아니라 청년의 접근성을 높여 수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공간 배치가 필요함

3. 소결

<표 3-12> 청년정책의 대강

정책 분야	정책	내용·대상
청년 자치	청년센터	청년 사업 중간지원조직
	청년 실태조사	해당 자치구 청년 실태 파악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의회 등
	청년플랫폼, 공유 공간	청년 간 교류를 위한 공유 공간
일자리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진로·취업 지원, 해외 인턴 알선,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인턴 등) 제공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노동인권 교육, 임금 보전, 노동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사회 공공활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
창업	창업지원	창업 컨설팅, 교육, 멘토링, 투자, 공간 등
	청년상인	청년몰 등 전통시장 내 청년 상가 개설, 교육과 비용 등 지원
주거	저소득층 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원
	기숙사 지원(공공 기숙사, 향토학사)	지역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 지원
	전세 임대, 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상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창업, 예술인 등 공동 주거	주택 공사와 지방정부 공동 사업. 주거, 작업실, 커뮤니티 결집
복지	청년 배당	조건 없는 청년 배당
	구직 수당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의 조건부 수당
	청년 심리 상담, 건강검진	청년 정신·육체 건강 관리
	청년통장	매월 10만원 입금 시 3년 후 1000만원 보장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부채 탕감	청년 부채 탕감 위한 기금 조성
	청년 신용회복	신용회복, 생활안정 지원
	학자금 이자 지원	발생 이자 지원
교육	인재 양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대학생 지식멘토	대학생 멘토, 취약계층 맞춤형 학습 지원
	청춘대학	청년이 원하는 강좌 개설, 운영
문화	청년예술인 지원	창작공간 지원, 전시 공연 활동 지원
	청년작가전	전시, 판매 사업, 미술문화 허브
	청년예술인 쿼터제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청년 쿼터
	문화기획자 육성	실무교육, 현장멘토링, 공동 프로젝트

- 지금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대부분 유사한 정책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것은 새로운 정책 분야가 창출된 초기에는 정책이 서로 유사해지는 특성 때문임
 -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같은 분야의 정책이나 조직운영 등의 원리는 서로 비슷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나타나게 됨
 - 이 과정은 법률환경 등에 따른 강제적 압력, 다른 곳의 정책을 모방하는 모방적 과정, 해당 정책을 짜는 전문가들의 유사성에 따른 규범적 압력 때문임(DiMaggio and Powell, 1983: 150-154)
 - 이중 ‘모방적 과정’은 해당 정책이 효율적이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검증된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임

- 현재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방적 과정 위에서 창조적 적용이 일어나는 단계
 -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의 토대가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으나, 점차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국면임
 - 각 지자체 청년 정책은 각자의 현실에 맞는 창조적 정책들에 따라 지방정부별 특성이 구분될 것임

- 성남시 청년들은 단순한 지원보다 청년 주체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청년정책이 수립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 단순히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
 - 절대적인 지원 액수보다 청년다운 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함
 - 일회성, 보여주기식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음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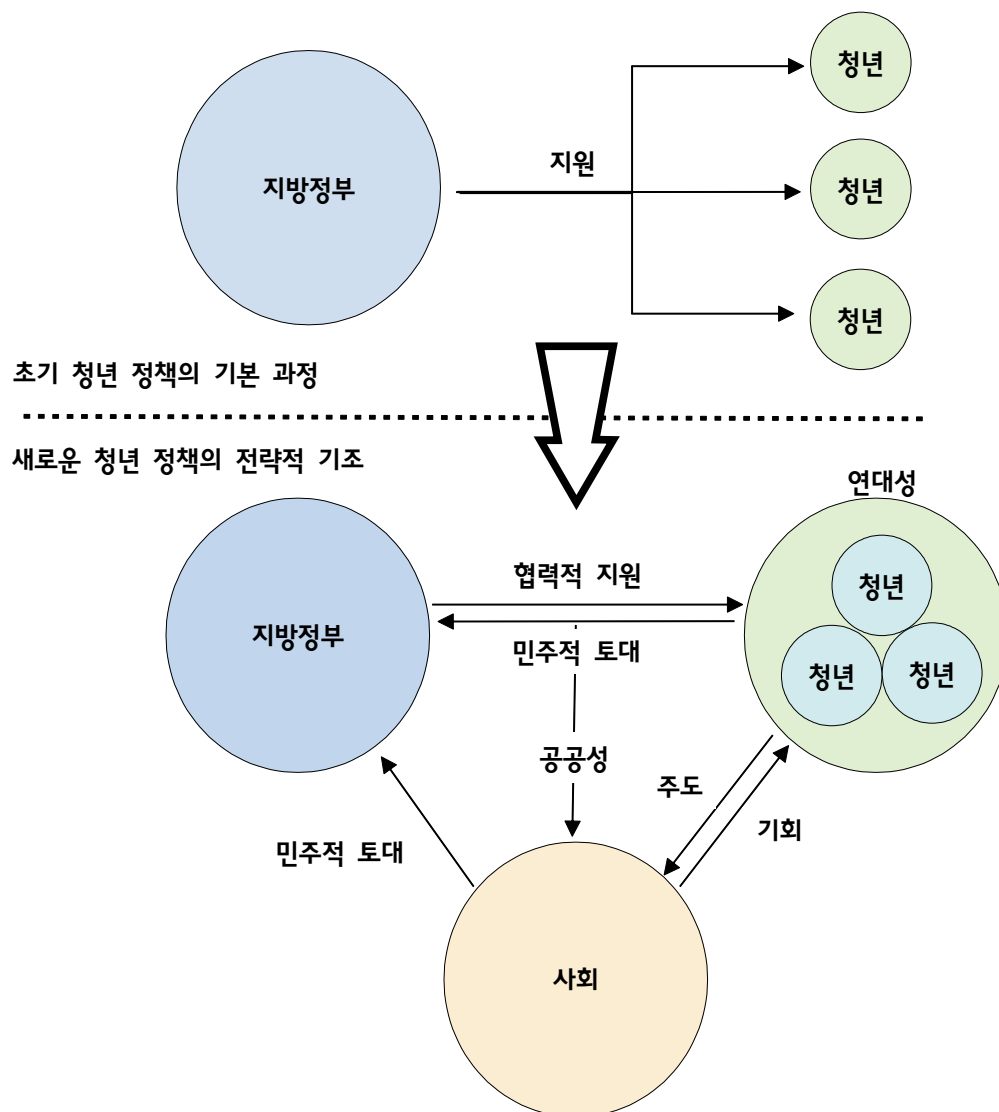
성남시 청년정책의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 제언

- 여기에서는 성남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제시함
 - 성남시의 재정적 역량, 청년 실태의 객관적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청년의 삶의 수준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추격 전략보다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끌 선도 전략이 적절함
 - 성남시 청년정책의 기본전략은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기보다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할 성남시 청년정책의 특성을 부각하려는 것임
 - 4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 간 성남시가 수립해야 할 청년정책의 주요 전략적 목표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새로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와 청년(그리고 사회 각 요소) 간 연대성(협력)을 기초로 사회적 공공성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함
 - (지방)정부는 청년에 대해 일방적 지원-수혜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이며 연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
 - 지방정부와 청년간의 협력의 효과는 청년 내의 문제해결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함
 - 사회는 청년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청년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이처럼 청년 등 사회적 각 부문과 지방정부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는 진정한 자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방정부와 사회 간의 민주성의 구현 과정임

○ 따라서 성남시 청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기초해 수립할 것을 제안함

- 민주성의 원칙: 청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
- 공공성의 원칙: 청년 정책의 결과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
- 연대성의 원칙: 청년정책의 대상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청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

<그림 4-1>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런 원칙에 따라 성남시 청년정책의 3가지 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민주적 자치 구현: 청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자치의 민주적 토대 마련
- 공공성 구현을 위한 활동 촉진: 청년 활동이 단지 청년 내부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활동 지원
- 삶의 가치와 방향을 찾는 청년 생활의 실현: 단지 생존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 수혜자에서 주체로: 청년 생태계 구축

1) 취지와 배경

- 초기 청년 정책은 청년을 각종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했음
 -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 정책이 본격 등장한 것은 2000년 이후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고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부터임
 - 따라서 초기 청년 정책은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고 대학평가에 취업률 지표 삽입, 고용 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취업을 증진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런 정책 경향은 청년을 ‘보살핌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부여할 각종 혜택을 구상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최근 청년기본조례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청년을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임
 -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이는 정책 대상인 청년이 단지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규정하는 변화임
- 그럼에도 현재의 청년 거버넌스는 겉음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심의기구이지 결정기구가 아님
 - 청년위원 역시 권한의 한계와 대표성의 한계가 동시에 존재 함
 - 이런 현실은 향후 진행될 민-관 거버넌스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청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청 거버넌스¹⁵⁾를 구축하는 것임
 -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청년 간의 교류와 협력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

15) 흔히 협치로 번역되는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체 간의 민주적·소통적 통치·관리 체계를 의미함. 따라서 ‘민-민 거버넌스’, ‘청-청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민간과 청년이 동일한 집합체가 아니라 잘게 분할될 수 있는 이질성을 전제하는 개념임. 따라서 청-청 거버넌스, 혹은 청년 거버넌스는 이질적 주체 간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통치·관리체계를 의미함.

- 청년 생태계를 기반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의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청년 자치공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5년 내(2018년~2022년) 목표

○ 청년 생태계를 위한 기반 조성

- 성남시 청년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창출
- 청년 생태계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 성남형 청년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 거버넌스 모델 선도

-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마련,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 공간 마련,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청년 민회 모델(제한 없는 총회형 참여 공간)에서 청년 의회 모델(대표성을 지닌 청년들의 대의제)로 발전 전망 수립

3) 핵심 정책 과제

① 청년지원센터 설립과 위상정립

○ 거버넌스의 실현은 행정과 민간(청년)이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우위의 권력구조를 극복하기 어려움

- 민간은 실질적 권한, 행정적 경험, 전문적 지식 등에서 행정 관료와 동등한 조건을 형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청년)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협력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민-관 거버넌스가 부각되면서 이 역할은 소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목적은 부족한 민간과 청년의 역량을 보완해 행정과 동등한 조건에서 소통적 협력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청년센터는 행정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해 시청과 협력하고,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기관
- 아직 청년의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실무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
-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성남시 청년 라운드 테이블·토크쇼·캠페인 등 교류·협력의 장 마련, 각종 지원·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단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정 대행적 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계 되어야 함

○ 청년지원센터의 위상은 행정과 민간(청년)의 중간이 아니라 민간(청년)의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민관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설치된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주 경험하는 문제는 행정과 민간의 '기계적 중간'에 위치하면서 행정 대행적 역할에 머무르는 사례임
- 이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보다 민간으로부터 '또 하나의 행정'으로 치부됨
- 중간지원조직은 명확하게 민간(청년)에 위치하면서, 행정과의 협력에 필요한 실무적 도움을 민간(청년) 측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행정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이런 위상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추진 시기: 초기

② 청-관 거버넌스 구축

○ 성남시 청년정책 추진의 거버넌스 기관은 청년정책위원회이나 거버넌스 기관으로의 위상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님

- 청년정책위원회는 적지 않은 위원회가 그렇듯이, 자칫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음
- 청년 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조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운영은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실험임

○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역할 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됨
- 일정한 갈등을 경험, 극복한 후 일정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가장 훌륭한 거버넌스 모델이 만들어진 사례가 많음
- 거버넌스의 갈등은 민간과 행정이 동시에 변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인내와 의지로 관리해야 함

○ 초기에는 청년의 역량과 주도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청년들이 청-관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다양한 배려가 필요함

- 다양한 경험 축적의 미비, 행정·실무적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가가 결집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음
- 초기에는 행정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의 영향력과 발언권, 주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배려가 필요함
-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중의 대폭 확대, 청년 발언권 보장 등을 통해 행정이 청년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임

■ 추진 시기: 초기

③ 청-청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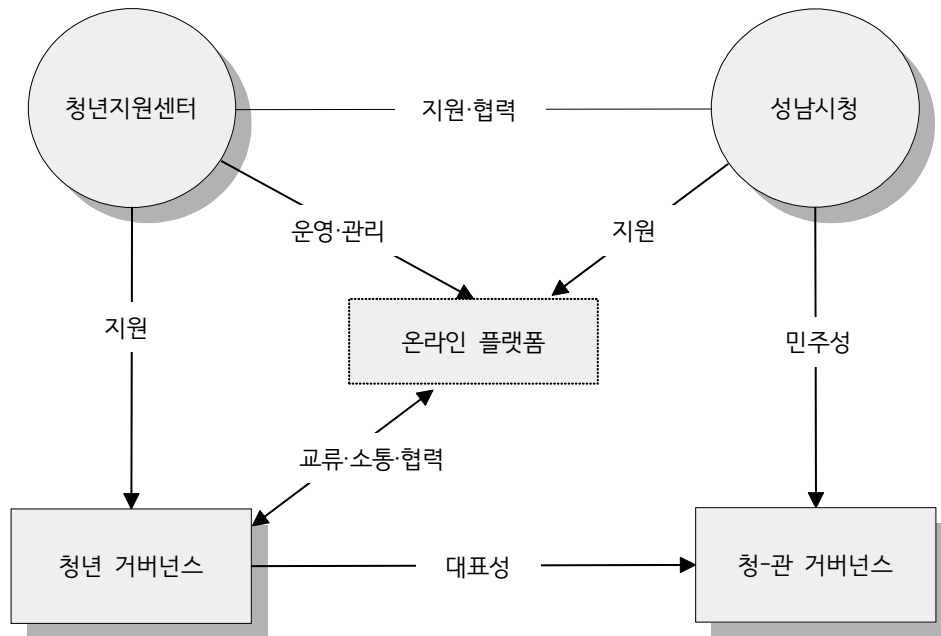
○ 1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년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는 것

-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 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반영함
- 청년들의 교류·협력, 자치공간으로서의 청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구성이 필요함

○ 청년 거버넌스 모델은 초기에는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는 청년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남형 청년 총회 모델’이, 후기에는 적절한 대표성을 갖는 ‘성남형 청년 의회 모델’이 적절함

- 청년 총회 모델은 참여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결정 공간으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이벤트와 결합해 진행할 수 있음
- 일정한 규모의 청년들이 결합되면 보다 넓은 범위의 성남 청년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대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성과 대표성, 심의성과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성남형 청년의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림 4-2>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장기적으로 성남형 청년 의회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는 청년만이 아니라 소극적 참여의지를 가진 청년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선발 방식은 선거 방식도 가능하지만,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공론조사형 배심제(추첨 선발) 형태가 바람직 함

■ 추진 시기

- 청년 총회: 초·중기
- 청년 의회: 말기

④ 성남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노동(over-work) 비율을 가진 한국형 도시 공간의 특성 상, 오프라인에만 의존하는 청년 생태계는 한계가 분명 함
-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기능만이 아니라 주요 의제에 대한 온라인 심의와 결정, 자체 커뮤니티 등 실질적인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오프라인 활동에 기초하지 않은 온라인 활동은 그 한계가 명확함

-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활동의 기반 위에 운영 되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의 주된 목적은 오프라인 활동의 확산과 참여에 있어야 함

■ 추진 시기: 초·중기

2.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사회활동 보장

1) 취지와 배경

- 국민에게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헌법적 의무임
-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9.3%(OECD 평균은 21.3%)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쟁 등의 쟁점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법률적 구획을 넘어 유동하는 청년인구의 특성 상, 지역에 국한된 정책 범위는 한계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을 요구하지만, 청년 개개인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리스크가 큼
-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비록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지방정부가 청년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성남시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실패가 두렵지 않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이어야 함

2) 5년 내 목표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의 보편화
 - 청년배당 등 성남시 복지정책의 사회적 동의 확산
- 질 좋은 일자리의 양적 감소가 불가피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을 독려
 - 사회적 미션을 가진 창의적 도전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
- 개별적인 복지혜택이 아니라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계형 사회 활동 유도
 - 개별적인 지원보다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수립
-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기초적인 주거 안전망 제공, 청년 건강권 보장, 노동인권 감시 강화

3) 핵심 정책 과제

① 청년배당의 확대·다양화

- 현재 성남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24세로 한정되어 청년층의 광범위한 동의 구축에는 장애가 있음
 - 청년배당과 수당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잠재적 지급 대상이 되는 연령층과 지급 받을 수 없는 연령층 간에는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타남
 -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요구 또한 24세로 제한된 청년배당 지급 대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음
- 청년배당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 현재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24세 이상의 청년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조건 없는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수적임
 - 현재 청년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6개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법 제정의 전망은 밝은 편임

<표 4-1>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발의 현황

법안명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청년기본법안	2016.05.30	신보라 의원
청년정책기본법안	2016.08.17	박홍근 의원
청년기본법안	2016.08.24	이원욱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2016.12.02	김해영 의원
청년기본법안	2017.04.13	박주민 의원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2017.06.30	강창일 의원

* 출처: 청년단체연대회의, 2017.09.28.: 15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청년배당의 확대 실시를 본격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

○ 1유형: 5세 단위로 청년배당 확대 실시

- 1차 대상 24세 청년에서 2차 대상은 29세로, 3차 대상은 34세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청년층의 동의를 확보

○ 2유형: 자유 선택제 도입

- 미진학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청년의 갭 이어(Gap year) 시기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각자의 조건에 맞게 청년배당 수령 시기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 예를 들어 청년배당 수령 횟수가 기존의 1번에서 3번으로 확대될 경우, 이 중 1번은 자신의 갭이어 시기에 맞춰 선택하여 수령함으로써 배당의 실효성을 높임

■ 추진 시기

- 29세 확대 적용: (청년기본법 제정 후) 초·중기
- 34세 확대 적용: 중기
- 자유 선택제 적용: 말기

② 성남형 혁신가 수당

- 현재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거나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은 분야인 경우가 많음
 - 제공되는 일자리의 종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적 성격이 강함
 -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분야에 요구되고 있는 일자리 제공의 역할은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가의 입장과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 정부의 입장 간의 충돌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사회적·공공적 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남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션(social mission)을 해결할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의 발굴, 문제 성격의 규정,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 실제 해결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개입해 갈 수 있는 도전적 일자리
 -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는 ‘청년 사회 해결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 혁신형 창업, 비영리 섹터 활동, 문화·예술 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영역에 존재
 - 참고사례: 아름다운 가게의 뷰티풀펠로우, 대구의 NGO활동가 지원 정책, 강원도의 일자리 구직활동수당 등을 응용할 수 있음
- 성남형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성남형 혁신가 수당’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션 해결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직수당과 차별화되는 전략
 - 지원 대상은 개별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 모임(협동조합형)도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의 규모와 기간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생계걱정 없이 소셜 미션에만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당 책정
 - 예시: 단기 6개월, 장기 1년간의 프로젝트, 최소 월 150만원 이상의 수당 등

■ 추진 시기

- 성남형 혁신가 발굴, 수당 지급: 중기

③ 하이브리드 공유 공간 “성남 이글루”

- 사회 혁신가나 문화·예술 등 구조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 활동

가들의 공동 주거 공간 제공

-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하여 매입임대주택 등의 일부를 사회 혁신가들에게 제공
- 서울시 '도전숙'이나 2019년 완공 예정인 성남시 '청년창업주택'을 응용하여 '성남형 청년 혁신가'들까지 확대 적용

○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협업, 공동 전시 공간 등의 운영과 결합

- 혁신 창업가, NGO 활동가, 문화·예술인 등 성남형 혁신가들이 일종의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창출

○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이글루'형 공간으로, 성남의 공유, 공존, 공생의 가치를 상징

- 북극에 있는 '이글루'는 독점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이누이트들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 도구를 이글루에 남겨 놓고 떠남¹⁶⁾
- '성남 이글루' 역시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공유하면서 공생하고, 결국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육성함

■ 추진 시기: 중기

④ 청년 안전망 구축: 노동, 주거, 건강권 보장

○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과 도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정부는 보건 의료, 교육, 노동, 소득,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정책과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구조적 문제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노동, 주거, 건강권과 관련한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함

○ 노동인권 감시활동

- 청년의 노동인권과 건강한 노동환경이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관리 활동을 강화함
- 청년들의 단기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노동(over-work), 노동인권 침해 등을 감시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함

16) 이글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마이뉴스, 2016.12.11.>에서 얻었음.

○ 주거 부담 완화

- 정책평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최고의 정책’ 1위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임
- 그러나 주거 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정책 이외에 별다른 주거 정책이 없음
- 매입임대주택, 낡은 집 리모델링, 주택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준에서라도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건강권 보장

- 건강권은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을 넘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잠재력의 실현, 사회적 안녕, 양질의 삶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적 수단이나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환경 등을 사전에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청년층은 건강검진의 기회가 기성세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예방의료 차원에서 청년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권 교육, 상담, 각종 힐링 프로그램 등이 결합되어야 함
- 긴급한 건강상의 위협이 있는 청년들이 진료비와 치료비의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치료비 후불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함¹⁷⁾

■ 추진 시기

- 청년 노동권 감시·관리 강화: 초기
- 청년주거비 지원: 초·중기
-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 치료비 후불제 도입: 중기

17) 청년 건강검진, 건강권 교육·상담·힐링 프로그램, 치료비 후불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에서 얻은 아이디어임(INT03).

3. 인생을 향유할 권리! 청년다운 삶을 누릴 기회 제공

1) 취지와 배경

- 그동안 청년들은 높은 등록금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범주로 이해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은 취약 청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일자리 알선과 제공 등이 주를 이루어 왔음
 - 3장에서 살펴봤듯이, 청년정책의 압도적 다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며, 창업, 교육, 복지 정책도 대체로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설계되고 있음
 - 복지 정책 역시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일 세대들의 문화를 공유해야 하며, 모두가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성남시 청년정책의 마지막 전략은 성남 청년들이 청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2) 5년 내 목표

- 청년들의 정확한 니즈와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단순한 청년들의 통계적 실태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파악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
- 청년의 인문학적, 문화예술적 소양 제고
 - 자산과 소득, 교육 정도에 따른 청년 간 문화적 격차를 줄여 세대내부의 이질성 완화
 - 문화예술인과 청년들이 상시 교류하고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구조적 기회 마련

- 새로운 삶의 양식과 경로에 대한 기회와 경험 제공
 - 목적 없는 대학진학, 취업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형화된 인생 경로 이외에도 대안적인 삶의 경로와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
 - 일자리 위주의 정책보다 삶의 질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3) 핵심 정책 과제

① 성남 청년 지표와 지수 개발·시행

-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기초해 청년정책의 지향에 대한 점검이 일상화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청년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거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단이 없음
- 단순히 청년들의 계량적 현실만이 아니라 삶의 질적 수준의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청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성남시 청년의 기본 실태
 - 성남시 청년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성남시 청년지수 개발
 - 성남시 청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개발
 - 정기적인 조사로 성남시 청년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종합적인 성남시 청년실태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형태와 패널조사 형태 중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
- 지표와 지수 개발 이전에도, 청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 이벤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라운드 테이블, 청년 총회, 청년공론조사, 청년정책배틀 등 청년의 호기심과 참여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추진 시기

- 청년 정책관련 이벤트: 초기
- 성남시 청년 지표, 지수 개발: 초기
- 성남시 청년실태 정례 조사: 중기(지표, 지수 개발 직후)

② 성남 청년 아카데미

○ 청년 스스로 설계하는 ‘청년 아카데미’

- 청년 스스로 듣고 싶은 강좌를 기획·추진하고 강좌 형식도 자유롭게 구성하는 성남형 청년 아카데미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평생학습원은 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
- 필요한 강좌를 제안하고 일정 수준의 수강생이 확보되면 성남시, 또는 평생학습원에서 지원

○ 기본 과정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납세 등 경제지식과 노동법과 인권 교육 제공

- 사회생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경제활동관련 정보와 지식을 주기적으로 제공

○ 인문학 등의 강좌에 대한 청년 접근권 향상

- 재테크, 처세술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문학적 교양을 채워줄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 접근권 제고
-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소규모 강좌 등 다양한 형식 마련

■ 추진 시기: 초기

③ 청년 문화주권 보장

○ 계층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효과를 발휘하기도 함

- 대표적인 사례는 가정 내 언어적 상호작용, 문화실조(文化失調),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과 지원 정도 등과 같은 문화자본 내지 사회자본과 관련된 것들
-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는 경제자본 외에도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다각도로 열악한 여건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 낮아지게 됨 (김경근, 2005: 4, 23).

○ 그러나 청년들의 문화적 접근권은 매우 제한적임

-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문화 공연 등은 진입장벽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짐
- 주민센터 등에서 시행중인 문화예술교육 역시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함

○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다양한 경로로 문화주권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문화 전시, 공연에 대한 ‘성남시 청년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
-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 창조 프로그램 시행
- 일반 청년과 문화예술인 간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거점에서 창작 작업과 공연, 전시 공간이 결합된 공유형 문화 공간 확충

■ 추진 시기

- 전시, 공연 청년 할인제: 초·중기
- 문화 창조 프로그램: 초기
- 공유형 문화 공간 확충: 중기

④ 성남형 갭이어: 어너더 라이프 프로젝트(Another Life Project)

○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10대들의 안식년’으로 불리는 갭이어(Gap year)가 대학 진학 이전보다 대학 진학 이후에 몰려 있음

- 한국에서는 대학진학 전에 새로운 경험을 쌓기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의 측면에서 갭이어가 활용되는 경향이 큼
- 주요 갭이어 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 인턴, 창업 등도 자기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의미보다 일자리 획득의 의미가 더 강함

-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인턴과 창업 등의 활동은 자아발견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는 갭이어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지역과 연계하는 성남형 갭이어: 또 다른 인생 경험 프로젝트

- 해외가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청년 안식년’ 프로젝트
- 성남시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협약으로, 단기 6개월, 장기 1년 간 거주 프로그램 마련
- 해당 지자체와 성남시는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약간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년이 원할 경우 일자리 제공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일정 일수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조건 이외에 강제조항 없음
- 갭이어 기간이 종료되고 청년이 지역사회 정착을 원할 경우, 정착 프로그램(정착비, 창업 교육 등) 제공

※ 참고: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파견대’ 정책

- 경상북도에서 2017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대’는 2009년부터 444개 지자체에서 1,511명의 도시 청년을 시골에 정착시킨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본 따 2030년까지 2,380명의 도시 청년을 유치하는 정책
- 도시청년이 시골에서 창업할 경우, 교육과 컨설팅 등을 위해 3년간 매년 3,000만원 지원¹⁸⁾
- 도시청년 시골파견대는 시골 정착 프로그램이자 일자리 정책이지만, 성남형 갭이어 정책은 새로운 인생 진로를 성찰하고 모색하기 위한 안식년 정책임

○ 성남형 갭이어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법을 체험하는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라 정형화된 청년의 삶을 벗어나 자기 삶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안식년
- 새로운 삶의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자체에서는 청년 공동화 현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음

18) <한국일보, 2017.06.05.>, <중앙일보, 2017.09.27.>

■ 추진 시기

- 지자체 협약 추진: 초기
- 성남형 갭이어 시행: 중기

1. 연구 요약

- 지금까지 한국 사회 청년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문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과 성남 청년 주도의 평가, 5년 간의 성남시 청년정책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음
- 성남시 청년들은 대체로 청년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 청년을 하나의 정책 주체로 인정하기를 원했으며, 단순한 생활지원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성남시의 주체적 역량과 외적 환경, 그리고 성남 청년들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 청년지원정책은 타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모방하는 추격 전략보다 새로운 차원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선도 전략이 적절함
- 이전의 청년 정책이 고립된 개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 청년 스스로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민주상의 원칙
 - 청년정책의 효과가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 청년정책의 대상은 청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연대성의 원칙
-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3대 원칙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남시가 추진해야할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 첫째, 청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자치의 민주적 토대를 구현하는 전략

- 둘째, 청년 활동이 단지 청년 내부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성 구현 활동 촉진 전략

○ 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주력해야 할 12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음

- 청년 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지원센터 위상 정립, 청년과 행정 간의 거버넌스 구축, 청년 간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실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배당의 확대·다양화, 성남형 혁신가 수당 도입, 하이브리드 공유공간으로서의 성남 이글루, 노동·주거·건강 등 청년 안정망 확대가 필요함
- 청년다운 삶의 기회를 위해서는 청년 지표 개발, 성남형 청년 아카데미 실행, 청년 문화주권 보장, 새로운 인생 경로를 경험해볼 수 있는 성남형 갭이어 정책이 필요함

○ 성남시 청년 정책의 3대 원칙과 전략, 핵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1> 성남시 청년정책의 3대 원칙, 3대 전략, 12개 과제



2. 시기별 과제

- 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성남시 재정역량, 정책 준비정도, 요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로드맵을 설계해야 함
-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초기에는 청년 정책 추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3가지 전략 중,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가장 초기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과제들은 청년 정책의 착수와 시행, 평가 전반의 기본 축이 되기 때문임
 - 특히 청년지원센터의 위상 정립과 청년 간, 청년-행정 거버넌스 구축은 바로 착수되어야 함
- 아울러 설계가 복잡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과제들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동권 감시와 청년 아카데미, 청년 문화 할인제, 성남형 깡이어 정책을 위한 지자체 협약은 바로 추진 가능하면서도 파생효과가 높은 정책 과제임
 - 청년 지표개발은 차후 성남시 정책 설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거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함
 - 청년의회 모델의 추진은 청년 총회와 이벤트 등 청년 간 소통과 협력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을 때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됨
 - 청년 배당 정책의 확대와 다양화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예산 확대의 동의를 무르익어야 추진 가능함
 - 성남 혁신과 수당과 성남 이글루 정책, 공유형 문화공간 등의 정책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안전망 과제 중 주거비 지원과 건강권 정책 역시 예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성남형 깡이어 정책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된 후 추진 가능함
- 각 시기별 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안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5-1> 3대 전략과 12개 과제 로드맵

전략	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년생태계 구축	청년지원센터 위상 정립	●				
	청-관 거버넌스 구축	●				
	청년 거버넌스 구축	청년총회(이벤트 결합) ●			청년의회(공론조사형) ●	
	온라인 플랫폼		●			
청년 안전망 구축	청년배당 확대 실시		29세 ●	34세 ●	자유선택제(갭이어) ●	
	성남형 혁신가 수당			●		
	성남 이글루			●		
	청년 안전망	노동권 감시 ●	●	맞춤형 건강검진, 치료비 후불제 ●		
청년다운 삶	청년 지표	지표개발 ●	정례조사 ●			
	청년 아카데미	●				
	청년 문화주권	청년 할인제 ●	공유형 문화공간 ●			
	성남형 갭이어	지자체 협약 추진 ●		어너더 라이프 프로젝트 ●		

3.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향후 5년 간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
- 따라서 성남시의 다양한 조건과 현실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성남시가 수립할 청년 정책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청년 당사자의 피드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성남시 청년 정책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청년 정책의 콘텐츠를 채워야 하며, 지원의 대상은 연대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함
- 종합하면 성남시에서는 민주성과 공공성, 연대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시스템과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한국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야 함

참고한 글

<단행본·보고서>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공고문 2017.4. 「2017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콘텐츠 츠테크하이어 고용확정형 인력양성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 (재)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2016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결과보고: 지방 정부 청년정책 변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2.0 과제 도출』, 서울시 청년허브.
- (주)월드리서치. 2016. 『2015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도, 2017.0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경기도.
- 경상북도, 「2017년도 1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요약본」.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2017년 1-2월중 주요업무계획_일자리정책과
- 광주광역시. 2017년 2월중 주요업무계획_일자리정책과
- 김경근, 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5권 제3호.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a,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6b,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2017. 「대교연 통계(기본) 2016-17 9호」. 대학교육연구소
- 백종호, 2016,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주간 하나금융 포커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서울연구원. 2015. 『청년예술가 실태조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 서울특별시. 2015. 『서울청년희망프로젝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 성남시. 2016. 『제7회 성남시 사회조사보고서』. 성남시
- 성남시. 2017.03,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성남시사 40년사: 제2편』. 성남시
- 수원시정연구원, 2017.01.31. 『수원시 청년정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정연구원. 2016. 『수원시 청년정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청년단체 연대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2017.09.28,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 최동선, 임언, 오석영, 정혜령, 2013,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신용정보원, 2016,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신용정보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성남비전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성남시
- DiMaggio, Paul J. & Powell, Walter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2, pp. 147-160.
- OECD. 2017. *Society at a Glance 2016: A Spotlight on Youth*. OECD

<통계자료>

OECD (201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data, they might be subject to chang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Health Status 2017,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OECD,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대학교육연구소 <http://khei-khei.tistory.com/2033>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성남시 통계. 2016. 성남통계-도표로보는성남. 성남시. http://stat.seongnam.go.kr/sn_stat/sub11_06.asp

세계보건기구 http://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

<홈페이지·인터넷 정보>

2016 청년컨퍼런스 홈페이지. www.2016wcf.com

2017 수원창업아이디어 오디션 홈페이지 <http://www.suwonstartup.kr/>

2020 희망대구 청년정책 홈페이지 “대구청년 NGO 활동지원”.
http://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menu_id=00934227

G-POP 카페. <http://cafe.daum.net/jgdusdP>

강동구 청년마루 상일동. <http://youthmaru.co.kr> /
<http://www.gangdong.go.kr/post/4000751461922293?currentPage=5&ap=B0007&bbsId=0007>

강동구 청년마루 성내동. <http://youthmaru.co.kr/>

경상북도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ide_gb&logNo=220968003279&parentCategoryNo=&categoryNo=3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광주 청년센터 The 숲. www.gjtheforest.kr / <http://saygi.com/7717> /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gnaIVZm10IJ> /
https://www.gwangju.go.kr/boardDown.do%3FboardId%3DBD_0000000417%26seq%3D280674%26fileLinkTp%3DF%26fileLinkSeq%3D1+%cd=6&hl=ko&ct=clnk&gl=kr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wangju.go.kr>

광주광역시 마인드링크 홈페이지 <http://www.mindlink.or.kr/>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gjsad.or.kr/>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http://www.gjcenter.net/>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지원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410021200>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12.21. 2017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공고.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2/boardView.do?seq=281008&menuId=gwangju0306000000&boardId=BD_0000000022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향, 2017.8.21. (재)빛고을 장학재단 장학생선발 공고.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2/boardView.do?seq=281500&menuId=gwangju0306000000&boardId=BD_0000000022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2017.3.23.[행정] 제2남도학숙, 내년 2월 문연다.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do?seq=292043&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시정뉴스, 2016.3.23 [경제] 광주시, 청년구직자에 취업프로그램 제공.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do?seq=289694&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시정뉴스, 2016.9.28 [문화] 광시, 문화콘텐츠 창작의 산실 '콘텐츠코리아 랩'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do?seq=290973&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시정뉴스,[경제] 광주시, 청년창업자금 250억 지원 2017.3.29.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do?seq=292082&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BD_0000000027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016.12.27. 자치행정국 청년인재육성과, 제3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310000000>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향, 2017.5.8. 청년 창의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2/boardView.do?seq=281322&menuId=gwangju0306000000&boardId=BD_0000000022

광주광역시청, 유망주프로젝트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u-mangju>

광주드림, 2017.1.1. 광주시 '청년일자리창출'에 400억원 투입.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0418호
 하반기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7562

광주물총축제홈페이지. <http://gj.wgf.co.kr/>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gjsec.kr/>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co/contentsView.php?pageID=artmuse030800000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itct.or.kr/main.php>

광주청년드림 공식 홈페이지 <https://gj3dreams.modoo.at/>

광주청년센터 더숲 홈페이지. <http://www.gjtheforest.kr/>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gj15886546.org/#1>

금천 청춘벨-딩.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4015027> /
<http://blog.naver.com/youthblg> / <https://www.facebook.com/youthblg>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31050001&code=620101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https://jumin.daegu.go.kr/budget/texoperate/texoperateExpenditureDbiz.do#tabs> /
www.dgyouth.kr, / <http://www.knun.net/news/article.html?no=18451>

대구광역시청 시정소식 2017.03.08. “대구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든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29707>

도킹 광주청년플랫폼. <http://www.docking.kr/app/main/index>

무중력시대 G밸리. <http://youthzone.kr/notices/746>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0952919?fileIdx=1#pdfview>

무중력시대 대방동. <http://youthzone.kr/notices/914>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일자리정보, 청년디딤돌 플랜, 청년디딤돌 카드란?
<http://www.busan.go.kr/job/young0201>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yesan.seoul.go.kr/upload/90267/751dfad9-b7e0-4beb-8c13-0926594a48e2.hwp /
<http://sygc.kr>

서울청년의회. <https://syp.parti.xyz>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seoulyg.net/info/action/>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04.10 “서울특별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시행자 공모” 서
 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203516?tr_code=snews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712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3604?tr_code=sweb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취업정장 무료대여-취업날개서비스. <http://economy.seoul.go.kr/archives/64920>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https://yesan.seoul.go.kr/upload/91416/c8a0b5d7-cb5b-477e-9aa5-59822abff4f9.pdf>

세계청년축제 홈페이지 <https://www.wyouthfestival.com/>

수원 청년 바람지대. www.swyouth.kr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0200439h>

수원시청 전통시장지원팀 2016. 11.14 영동시장 청년몰 청년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2&seq=20161114091410959

수원시청 청년여성일자리팀 2017.06.26 해외 취업아카데미 모집연장공고.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2&seq=20170626112457186

시흥시청 대야동(마을자치과) 2015.12.14 “2016년 기간제근로자(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채용계획 공
 고”
<http://www.siheung.go.kr/administration/gbpost/2016%eb%85%84-%ea%b8%b0%ea%b0%84%ec%a0%9c%ea%b7%bc%eb%a1%9c%ec%9e%90%ea%b3%a8%eb%aa%a9%ec%83%81%ea%b6%8c-%ed%99%9c%ec%84%b1%ed%99%94-%eb%a7%a4%eb%8b%88%ec%a0%80-%ec%b1%84%ec%9a%a9%ea%b3%84%ed%9a%8d>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wesc.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전주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 “(2016-49)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http://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53b598650153c5d988614d22&boardUid=9be517a74f8dee91014f9c5039cf1956&contentUid=9be517a74f8dee91014f91a62>

e980cfd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창업넷 홈페이지 <http://www.k-startup.go.kr/main.do>

창원 청년 비전센터 <http://blog.naver.com/cwvision2017>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16953> /
<http://www.nocutnews.co.kr/news/4824034>

청년허브. <https://yesan.seoul.go.kr/upload/90138/4c7c2edd-6059-40ed-abc5-2ebfa78c0088.pdf> /
<https://youthhub.kr>

청주 청년 꿈 제작소 <http://blog.naver.com/cjcityblog/221060605197> /
<http://m.cjcity.net/bbs/selectBoardDataDetail.do?bbsNo=40&nttNo=42003&keyword=&mId=1310>

충북청년희망센터. <http://young.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2727>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보도자료>

성남시청 보도자료, 2017.09.13. 「“지역상권 살리고 청년 살린다” 성남사랑상품」. 성남시청
대전광역시청 보도자료, 2017.06.09.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본격 추진. 대전광역시청.
전주시청 보도자료, 2017.09.06 「전주 원도심, 술을 통한 도시재생 모색」. 전주시청.
전주시청 보도자료, 2016.09.18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희망을!」. 전주시청.
수원시청 보도자료, 2017.02.06. 「수원의 숙’장학관 사업, 학생 404명 지원해 큰 호응」. 수원시청.

<신문기사>

경향신문, 2016.09.12. [단독] “고졸 취업률 상승”...‘어떤 일자리냐’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20600015
광주드림, 2017.3.21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접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uid=479047
내일신문, 2017.06.20, 경기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귀농 귀촌 비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http://blog.daum.net/sakgane/11656>
노컷뉴스, 2014.3.25. 서구, 외국인 유학생 무료검진. <http://www.nocutnews.co.kr/news/1210997>
뉴스원, 2016.5.22. 광주시청 청년 참여 확대... 위원회 위촉직 10% 이상
<http://news1.kr/articles/?2669065>
뉴스원, 2017.6.5 [일자리 창출-강원] 청년구직수당 1인당 90만원 지원.
<http://news1.kr/articles/?3011707>
아시아 경제, 2017.1.28. 광주시, 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성화 총력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2814351287755>
연합뉴스 “수원시, 헬조선 청년들 학자금 대출빚 갚아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116300061.HTML?input=1195m>

연합뉴스, 2017.10.08,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OECD 3번째로 높아.

<http://v.media.daum.net/v/20171008060102136?f=m&rcmd=rn>

오마이뉴스, 2016.12.11, "'노예로 안살겠다'... 말 잘 듣던 아이의 변신".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2268631

중부일보 "수원시, 파산 청년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85988>

중앙일보, 2017.09.27. 젊음이 밀천... 농촌서 창업 도전한 도시 청년들,

<http://mnews.joins.com/article/21974823#home>

한국일보, 2017.06.05,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일자리 타개.

<http://www.hankookilbo.com/v/5e034d9714914de3ae300e6764b9cf5a>

한국일보, 2017.06.05.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일자리 타개.

<http://www.hankookilbo.com/v/5e034d9714914de3ae300e6764b9cf5a>

부록: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 부록으로 제시하는 청년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평가한 197개의 청년정책을 취합한 것임
-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각 분야별로 재배치 하였음

1. 자치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지대) 발굴 및 지원	450	지하철역 주변 등 접근성이 높고, 청년활동 지원이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15년 3개→ '20년 8개설치.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부엌, 휴게카페 등 설치.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지원 '공간잇기 프로젝트'	100	지역에서 청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놀다(콘텐츠 운영 가능 공간 사업장), 나누다(대관 가능 공간 사업장)으로 나누고, 놀다에는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최대 300만원)를 지원하고 나누다에는 공간 운영자와 청년 커뮤니티를 이어주고 공간 대관료를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임'	40	지역 청년 3인 이상의 커뮤니티에 지원금을 팀당 100만원 지원. 커뮤니티 홍보와 멘토링 제공.
**청년정책위원 회 운영	7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나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임기 2년의 청년정책위원 11명을 선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함.
**청년위원회 운영	25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기 1년의 청년위원을 선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제 발굴, 조사, 의견제시, 타 청년관련 단체와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펼침. 청년정책위원회와 상호 협조.
**청년센터 'THE 숲' 운영	390	청년과 청년, 청년과 사회, 청년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으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
**청년플랫폼 '도킹'	30	지역 청년들의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플랫폼 블로그 공식 기자단 운영.
글로벌 유학생 커뮤니티 '우리동네 외국친구'	10	유학생과 교류를 원하는 최소 3인 이상의 광주청년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유학생과 공동커뮤니티 지원금(팀당 100만원), 커뮤니티 홍보, 멘토링 제공.
청년사업 파트너십 구축	40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청년 대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500~1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세부 사항은 지역

‘청년같이’		청년센터와 협의.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	시에서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위원 참여(위촉직 위원회 10%이상)을 보장. 동 단위 주민자치활동에서 청년위원 참여율 권고(필요시 청년위원의 참여비율을 관련조례에 명시하는 등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뒷받침할 예정).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청년단체가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시 보조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청년창업자에 가산점 부여.
**청년정책 평가사업	50	평가지표를 개발해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총괄 평가 병행. 결과는 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해 2018년도 청년정책 사업계획에 반영.
**청년계층 내 실태조사	50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주제로 해당 지역의 취업자, 비취업자, 니트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청년문화 실태조사	50	지역 청년 문화, 문화예술 관련 실태 조사.
청년도시 컨퍼런스 개최	100	청년당사자 회의(내용과 형식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그룹이 토론), 지방정부 회의(청년의 시민권을 주제로 생존, 자립, 일, 참여할 권리 등 정책연구와 사례발표), 해외네트워크 회의(지역 청년창업자와 해외 청년창업자 만남), 전국청년광장(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각자의 활동을 나누는 네트워킹, 청년강연 등) 배치.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치 강화	-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과 행정의 협치 강화
청년 **공동체 사업	150	청년 네트워크 구축·의제 발굴, 활동 사례 공유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공동체 교육·컨설팅 등 공동체 활동지원 추진.
대학생(청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	비예산	대학생(청년)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분야의 다양한 참여예산 도출.
청년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0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특강, 캠프, 토론회 등 시민운동을 진행.
전국청년활동가 컨퍼런스 개최	20	전문가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각종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 지역과 전국청년 활동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청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
**청년 소통 교류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1100	청년들의 참여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임과 지역 청년협의체 및 청년 지원센터 등 구성으로 청년 협력 체계 강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
**청년백서 제작	30	청년 실태조사, 청년활동, 청년정책 비전 및 사업 추진 성과 등을 백서로 제작하여 기록.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	-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청년자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2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확대	3225	청년 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지역청년공간 활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청년 **운영을 위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4189	청년의제 발굴, 정책환경개선, 청년활동 활성화와 생태계 지원, 청년활동의 확장·지속을 위한 자원 연계,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청년의 일경험 지원 및 청년정책 혁신사례 발굴 육성을 위한 청년 센터 운영.
청년정책네트워 크 운영 지원	200	청년정책 과제 발굴, 실행, 평가 등 지속적 시정참여 확대, 타운홀미팅, 청년의회 개최 등으로 정책이슈 발굴 및 사회적 참여 확대,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독립적 운영구조 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
새내기 유학생을 위한 **투어	20	지역으로 유학 온 학생을 위한 지역 탐방 프로그램 지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	200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 사업,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활동과 아이디어 공모, 미래세대 교육사업 등을 시행.

2. 일자리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2200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위해 기숙사 임대료지원과 근무환경 (휴게시설, 구내식당, 체육시설, 화장실, 사무공간, 작업시설 등)개선추진. 환경개선 총사업비 80% 지원, 기업 20% 부담.
청년 창업특례보증	2000	신청기업1개 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전용 특례보증서 발급.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300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 청년사업장 등을 발굴한 미취업 청년 20명 선정.
중소기업청년인 턴제	500	참여 기업에게 인턴1인당 월 8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전환 시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등 1인당 총 540만원을 지원. 청년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유지 지원금을 지급.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00	마을공동체 사업 중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컨설팅 할 청년마을활동가 조직.
청년여성멘토링 사업	150	청년여성 40명을 활용해 워킹맘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0938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환경개선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일자리사업.
글로벌청년취업 지원(국가직접)'K MOVE'	64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육, 설명회,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모의 자격증 경진대회, 해외 취업 박람회, 성공사례 공모전 등을 개최.
자동차R&D기획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300	자동차 R&D 분야에 특화해 기획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국가직접)	50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배출을 통해 우리 무역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역 1조 달러, 무역8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 15개월 간 총 40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총 15학점 인정.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20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학창조일자리 센터 운영(국가직접)	425	대학 내 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청년고용우수기 업 근로환경개선	420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증가 2명 이상 기업을 선정하여 휴게소, 목욕탕, 화장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 지원(자부담 10%이상).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205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출장 상담소 운영, 노동인권지킴이 교육, 노동인권강사교육 실시.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강화	903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친화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도내 산업체에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도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기관 운영. 2016년 총 입학인원 246명 중 202명 수료, 191명 취업(취업률 94.6%).
**청년+4 Trade Manager육성사 업	400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도내 거주 청년이 우수 무역인력 및 수출창업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실무 전문교육과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연계.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2000	지역 내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강연, 세미나, 교육, 네트워킹 등을 위한 창작 공간과 촬영,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3D프린터 등 장비를 지원.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멘토링 등 비즈니스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260	하계방학 중 대학생이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 실무경험습득 및 취업연계촉진. 지역대학이 기업모집, 협약체결 및 일자리 매칭 등을 수행.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600	대학생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론·현장 병행취업 지원 사업. 6월 이론수업(대학), 6월 현장실습(기업) 수료시 면접을 통해 해당기업에 채용.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10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에게 현직 공직자의 지식재능기부를 통해 진로 및 취업멘토링(Job-mentoring)실시. 도 및 도산하기관직원이 참여하여 도내대학생에게 공직수험 노하우, 업무관련사항 등 취업조언을 제공.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206	전문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취업컨설턴트 인건비(40%↓)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비(60%↑)지원.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	환경일자리 현장체험과 취업컨설팅을 지원하여 환경분야 취업 준비생의 역량제고 및 진로선택기회 제공. 미래직장현장체험 프로그램, 환경분야 직무특강·취업컨설팅,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등 운영.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4005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인턴을 선발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현장경험기회를 부여. 취업역량강화 교육, 현장체험, 세미나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홍보 및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400	직무중심의 채용문화를 선도하여 스펙쌓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실업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직무분석(기업), 직무교육(청년)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매칭추진, 참여대학 학점제연계, 고용유지율제고 관리 등 사후관리실시.
**청년[행복한 삶 만들기project] 추진	30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숨어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준비생을 위해 기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취업청년 직무능력향상[맞 춤형 교육]지원	50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후 실전업무를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열정발산! 청년취업[길거리 캐스팅]도입	10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 취업 진행.
헤드헌팅[청년인 력뱅크]운영 및 구인·구직강화	30	청년 인력뱅크제로 이력서와 스펙 등 관리. 이력과 매칭되는 구직 지원.
청년[세상밖 풍경보기!]현장체 험	50	관내 기업의 협조를 얻어 니트족이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공모사 업지원	400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실습과 직무교육 실시.
청년해외취업프 로그램 운영(일본)	429	해외 취업을 원하는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직무교육, 어학교육, 소양교육 제공.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종료 후 3개월까지 해외 취업 알선. 취업시 장려금 지급.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대책 추진	973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구성원 부양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직(창업·취업) 지원 추진.
대학생 및 청년층 인턴 사업	510	- 청년 : 공공기관 등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임시적 고용 추진 및 다양한 현장경험 실시. - 대학생 : 예비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시정 현장경험 기회 제공.
청년사업가 해외교류사업지 원	70	해외교류를 원하는 청년사업가와 해외 바이어를 1:1로 수출상담.
미래산업콘텐츠 활성화 지원	110	미래 산업 콘텐츠인 드론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드론영화제공모전진행)
지역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청년 멘토링	10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관리하도록 지원.
청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3263	지역복지관에서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
아름다운 청년!	5	청년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청년과 청년을 위해 일자리

고마운 기업! 선정 시상		창출 및 채용부문에서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시상.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청년 매니저)	17	골목상권의 공동마케팅 및 청년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골목 상권 매니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 수 추진	327	1년 이상 지역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 방학을 활용한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1일 3시간.
**일자리센터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8	지역거주 만 30세 미만 청년구직자와 지역 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직기술향상 및 취업역량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잡토크(Job talk)	3	취업준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일자리 정보, 취업특강, 멘토링 서비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층 취업지원 및 취업재충전 기회제공.
***직업능력개발 센터 운영	570	훈련실비 1일 1만원, 취업수당 20만원(1회-관련 직종 취업 시) 제공, 훈련비 전액무료, 취업지원, 해당직종 자격취득 지원 등, 직업상담사 파견을 통해 구인·구직처간 신속한 연계.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84	중업원 5명 이상 사업장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18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재산 2억원 이하인 지역민(청년층의 경우 우선선발, 소득 등 선발기준 탄력적 적용)을 채용했을 때 1인당 70만원 이내,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4대 보험, 간식비 등 포함) 지원. 수습기간 4개월을 원칙, 해당기업에서 상용직 또는 7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시 추가3개월까지 지원.
청년 취업 진로 지원 「꿈이 있는 목공학교」	6	목공지도사 3급 양성과정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청소년문화놀이터(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24	북카페, 노래방, 게임, 포켓볼 등 여러 가지 놀이가 가능해 하루 평균 170명의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주말 운영을 대학생에게 맡김.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176	성적우수 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중2~고3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성별 동성간 1:1로 매칭해 학생의 학습을 돕도록 함. 희망과목 선택(영어, 수학 등 1인 1과목), 월 16시간 이내, 학습 장소는 학생·학습도우미 상호협의(자택 등), 시간단가는 중학생 20,000원, 고등학생 25,000원.
청년프로젝트 투자정책	5000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사업비 등 지원. 총 사업예산은 2017년 50억원, 20개 팀 내외 선정.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67900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 290개 종류 일자리 5500명 선발. 월 최대 임금 171만원, 시급 8200원 생활임금 적용.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vs파트타임 선택가능. 일하는 동안 관련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연간 500시간 취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전문멘토 1:1 취업상담 등.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21244	청년 희망 디딤돌 과정(그린카정비, 조리외식 등 청년층 선호직종8개 과정327명 훈련 실시) 운영(만35세 이하 청년). 비진학 청년 위탁직업훈련 실시(일반계 고교 3학년생. 건축인테리어, 스마트웹, 앱프로그래밍 등 35개 과정 234명), 교육생 취업지원 및 진로정보 제공(커리어 코칭 실시,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 등).
**일자리+센터	837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멘토의 생생한 경험을 청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전달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민간과의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 소통기능 강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148	민간 협력을 통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협의회 운영(18개 기관. 단체참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홍보 강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약기업 확대 추진.
취업날개(정장. 서적대여)서비스	166	고교졸업예정자~34세 청년이 면접 시 정장 및 넥타이, 구두, 벨트 대여. 1회 대여시 3박 4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500	문화 콘텐츠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화와 인력양성 경쟁력 강화.
청년인턴십프로그램	625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200만원을 기업에 지원(3개월 째 100만원, 6개월째 100만원).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3개월째 30만원, 6개월 째 30만원 등 총 60만원 지급.
**청년드림사업	2500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 경제형, 청년활동 및 창작형 등 5가지 유형 일 경험 제공하고, 주 25시간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 1개월 1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지급.
**청년 NGO 활동사업	250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 활동비 지원. 시민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워크숍 개최, 시민단체, 지역대학 등을 통한 홍보 및 설명회,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SNS 홍보, 사업보고회, 사업평가 등.

3. 창업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청년 도전사업 '청년챌린저'	100	공공디자인, 문화콘텐츠/제품개발, 적정기술, 도시재생커뮤니티, 생태환경, 국제개발협력, 캠페인, 3D프린팅업사이클링, 공예 등 분야에 상관없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3인 이상의 지역 청년들의 팀에 사업비 200~1000만원과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G-NEXT (게임산업육성추진)	500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개 게임스타트업을 육성(1단계)하기 위한 게임인재 양성, 글로벌시장 진출 및 상용화 지원.
문화창조허브(**, **, **)	2500/2000/2900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위한 전주기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운영. 소통·협업·공유를 위한 개방형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 아이디어·사업화·투자유치까지 창업전주기 맞춤형 지원.
대학창조일자리 센터 사업	5800	도내 거주 청년의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하여 청년 고용의 전달체 역할 수행. 진로지도 강화, 취업준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정보 제공 등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기능의 원스톱 창구.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 지원	550	e-커머스 분야 창업을 지원하여 국내 제품의 해외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여 청년창업 촉진 및 일자리창출 유도. 법인설립·세무·소фф물 입점 등 창업 자금 지원, 기본교육·멘토링·컨설팅 등 사업역량 강화 지원, 공동 작업공간 등 사무 공간 제공, 해외 배송료·소모품품 지원, 외국어 번역, 24시간 판매자 긴급 지원 서비스 등 해외 수출 맞춤형 지원.
***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850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보유한 자원과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대학생에 맞춤형 기술창업을 지원. 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을 유도, 창업지원금,

		창업관련 교육·캠프·특강을 제공하고, 전담지도·멘토링, 네트워킹, 창업공간 등을 지원.
청년창업 SMART 2030	1091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프로그램, 사업비 및 공간 등을 지원. 창업기본교육,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킹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창업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초기사업비 지급('17년 총 지원액 6.6억원), 문화 창조허브의 예비창업자 협업 공간 및 사업자등록 주소지(가상오피스)등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550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성 있는 청년 상인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를 도모.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간판·매대 제작지원, 인테리어 및 냉·난방공사와 재료비 등 지원. 인프라 조성·보수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점포 특성화·판매 강화 마케팅 비용 지원, 점포 운영·경영노하우 등 전문 컨설팅 및 인건비 지원.
청년상상놀이터 운영	300	저성장, 저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아이템 현실화), 이후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 지원.
전통시장 청년 상인점포 개설 지원	300	전통시장에 위치할 모든 종류의 청년 창업을 지원(유흥, 사치, 투기 업종 제외).
**시장 청년몰 조성	1350	전통시장 내 청년몰 입주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 임차비용과 운영비,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함.
청년창업 푸드트럭 추진	300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푸드트럭 지원.
도시재생 챌린지숍 운영	100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에 도시재생 챌린지숍 창업을 지원. 창업점포(40평 이내)당 임대료 60%(1백만원 한도 내) 12개월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홍보 지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검토.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사업	2700	콘텐츠 창작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예비 창업자 지원. 콘텐츠플레이어 스튜디오: 사업화와 연관된 미디어 창작교육 및 제작 지원.
**문화창조 허브 지원사업	2500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및 학습공간 제공,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창업경연대회 개최	452	창업아이템 제작비 차등 지원, 전문가 자문, 세미나 공간제공 등 창업지원프로그램 종합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시장)	200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 창업 역량강화 교육, 교육 수료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장 내 점포 입점 자격 부여하고,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점포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21	20~30대 청년층 중 참신한 창업 아이템 보유자(연 250팀)에 대한 창업이행단계별 성과에 기반한 차별화 된 지원 추진. 창업공간, 교육·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마케팅 등 지원.
**야시장 조성	-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야시장 운영시설 및 야시장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원.

**청년창업펀드 결성, 운영	1000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와 연계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2000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소규모 창업가능분야의 예비창업자 선정, 창업지원(자금지원, 창업공간 무상 제공, 창업활동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창업선도 대학지원(국가직 접)	100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사업고도화 자금, 창업교육 등을 지원.
혁신형 창업자 발굴을 위한 [2016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개최	60	제조 및 지식서비스 창업, 사회적 기업 창업 2개 분야로 나눠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개최(대상 500만원 상금). 6개월 이내 창업 시 예산 범위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2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공공데이터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했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창업 (예정)자를 시상하고 후속지원.
차세대 육성CEO 양성교육	11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차세대 CEO로 양성함. 장학금과 학점(2~3학점) 부여.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1700	차세대 콘텐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융합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발전소 등 사업화 지원.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1400	애니메이션 제작지원(과제별 1억원 내외, 공간지원, 제작지원), 웹툰 제작 지원(과제별 5천만원 내외, 제작 공간 무상지원), 캐릭터 상품 화제작 지원(과제별 4천만원 내외, 제작 공간 무상지원).

4. 복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청년건강권보장	150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	25	외국인 신입생에 대해 각 대학과 보건소, 의료단체와 연계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흉부 엑스레이촬영, 간염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	8478	장애청년 사회진출 확대 지원.
장애청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30	장애청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자립지원사업	1755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전문적인 자립능력 향상 지원. 자립을 위한 기본능력 습득·사전연습 및 지속적 사후관리 제공, 만 18세에 도달하여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일시 지급.

청!심!환(청년심 신안정환경) 프로그램 운영	27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취업, 주거, 부채 및 생활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심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년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지원.
희망두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247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 지원을 통해 1천만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취약청년자립기반 조성.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3688	만 18~3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2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2% 수준) 청년에게 저축목적(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 조성.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의 비율로 매칭.
군(軍)지역사회복 지 활성화 “군 입영설명회”	30	군 입영설명회, 군 입영 관련 심리치료 및 상담, 예비 입영자를 위한 군 인권 학교, 예비 입영자를 위한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입영설명회(입영설명, 군 인권, 건강한 병영 문화 등).
청년사회진출지 원사업	3138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만 18~3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3개월 지급. 이 중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3개월 이상 유지한 청년에게는 20만원 추가 지원.
청년활동지원사 업 확대추진	1500	19~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을 2~6개월 간 월 50만원 이내 지원. 이행 의무 부과.
청년취업패스제 도(청년취업희망 카드)	10800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자(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내) 6000명에게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
청년수당_**청년 디딤돌카드		만 18~34세 졸업 예정자와 구직청년으로 중위소득 35~80%이하 2000명에게 연간 240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
청년복지카드		15~39세 청년 근로자, 근로자 3명~99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된 현장근로자, 연봉 3천만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100만원 지급.
일자리 구직활동 수당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졸업학년 및 휴학생),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생, 창업기업 내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종사자, 취창업 교육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3개월 간 총 9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300	2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6만원씩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발급.
청년구직지원금		실업과 취업준비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의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청년 1200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 취업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 촉진. 매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역 청년 1200명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간 카드(청년카드)를 통해 사후지원 .
**의 미래에 투자 [청년배당]	11290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대학(원)생 학자금 이차지원	100	학생이 부담하는 '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2.5%(6개월분) 지원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일반상환학자금 대출('17년1학기) 받은 대학생 대상.
*** 장학재단 및 로스쿨 장학금	200	지역 소재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금액 :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5만원

지원		선발 내용 : 학업장료, 전학년 예체능 특기, 생계곤란, 이사장 추천 장학생(세부선발기준별도).
*** 학자금 이자 지원	827	도내 대학생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이자를 지원.
희년(jubilee) [청년부채탕감] 사업추진	기금후 원 등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39세 이하 대학생과 졸업생의 부채 탕감을 위해 민간 기금 조성 범시민운동 진행.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800	자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 지역의 정주성을 찾고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청년안심희망대출] ***보증인제 실시	비예산	지역은행 및 향토저축은행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빈곤청년을 구제하며 자산형성에 기회를 부여.
**청년 [보통의 행복한 삶] 회복사업	600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소액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및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400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학기별 이자발생액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143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와 다자녀 가구) 대출 대학생은 이자 전액 지원. 일반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대출 대학생은 차등지원.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603	만 40세 미만의 신용회복지원자로서 채무조정 변제금을 9회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에게 1천만원 이내의 주거비, 의료비, 학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일하는 청년 통장	11460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영하여 취업·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 참가자가 3년 간 근로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도 지원금·민간기부금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을 적립.
**청년 인권보호 마스터플랜 구축	40	「인권센터」에서 청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청년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호.
출산장려금 지원	1625	첫째 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의 55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5. 주거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학숙 운영지원	860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유학 간 지역 출신 대학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기숙사비 월 15만원.
제 2 **학숙 건립추진	16050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유학 간 지역 출신 대학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기숙사비 월 15만원.
BABY 2+ **하우스	985	청년층 주거비를 완화하고 육아 편의를 제공하는 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33㎡→44㎡), 공동육아 등 입주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추진. 2020년까지 총 1만호 중 신혼부부에 7천호,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 등에 3천호를 공급 예정.
** 학사 운영	330	도내 거주 성적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기숙사 일부를 활용, 입사를 지원하여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
** 기숙사 사업	14973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안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재 육성. 옛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청년기숙사로 활용, 월 이용료, 식비 등을 저렴하게 책정해 청년 주거비 경감(입사정원 278명, 도민 자녀는 선발시 가점).
청년 공유기숙사		학교와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셰어하우스 형태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가칭) 공유기숙사 공급 추진. 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에 임대, 대학교는 기숙사 운영·관리기관으로 입주자 선정·임대로 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직접 관리 *도내 학생에게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제공.
민·관협력 [**의숙] 장학관 사업	80	지역에 사는 대학(원)생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전국의 대학생 중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는 청년 주거 사업.
**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공급으로 젊은 계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시민주거안정을 통해 주거복지문화 향상에 기여.
**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5226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공급으로 젊은 계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시민주거안정을 통해 주거복지문화 향상에 기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지원	25232	공공임대 : 임대료 60~80% 이하(분양전환 없는 임대주택) 민간임대 : 임대료 90% 이하(8년간 임대주택 유지 후 사업주가 분양으로 전환가능), 임대주택 단지 내 청년 맞춤형 커뮤니티 조성 '청년마을', 글로벌 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한 청년 활동시설 조성, 나눔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 대수의 10%정도를 확보하여 설치.
넓은 고시원, 여관, 모텔 리모델링	11000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6~10년간 주변시세의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8468	1인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 이상은 100%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 토지 매입자금을 공사에 출자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 후 장기 임대, 입주자 모집.
대학생 희망하우징	-	대학생, 전문대생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주변시세의 20~30% 수준인 6~30만원 대 저렴한 월세를 내고 거주(관리비 별도). 수도권 외 지역출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선발 우선권을 부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780	빈집 리모델링 소요비용의50% (4천만원 한도)시 예산 보조, 나머지50%는 사업자가 부담(집주인 부담은 없음). 적용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방3개 이상).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동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70~100%). 임대 조건은 시세 80%이하, 거주기간 6년 보장.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250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지역소재 대학교(대학원)재학 및 휴학생(사이버대학생 제외)을 연결시켜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1개의 방 임대. 임대료는 시세 보다 저렴(월20~30만원 내외). 임대기간은 기본 6개월(1학기), 연장가능. 환경개선 공사 1실 당 1백만원 이내 지원.
자치구 맞춤형		공급량의 30% 이내. 연간 200호(다가구형 100호, 원룸형 100호),

공동체 주택공급		3순위(소득 70%이하)에 한하여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입주자 별도 선정.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800	만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지역청년 중 취업준비생, 만 2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첫 취업 후 5년 이내,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결혼 후 5년 이내, 세대주가 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주택보증금 지원.
청년임차인보호 [보금자리 지킴이] 추진	20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청년임차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경제적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

6. 교육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중국비즈니스 스쿨 운영	100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4개월(국내교육 1개월, 국내인턴 1개월, 해외인턴 4개월)간 중국비즈니스 어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국내 교육비, 해외 체류비, 체제비).
예비청소년지도 사 발굴, 육성	50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발굴, 육성하여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에 배치.
글로벌 창의역량강화	100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58	지역 사회적 경제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도시재생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전주시 대학생들이 원도시 노후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교육과 현장학습, 활동실비 지원.
***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100	120개 팀의 대학생 지식 멘토가 학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
농촌지도인프라 구축지원(전문능 력개발)	160	농촌 청소년에게 선진농장 벤치마킹 및 과제활동을 제공하여 농업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후계 세대를 육성.
농촌지도인프라 구축지원(후계농 업인력양성)	550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11개소에서 추진. 신기술·창의적 아이디어를 융·복합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자율 공모(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영상아카데미		도내 청년에게 영상제작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관련 직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 이론교육, 영상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 취업용 포트폴리오 제작이 필요한 수료생들에게는 촬영장비, 편집장비와 영상스튜디오 편집 공간 등을 제공(도 보유 장비·인력 활용).
내일의 리더만들기	20	창조적인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통섭형 리더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계층 별 [맞춤형 탄탄교육]	미정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사업 추진. 인생학교 운영으로 인생을 살면서 부딪치는 문제해결에 대한 훈련 진행. 다문화 및 탈북청년 프로그램과 다문화 및 탈북청년위원회 구성.
이주배경(다문화)	25	다문화 청년의 취업을 위한 기초 실력 다지기 및 진로탐색 활동을

청년 기술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		실시하고, 전문기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
후기청소년 역량강화사업	14	진로 토크콘서트, 대학생 진로 멘토단 등 후기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대학생 진로멘토단 [꿈나르사]	7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진로 특강, 청소년 진로 기획 활동, 대외활동(공모전) 참여.
청년이 만드는 청춘대학 '버킷캠퍼스' 운영	50	학과 당 2회에 걸쳐 원하는 분야의 멘토링 수업 제공. 총 13개 학과, 학과 당 50만원의 관리비 지급.

7. 문화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 내용
청년 체육인재 육성	1100	우수한 지역 육상선수의 역외유출방지 등을 위한 지역육성 관리 정책.
장애인 청년체육인재 육성	100	장애인 청년 체육인에 대한 훈련비 지원.
지역청년문화예 술인 쿼터제	100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에 청년 쿼터를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세계청년축제	300	6일간 세계 청년축제 운영.
**버스킹 운영	300	길거리 공연 지원.
** 물총축제	50	물총싸움, 난장수트릿공연, 패션쇼가 포함된 물총축제 개최.
*-POP페스티벌 개최	100	전국 남녀 27세 이하(외국인 포함)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지역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참여 자격 부여, 방송 기획 참여 기회 부여.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유망주프로젝트'	130	만 19~35세 미만의 청년문화기획자에게 실무교육, 현장멘토링, 공동프로젝트 기획/실행, 배움여행, 네트워크포럼 등을 지원 제공.
청년창의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콘텐츠 킹'	100	축제기획콘텐츠, 문화예술제작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지원금, 맞춤형 멘토링, 콘텐츠 홍보, 해당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문화공간조성(청 년문화창작소 운영)	973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창작을 위한 문화공간 운영. 옛 시설을 활용하여 입주 스튜디오, 디자인 랩, 공방, 펍(Fab)카페 등 시설 운영. 창업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AFTER YOU,	기부 및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외 대학

아주희망 프로그램 사업참여 지원	모금	집중연수와 문화체험을 시행.
**대 부지 [청년(시민)휴식 공간] 조성	협약 후 편성	청년문화 및 예술 창작소를 조성. 사회동호인 야구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청년아티스트 나르사] 프로그램	267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여 유능한 청년 예술가를 양성하며 청년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 개최 및 활기찬 청년문화·소통기반 조성으로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 도모.
** [청년특구] 조성사업	67	청년문화를 위해 청년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해 청년 거리조성, 경제 활성화 청년특구 조성,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진행.
**문화예술지원 사업	45	청년문화 지원 사업 공모. · 청년문화프로젝트 : 청년이 지역에서 기획하는 모든 프로젝트 · 청년캠프 :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획, 프로젝트 성장 지원.
**청년작가전 [아트마켓-아트 로드]	73	지역청년작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아트마켓 사업.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직·간접적으로 고양하고 작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의 미술문화 허브.
** 청년작가공모전 [신진작가전]	-	젊은 작가를 발굴·지원하여 미술계의 중견 및 중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작가를 선정하여 개인전 개최, 작품매입을 통한 창작욕구 증진 및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7500	연극, 무용, 음악 등 22건 약 3억원의 창작지원금 지급. 무용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장비, 멘토링, 홍보활동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185	미술, 연극, 음악 등 분야의 지역청년 예술인에게 6개월 간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인 초청강연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 전시 공연 활동 지원.